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간하며

서울은 2,000년 역사를 가진 고도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로서 지금까지 격동의 발전기를 겪어왔습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서울의 위상은 글로벌 대도시로 높아지면서 뒤따라가는 도시에서 앞서 나가는 도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이러한 큰 변화 뒤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주택, 공원,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서울시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을 1990년 이후 3번에 걸쳐 수립하였고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체계를 재구성하였고, 계획수립과정에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인 「서울플랜」은 전 세계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계획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플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시민이 주도가 된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설계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가 주도하여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면, 이번에는 시민이 바라는 미래상이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이 시민의 도우미 역할을 기꺼이 해 주셨습니다. 서울의 미래예측과 도시발전의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고 정리해 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많은 사람이 함께 공감대를 가지는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시민분들이 계획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미래와 주요한 이슈를 설정하고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서울플랜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장이 바뀌거나 정치적 여건이 변한다고 해서 쉽게 바뀔 계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아가 과거보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계획문화가 형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을 지는 진정성을 가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단순하게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실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담당부처인 도시계획국 뿐 아니라 기획조정실을 포함하여 서울시 전체 실·국·본부·과 함께 참여하여 계획의 정합성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플랜이 원래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획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여건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마련한 것이 이번 서울플랜의 특징입니다.

시민참여형 서울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아주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많은 우려도 있었고, 일이 진행되면서 여러 번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수립에 참여한 시민, 전문가, 시의회,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서울연구원 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사람의 중요함, 함께 한다는 것, 공감하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2030 서울플랜」은 21세기 새로운 계획문화를 시도하는 상징입니다. 거창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처음이어서 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겪었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더 나은 서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은 이제 소통과 배려를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금번 「2030 서울플랜」을 수립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서울시의회, 전문가,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공무원, 서울연구원 연구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4월

서울특별시장 

# 목 차

---

<b>제1장 2030 서울플랜의 개요</b>	<b>1</b>
제1절 서울플랜이란?	3
제2절 서울플랜의 수립배경	8
제3절 서울플랜의 수립방향과 특징	10
제4절 서울플랜의 수립과정 및 추진체계	13
 <b>제2장 2030 서울의 미래상</b>	 <b>17</b>
제1절 서울의 변화진단	19
제2절 미래상과 계획과제	26
 <b>제3장 핵심이슈별 계획</b>	 <b>33</b>
핵심이슈 1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37
핵심이슈 2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62
핵심이슈 3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78
핵심이슈 4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93
핵심이슈 5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	112



<b>제4장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b>	<b>135</b>
제1절 공간구조 구상	137
제2절 토지이용계획	157
<b>제5장 생활권계획</b>	<b>167</b>
제1절 생활권계획의 개요	169
제2절 생활권의 구분 및 설정	172
제3절 권역별 구상	173
<b>제6장 계획의 실현</b>	<b>195</b>
제1절 계획체계 조정·보완	197
제2절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199
제3절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강화	203
제4절 재원 투입의 원칙과 방향	205
<b>부록 계획단계별 참여진</b>	<b>207</b>

# 표 목 차

---

<표 1-1> 2030 서울플랜 계획서의 구성 및 활용 .....	5
<표 1-2> 2000년 이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변천 .....	8
<표 1-3>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2009~2013) .....	13
<표 1-4> 계획 수립과정별 계획참여 주체의 주요역할 및 내용 .....	15
<표 1-5> 계획단계별 MP단의 역할 .....	16
<표 2-1> 전국 대비 서울시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현황 .....	23
<표 2-2>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개요 .....	27
<표 3-1> 핵심이슈별 목표와 전략 .....	36
<표 3-2> 핵심이슈 1의 주요지표 .....	39
<표 3-3> 핵심이슈 2의 주요지표 .....	64
<표 3-4> 핵심이슈 3의 주요지표 .....	79
<표 3-5> 주요 문화자원 밀집지역 .....	91
<표 3-6> 핵심이슈 4의 주요지표 .....	95
<표 3-7> 핵심이슈 5의 주요지표 .....	114
<표 3-8>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 .....	130
<표 3-9>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현황 .....	131
<표 4-1> 지표로 본 권역생활권별 격차 현황 .....	138
<표 4-2> 3대 도심의 특성 및 육성방향 .....	143
<표 4-3> 7대 광역중심의 특성 및 육성방향 .....	144
<표 4-4> 12대 지역중심의 특성 및 육성방향 .....	145
<표 4-5> 지구중심 조정 기준 .....	146
<표 4-6>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서울플랜 중심지체계 .....	146
<표 4-7>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 .....	158
<표 4-8> 자연녹지지역 중 용도지역 변경 검토 지역 .....	166
<표 5-1> 생활권계획의 구성 및 주요내용 .....	171
<표 6-1> 핵심이슈별 주요지표 .....	200



# 그림 목 차

---

<그림 1-1> 서울플랜의 위상 .....	6
<그림 1-2> 2030 서울플랜 수립방향 .....	10
<그림 1-3> 2030 서울플랜 구성 .....	11
<그림 1-4> 2030 서울플랜의 모니터링 상시계획체계 .....	12
<그림 1-5> 시민참여형 서울플랜의 수립과정 .....	14
<그림 1-6> 2030 서울플랜의 추진체계 .....	16
<그림 2-1> 3차원 지형도 .....	19
<그림 2-2> 서울의 지형도 .....	19
<그림 2-3> 서울의 도시형태의 변화 .....	20
<그림 2-4> 서울의 인구 변화 .....	21
<그림 2-5> 서울의 인구밀도 변화 .....	21
<그림 2-6>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변화 추이 .....	22
<그림 2-7> 서울시 1·2인 가구 추이 및 추계 .....	22
<그림 2-8> 시민참여단의 미래상 설정과정 .....	26
<그림 2-9> 미래상 설정과정 .....	28
<그림 2-10> 시민참여단이 선정한 계획과제와 핵심이슈분과 구성 .....	31
<그림 3-1> 핵심이슈 선정과정 .....	35
<그림 3-2> 도심권 문화자원 분포 현황 .....	92
<그림 3-3> 서북권 문화자원 분포 현황 .....	92
<그림 3-4> 동북권 문화자원 분포 현황 .....	92
<그림 3-5> 서남권 문화자원 분포 현황 .....	92
<그림 3-6> 동남권 문화자원 분포 현황 .....	92
<그림 3-7>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의 공원 확충 구상 .....	97
<그림 3-8> 녹지축을 연결한 그린네트워크 구축 체계 .....	100
<그림 3-9> 주민의 부담능력에 맞는 주택공급 개념도 .....	129
<그림 3-10> 커뮤니티 기반의 노인주거복지정책 .....	132
<그림 4-1> 소통과 배려의 공간구조 .....	139
<그림 4-2> 서울의 기본골격 .....	140

<그림 4-3> 중심지간의 연계 및 인접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축 설정 .....	141
<그림 4-4> 2030 서울플랜 중심지체계 .....	142
<그림 4-5> 광역교통축 구상 .....	148
<그림 4-6> 녹지축 구상 .....	149
<그림 4-7> 서울 도시기본구상도 .....	156
<그림 5-1> 생활권 구분(5개 권역) .....	172
<그림 5-2> 도심권 발전구상 .....	176
<그림 5-3> 동북권 발전구상 .....	180
<그림 5-4> 서북권 발전구상 .....	184
<그림 5-5> 서남권 발전구상 .....	189
<그림 5-6> 동남권 발전구상 .....	193
<그림 6-1> 도시기본계획 실현체계 강화 .....	198
<그림 6-2>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과 환류과정 .....	201
<그림 6-3>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및 공개 .....	202
<그림 6-4> 계획별 관련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	204



## 제1장 2030 서울플랜의 개요



## 제1절 | 서울플랜이란?

### 1. 2030 서울플랜의 의미

- 서울플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의미를 담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별칭임.
-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은 서울 대도시만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틀, 여건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한계, 부문계획을 나열식으로 종합한 방대한 보고서 등의 쟁점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들어서는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획주체가 실제로 계획에 참여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sup>1)</sup>의 틀 하에서,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 계획 위상 등을 대도시 서울에 맞게 구성하여 ‘서울플랜’이라는 별칭 하에 도시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함.
- 2030 서울플랜은 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수립되었고, 핵심이슈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적 성격을 보완하였으며, 도시계획국과 기획조정실이 주체가 되어 계획의 위상을 제고하였음.

####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은 198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인해 법정화 되었으며, 수립목적은 토지의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임. 도시기본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20년 후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장기적인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임.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련·하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과 타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이 기본계획과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침적 역할을 하는 법정 최상위계획의 위상을 가짐.

도시기본계획은 사회·경제, 환경·에너지, 교통·기반시설, 문화·복지 등 도시 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행정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계획임.

1) 국토교통부 훈령 제45호

## 2. 계획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0년, 목표연도 2030년

- 계획의 기준연도는 2010년 기준으로 하여 서울의 인구, 산업, 경제, 환경, 교통, 주택 등 부문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을 비롯한 분야별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지표를 설정함.<sup>2)</sup>
- 계획의 목표연도는 수립지침에 따라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 후인 2030년으로 설정함.

### 2) 공간적 범위 : 도시계획구역 605.96km<sup>2</sup>

-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전체로 하며, 면적은 605.96km<sup>2</sup>임.
- 계획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현황 및 여건분석과 공간구조 개편구상에서는 서울과 주변의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서울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함.

### 3) 내용적 범위

-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의 미래상 제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제 도출
- 둘째, 계획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핵심이슈를 도출하고, 이슈별 목표와 전략 등이 포함된 핵심이슈별 계획 수립<sup>3)</sup>
- 셋째, 미래상과 핵심이슈별 계획을 공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간구조 개편과 토지이용계획 제시
- 넷째,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생활권계획의 권역별 구상 제시
- 다섯째,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상시모니터링체계,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 재정투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

2) 분야별 현황분석은 계획의 기준연도인 2010년을 기준으로 하되, 계획지표 등 일부 현황은 2010년 이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3) 기존의 부문별 계획과 정책은 핵심이슈별 계획 내용에 부합하게 통합되어 제시됨.

#### 4) 계획서의 구성

- 2030 서울플랜의 보고서는 도시기본계획서의 성격인 ‘본보고서’와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계획수립과정, 의견수렴결과, 핵심이슈별 계획을 부문별로 재구성한 참고자료 등을 수록한 ‘자료집’으로 구성됨.
- 자료집은 기초현황 및 계획수립과정 등을 기술한 조사보고서와 핵심이슈별 계획을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재구성한 부문별계획으로 구성됨.
- 2030 서울플랜은 본보고서를 기준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자료집(조사보고서 및 부문별계획으로 재구조화한 보고서)은 참고자료로서 활용함.

〈표 1-1〉 2030 서울플랜 계획서의 구성 및 활용

구분	내용의 구성	운용 및 활용방안
본보고서	· 미래상, 공간구조, 핵심이슈별 계획, 생활권계획, 실현방안 등을 수록	· 2030 서울플랜의 실질적 계획서
자료집 1 조사보고서	· 기초현황 분석, 관련계획 및 해외사례 검토, 계획수립과정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서울플랜 수립의 기초자료
자료집 2 부문별계획으로 재구조화한 보고서	· 핵심이슈별 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부문별로 재구성	· 핵심이슈별 계획의 실행을 위한 연구 및 참고자료로 활용

### 3. 서울플랜의 위상 및 역할

#### 서울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

- 도시기본계획은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에 관련된 각 분야의 부문별 계획과 정책에 우선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모든 부문별 계획과 정책을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을 통하여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임.<sup>4)</sup>
- 서울플랜은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 교통, 공원녹지 등 물리적인 공간 부문과 사회·경제 및 복지·교육 등 비물리적인 분야를 포함한 종합계획적 성격을 가짐. 서울플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정책의 전 분야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부여가 필요하며, 이 때문에 서울플랜에 서울시의 최상위계획적 위상이 부여됨.
- 서울플랜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개발 및 보전 계획의 기본이 되며, 경제·산업, 주택, 교통·기반시설, 환경·에너지, 사회·문화·복지 등 부문별 법정계획과 시정운영계획 등 서울시 모든 계획 수립 시 기본이 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그림 1-1〉 서울플랜의 위상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20년 후 도시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

- 서울플랜은 20년 후의 모습을 내다보고 서울의 시대상과 가치를 담은 미래상과 발전방향의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임.
-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은 인구구조, 사회·경제적 여건, 기후변화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산업구조, 주택 및 시가지 변화 등 주요 부문에 대한 기초현황분석과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함.
-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서울플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재정비 절차를 거쳐야 함.

## 미래상과 핵심이슈를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으로 실현화하는 공간계획

- 서울플랜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설정한 핵심이슈별 계획을 공간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실현화하는 계획임. 따라서 서울플랜은 미래상과 핵심이슈별 계획을 반영하는 도시공간구조 설정, 이와 연계된 토지이용의 원칙과 방향 제시, 생활권단위의 발전방향 및 계획과제 제시 등 공간계획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특징을 가짐.
- 각 분야의 부문별 정책과 계획을 공간차원에서 통합하고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입지활용과 토지이용을 규제 및 유도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을 도모함.

##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강조한 전략적 계획

- 저성장 기조의 지속, 재정투입에 대한 수요증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시민요구에 등 공공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렇게 늘어나는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서울플랜은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복수의 행정 분야를 융합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와 합의과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중점전략을 설정함.

## 제2절 | 서울플랜의 수립배경

###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 도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도시기본계획의 정비)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법정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현 시점에서 2006년에 확정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의 수정·보완이 요구됨.<sup>5)</sup>
- 서울도시기본계획은 1981년 도시기본계획이 법정화된 이후 1990년(목표연도 2000년)에 최초로 수립되었으며, 1997년과 2006년에 실시한 두 번의 재정비까지 총 3회에 걸쳐 법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이번 2030 서울플랜은 공식적으로 4번째 수립되는 법정계획임.

〈표 1-2〉 2000년 이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변천

계획명	2000년대를 향한 서울도시기본계획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2000년	2011년	2020년
수립년도	1990년	1997년	2006년
미래상	통일한국의 수도 태평양시대의 중추도시 시민을 위한 도시	인간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도시 서울
계획기조	국제화, 광역화, 정보화 참여, 거주지 질	시민본위, 인간중심	치유와 회복
계획배경 및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남북 균형발전</li> <li>다핵도시로 개편</li> <li>도시철도망(13개 노선)과 도시고속도로망 계획</li> <li>1도심-5부도심-59지구중심</li> </ul> ※최초의 법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0년 계획의 수정·보완</li> <li>지방자치 시대 도래</li> <li>자치구계획의 수립 및 반영</li> <li>상암, 용산, 독섬, 마곡지구 개발 구상</li> <li>1도심-4부도심-11지역중심 -54지구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 계획의 수정·보완</li> <li>IMF 이후 여건변화 반영</li> <li>행정수도이전 대응, 청계천 복원 등 반영</li> <li>GB 우선해제 변경 반영</li> <li>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 -53지구중심</li> </ul>
계획서			

5)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05년 12월 12일자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득하여 2006년 4월 27일 확정공고 되었음(서울특별시 공고 제2006-665호).



##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 제도적 변화

- 2009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계획수립 자율권이 확대됨. 서울시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서울의 특성과 시정의 방향을 2030 서울플랜에 적극 반영할 수 있어 계획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즉,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부문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되,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핵심이슈 중심 전략계획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됨.
- 2030 서울플랜은 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제도의 변화에 맞추어 서울시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계획체제로 전면 개편함. 이에 따라 서울플랜은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부문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되, 수립방식과 계획의 편제 등은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함.
-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적 성격을 강화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계획서를 서술하였으며, 자치구 및 수도권 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한 광역거버넌스를 강조하여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역사문화도시인 서울의 특성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

## 시민참여와 공유사회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실현을 위한 요구

- 2011년 작성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은 시민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 협의, 자치구 설명회 등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계획여건의 변화로 계획내용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
-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행정과 전문가 위주에서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절차 강화, 둘째, 공유혁신·상생·융복합 등 미래가치의 강조,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등 계획여건의 변화임.
- 2030 서울플랜은 실질적인 시민참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서울시 모든 실·국·본부의 참여를 통해 사람중심의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음. 또한, 도시공간의 물리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역사문화 등 시정 전 부문을 아우르는 서울시 최상위계획으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을 개편함.

## 제3절 | 서울플랜의 수립방향과 특징

### 1. 서울플랜의 수립방향

- 서울플랜은 절차적 시민참여 및 실현성 미흡 등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을 개편함. 서울플랜의 수립방향은 ‘사람중심의 계획’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첫째,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초기부터 확정 단계까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 과정 설계
- 둘째, 대도시 서울의 특성과 시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의 구성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고 계획서를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
- 셋째, 최상위계획으로서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서울플랜과 서울시 살·국·본부 계획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
- 넷째, 도시기본계획의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지역단위의 생활밀착형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적 기반을 제시하여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추구
- 다섯째, 계획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 및 중심지계획 등을 통한 후속조치의 추진, 모니터링체계 운영, 자치구 및 수도권 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재정투입의 원칙 마련 등을 제시



〈그림 1-2〉 2030 서울플랜 수립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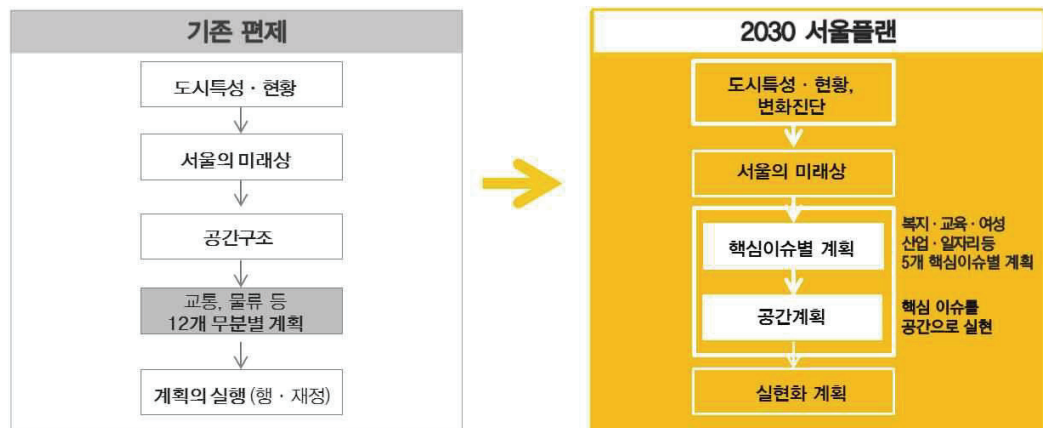
## 2. 서울플랜의 특징

### 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수립

- 서울플랜이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이를 위해 시민이 계획 초기부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미래상 및 계획과제 등을 도출하고 핵심이슈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등 행정,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였음.
- 2030 서울플랜은 시민합의에 의한 미래서울의 가치와 이슈별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계획의 성격을 강화함.

### 이슈 중심의 목표지향적 전략계획 수립

- 기존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12개의 부문별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계획 간 연계 및 정합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 2030 서울플랜은 서울의 미래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함. 종전의 12개 부문별 계획을 5개 핵심이슈와 17개의 목표로 간소화하여 분량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서술함.



〈그림 1-3〉 2030 서울플랜 구성

### 서울시 전 부서의 협력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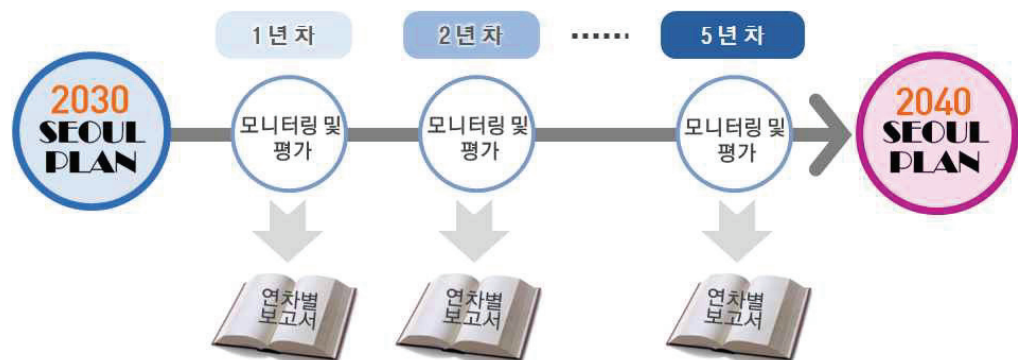
-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국 주도의 공간·물리적 계획 중심으로 수립되었음. 2030 서울플랜은 공간·물리적 계획과 더불어 복지·교육·역사문화·환경 등 비물리적 계획의 성격을 강화하고, 계획의 전 과정에서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도시계획국 주도로 서울시 전 살·국본부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울시 최상위계획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생활권계획 역할 및 기능 강화

- 그동안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양적·외형적 성장과 도시경쟁력 강화 위주의 계획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음. 또한 지역 균형발전이 상당기간 동안 시정의 핵심과제였으나,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2030 서울플랜에서는 서울시 전체 차원의 계획부터 시민의 삶을 담는 계획까지 정교하고 일관된 100년 도시계획체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간구조 개편과 생활권계획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함.

##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운영

- 2030 서울플랜은 계획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도록 함. 핵심이슈 및 목표별 주요지표를 설정하여 매년 계획의 달성정도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등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 및 평가를 통해 후속계획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시계획체계를 마련함.



〈그림 1-4〉 2030 서울플랜의 모니터링 상시계획체계

## 제4절 | 서울플랜의 수립과정 및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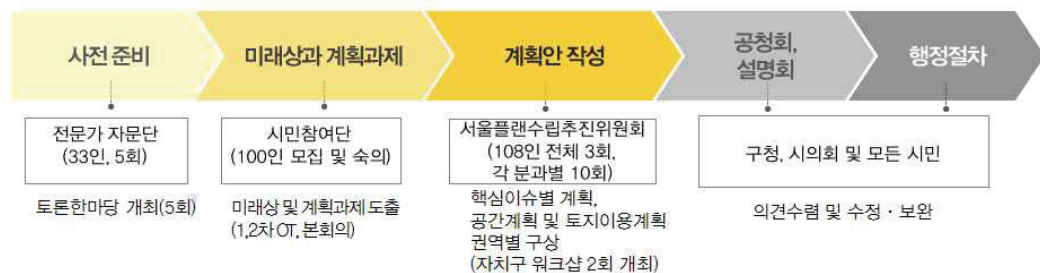
### 1. 서울플랜의 수립과정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09년 1월에 착수되었고 그해 2월 승인권이 서울시로 이양된 후 전략계획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됨. 서울시는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 특성에 맞는 계획의 편제, 전략적 계획의 성격과 위상, 미래상에 관한 이슈 등을 계획초기에 논의하였음.
- 2010년 5월 서울시 전체이슈와 자치구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자치구 의견수렴, 분야별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함. 작성된 계획안은 서울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되었고, 2011년 5월 자치구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발표됨.

〈표 1-3〉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2009~2013)

2009.	1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착수
	2~9월	기초연구, 계획편제 구상, 미래상 논의
	8~11월	시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8월~11월), 자치구 의견수렴(9월)
2010.	1~2011.2월	계획(안) 작성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2011.	4~5월	기자설명회(4.5), 자치구 설명회(4.14~20), 공청회(5.13)
	6~7월	전문가토론회(2회), 관련부서 의견수렴(국토부, 자치구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의견수렴
	8~10월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검토
2012.	~7월	기본계획 개편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
	8~10월	시민참여단 모집 및 미래상과 계획과제 도출
	11월~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3.	3월	자치구 워크숍(1차 3.18, 2차 7.15~17)
	3~8월	계획(안) 작성
	9월	서울플랜(안) 마련, 기자설명회 개최(9.26)
	10월~	자치구 설명회, 공청회, 국토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2.26)

- 2011년 5월 도시기본계획 발표과정에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수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자치구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시민단체 설명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였음. 다양한 의견수렴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참여와 합의과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정 및 계획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추진됨.
- 2011년 12월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강화, 서울시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위상정립, 새로운 시대적 가치 및 계획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논의함. 이를 위해 사전준비 단계로 학계와 시민단체 등 33인의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통해 서울플랜의 추진체계, 수립방향, 시민참여방식 등을 결정함.
- 2012년 8월 미래상 설정을 위하여 100인의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었으며, 2차례의 예비회의와 1박2일간의 본회의를 거쳐 시민들이 바라는 2030년 서울의 미래상과 주요 계획과제를 도출하였음. 이를 도시기본계획의 틀로 재구성하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3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가 구성됨.
- 시민참여단에 의해 설정된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분야별 시민그룹, 시의원, 전문가, 실·국·본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2030 서울플랜 수립추진위원회'는 핵심이슈별 계획,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권역별 구상, 실현화 방안 등이 포함된 2030 서울플랜 계획(안)을 작성함.
- 이와 같이 시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만든 서울플랜 계획(안)은 대시민 공청회, 지역별 설명회 등 의견수렴 및 법정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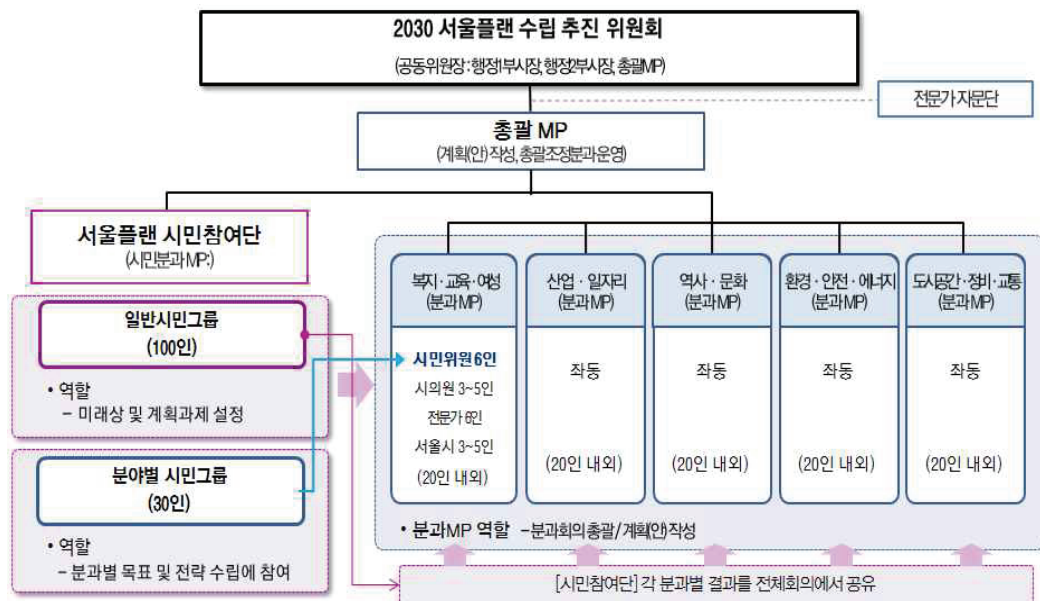
〈그림 1-5〉 시민참여형 서울플랜의 수립과정

〈표 1-4〉 계획 수립과정별 계획참여 주체의 주요역할 및 내용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준비	<b>전문가 포럼(총 11회)</b> · 기간 : 2009.3 ~ 2009.12 · 참여주체 : 다양한 분야별 학계, 기관, 시민단체 등 전문가, 서울연구원 · 주요내용 - 도시계획, 문화, 산업경제, 환경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의견 검토 - 전략계획의 개념규명과 서울에의 적용방안 논의
	<b>전문가 자문단 회의(총 5회)</b> · 기간 : 2011.12 ~ 2012.7 · 참여주체 : 다양한 분야별 학계, 기관, 시민단체 등 전문가 33명 · 주요내용 : 서울플랜의 추진체계, 수립방향, 시민참여 방식 등 논의
	<b>2030 서울의 미래상 및 분야별 주요 이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b> · 1차 설문조사(2009.8~11) : 일반시민 1,500명, 전문가·공무원 440명 · 2차 설문조사(2011.9) : 일반시민 1,500명
	<b>토론 한마당(총 5회)</b> · 기간 : 2012.8~9 · 참여주체 : 전문가(강연 및 토론), 일반시민 등 · 주요내용 : 서울의 주요 변화 및 미래전망 등에 대해 석학 초청강연 및 시민토론
	<b>시민참여단에 의한 미래상 및 계획과제 설정</b> · 참여주체 : 19세 이상 일반시민 100명과 청소년 참여단 16명 · 진행방식 : 10개 분임으로 나누어 3차례 숙의방식으로 진행 - 1차 예비회의(2012.9.1) : 오리엔테이션, 2030 서울의 미래에 대한 브레인라이팅 등 - 2차 예비회의(2012.9.15) : 서울의 주요 계획과제 논의 - 본회의(2012.10.6~7) : 1박2일 합숙을 통해 2030 서울의 미래상과 7대 계획과제 설정
미래상과 계획과제 설정	<b>전문가 자문단에 의한 미래상 및 계획과제 설정</b> · 참여주체 : 전문가 자문단 20명 · 진행방식 : 원탁회의 방식의 2차례 회의 진행(2012.8.27, 2012.9.22) - 3개의 미래상과 21개의 계획과제 제시
	<b>시민이 제안한 미래상 등의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이슈별 계획 수립</b> · 기간 : 2012.11 ~ 2013.6 · 구성 : 6개분과(핵심이슈별 5개분과+총괄조정분과) · 참여주체 : 시민, 전문가, 시의원, 살국본부장, 서울연구원 등 분과별 20~30명(총 108명) · 주요내용 - 분과별 10여회 회의를 통해 미래상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표, 세부전략 등 수립 - 총 17개 목표, 58개 세부실행전략 수립
핵심이슈별 계획	<b>권역별 계획 수립을 위한 자치구 주민, 공무원 워크숍(2회)</b> · 기간 : 2013.3.18(1차), 2013.7.15~7.17(2차) · 참여주체 :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 공무원(1차 150명, 2차 75명) · 주요내용 - 권역별·자치구별 주요 이슈와 발전방향 논의 - 해당 권역의 분야별 계획과제 도출과 해당 자치구 핵심사업 등에 대한 의견 제시
생활권계획 (권역별 구상)	<b>2030 서울플랜(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수정 보완</b> · 권역별 설명회(2013.9.30~10.7) : 계획안에 대한 5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공청회(2013.10.12) : 서울시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 ·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2013.10~12) : 서울시 관련부서, 자치구, 광역시·도, 국토교통부 등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2회(2013.11.6, 2013.12.4) : 계획안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 시의회 의견청취(2013.12.17)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3.12.26)
의견수렴과정	

## 2. 서울플랜의 추진체계

- 2030 서울플랜은 시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수립주체 간의 협의를 통한 협력적 계획 수립을 위하여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추진위원회는 서울시 행정1·2부시장, 총괄 MP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계획추진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함. ‘총괄 MP’는 계획추진과 계획내용에 관한 결정 및 협의 등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조정 등 서울플랜 전반을 총괄함.
- 추진위원회는 미래상 설정을 위한 서울플랜 시민참여단과 핵심이슈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별 추진위원회로 구성됨.
- 시민참여단은 100인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며, 서울의 미래상과 주요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함.
- 분과별 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계획과제에 따라 5개의 분과, 총 108명으로 구성됨. 분과별로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분야별 시민그룹, 서울연구원 연구진 등 20여명 내외로 구성되어 핵심이슈별 목표와 전략을 제시함.



〈그림 1-6〉 2030 서울플랜의 추진체계

〈표 1-5〉 계획단계별 MP단의 역할

구분	미래상 및 핵심이슈 설정	핵심이슈별 계획
MP 역할	총괄 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상 · 핵심이슈 설정과정 총괄</li> <li>· 총괄조정분과 주관 및 전체 계획(안) 작성</li> <li>· 분과별 계획(안) 통합 조정 및 작성</li> </ul>
	분과 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시민참여방안 총괄조정 · 관리</li> <li>· 분과회의 주관</li> <li>· 계획방향 및 계획(안)의 골격 설정</li> <li>· 시민참여단 속의 진행 및 보고서 작성</li> <li>· 핵심이슈별 계획 보고서 초안 작성</li> </ul>







## 제1절 | 서울의 변화진단

### 1. 서울의 발전과정

#### 1) 서울의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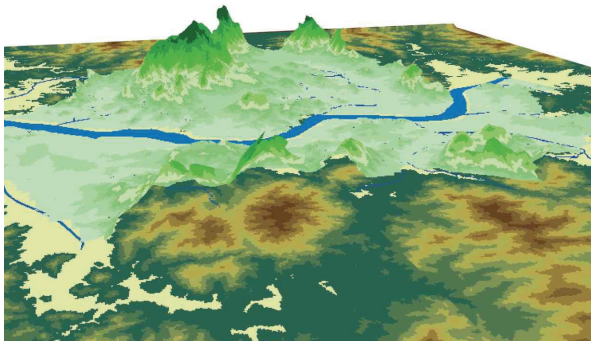
- 서울은 인구 천만이 살고 있는 대도시이며, 면적은 605.96km<sup>2</sup>임. 주변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여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서울의 중앙에는 한강이 동서를 가르고 있고, 권역별로 4대 지천이 한강으로 흐르고 있음.

- 면적 : 605.96km<sup>2</sup>

- 인구 : 1,057.5만명 (주민등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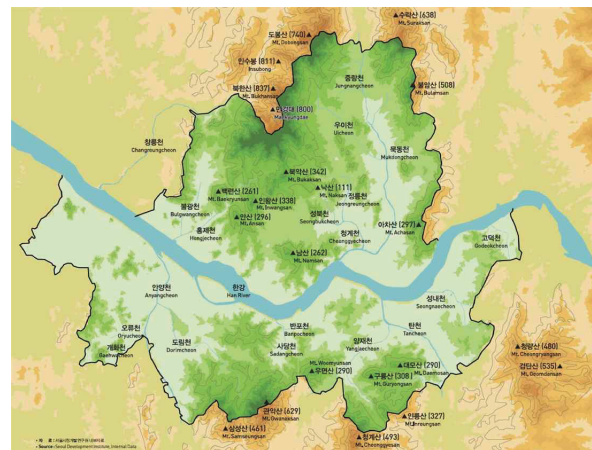
- 행정구역 : 25개구, 423개동

- 1인당 GRDP : 27.03백만원



〈그림 2-1〉 3차원 지형도

자료 : 서울시, 지도로 본 서울 2007,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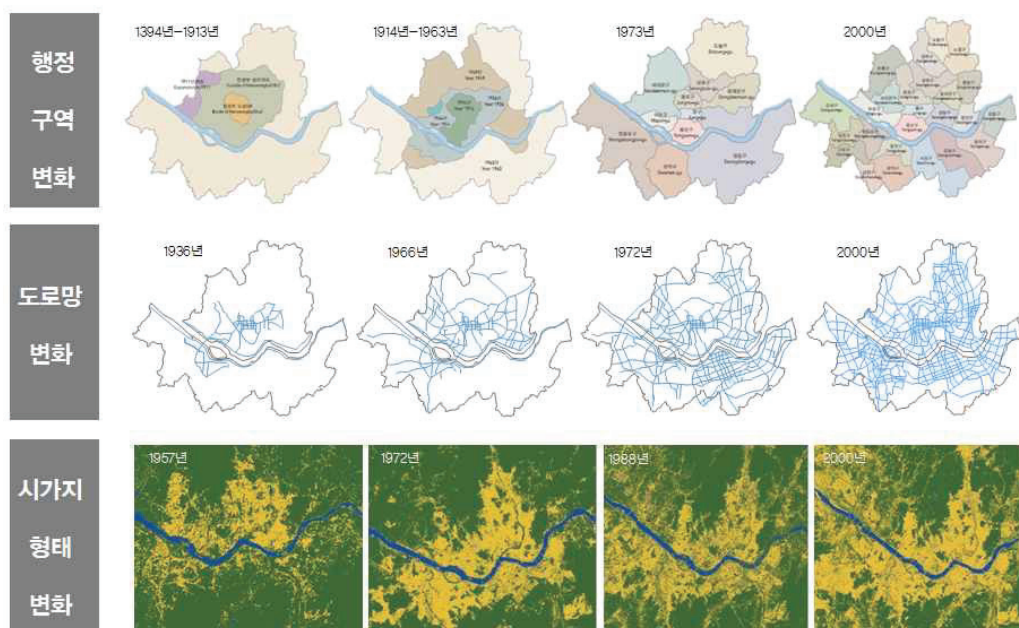


〈그림 2-2〉 서울의 지형도

자료 : 서울시, 지도로 본 서울 2007, 2006.

## 2) 도시형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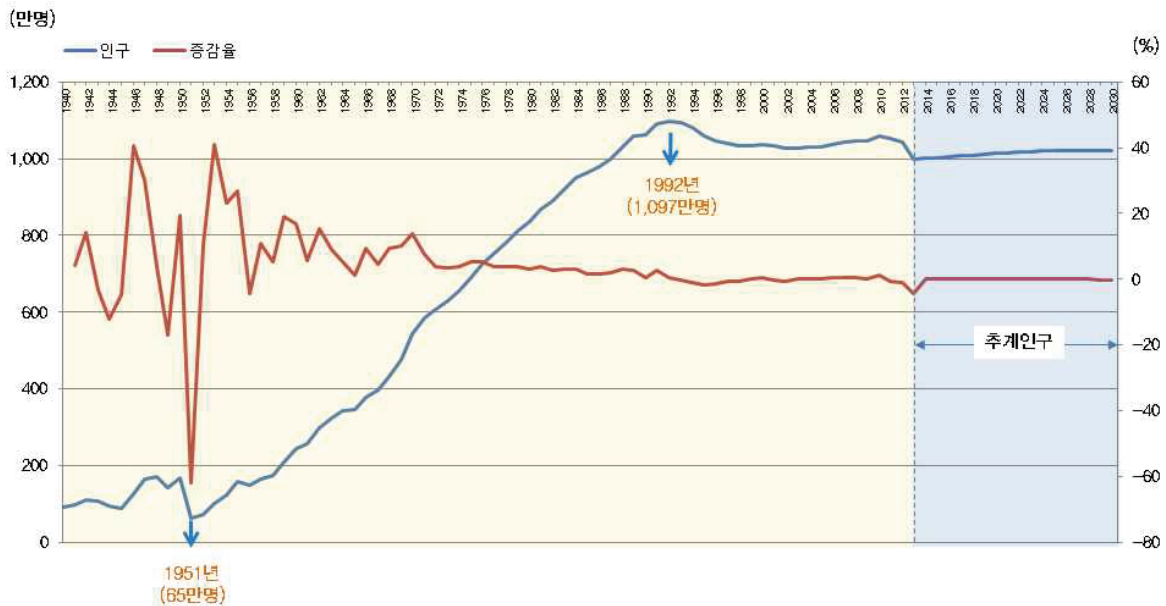
- 서울은 1394년 조선의 수도로 결정된 이후 동서축의 도시구조를 유지하여 왔으나, 일제강점기에 남쪽으로 시가지가 확산되어 남북축의 도시구조로 바뀌기 시작하였음. 광복 이후에는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시가지가 한강 이남으로 확산되어 1970년대 중반 현재의 시가지가 형성되었음. 현재 서울의 행정구역은 25개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음.
- 서울의 인구증가 및 지역의 확장과 더불어 도시인구와 물자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망도 발달되어, 방사형 가로망과 순환가로망체계가 형성되었음. 한편, 광역적으로는 서울과 주변 수도권이 하나로 연계되는 광역대도시권이 형성됨.



〈그림 2-3〉 서울의 도시형태의 변화

## 3)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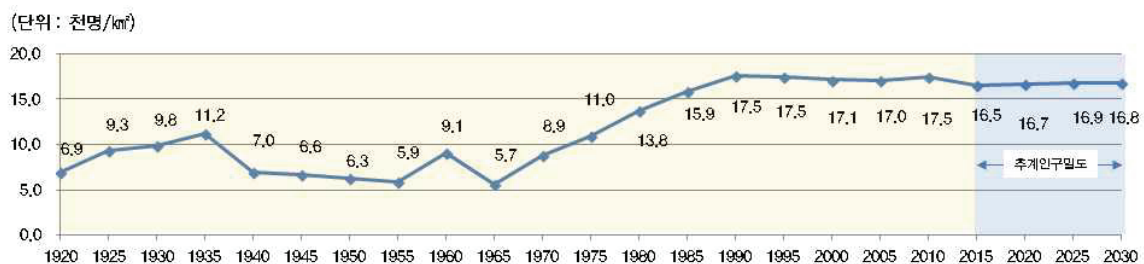
- 서울 도시형태의 변화는 급격한 도시인구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서울의 인구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1년 약 65만명에서 1992년 약 1,097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서울의 인구증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다만, 1990년대 이후에는 인구증가 추세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



〈그림 2-4〉 서울의 인구 변화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주민등록인구), 해당 연도(1940~2012)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해당 연도(2013~2030).

- 통계청에서 발표한 서울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서울시 추계인구는 999만명으로 2030년(1,020만명)까지 약 21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20년간의 인구변화는 안정화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됨.<sup>6)</sup>
- 서울의 인구밀도는 1965년 5.7천명/km<sup>2</sup>에서 1990년 17.5천명/km<sup>2</sup>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1990년 이후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30년까지 서울의 인구밀도는 16.8천명/km<sup>2</sup>의 범위 내로 예측됨.



〈그림 2-5〉 서울의 인구밀도 변화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인구밀도), 해당 연도(1920~2010)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해당 연도(2015~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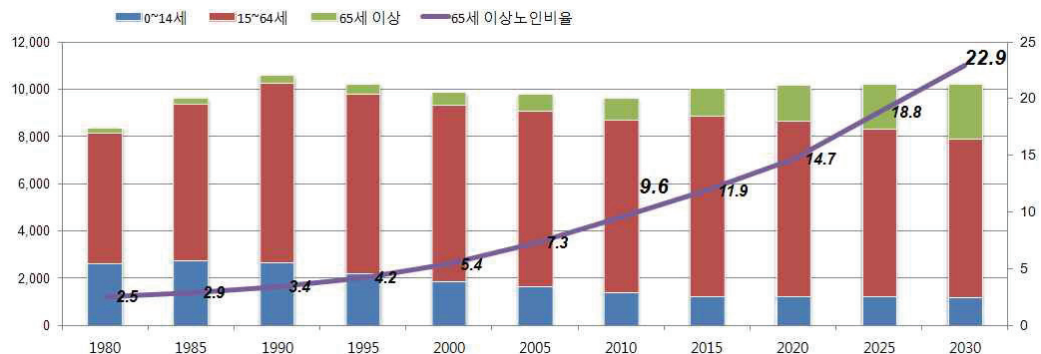
주 :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추계 인구밀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활용하여 추계(서울시면적은 605.96km<sup>2</sup>로 계산)

6) 서울은 향후 20년간 인구의 안정화, 서울과 인접지역 간 매년 67만명의 유출인구와 61만명의 유입인구, 대도시권으로의 확장에 따라 단일공간으로서의 계획인구설정의 한계 등 인구추계에 따른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통계청의 인구추정모델을 활용(자료집 1 제1부, 인구편 참조)

## 2. 서울의 여건변화

### 고령인구 및 1·2인 가구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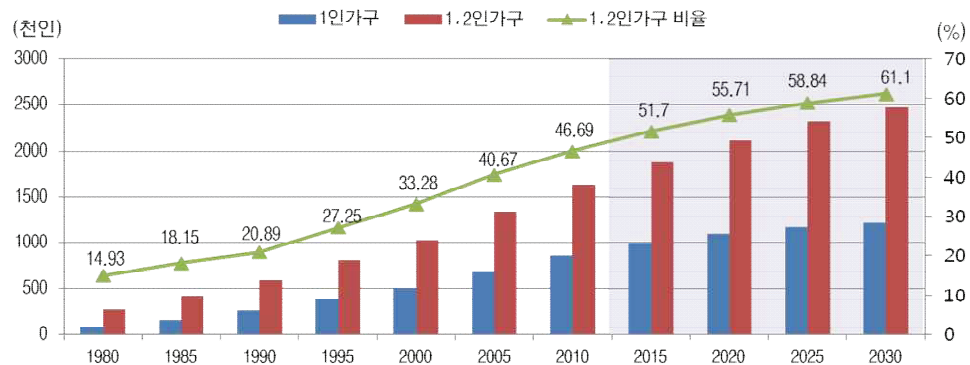
- 서울의 인구구조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크게 변화함. 예를 들어 14세 미만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인구비율 뿐 아니라 생산가능 연령인구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율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2010년 이후 고령화현상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고령인구가 22.9%를 차지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그림 2-6〉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해당 연도(1980~2010)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해당 연도(2015~2030).

- 1·2인 가구는 2010년 46.7%에서 2030년 61.1%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화는 주택시장, 교통환경, 복지수요, 소비시장 등 각 분야에서 수요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므로 이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됨.



〈그림 2-7〉 서울시 1·2인 가구 추이 및 추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해당 연도(1980~2010)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해당 연도(2015~2030).

-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방향은 기존의 양적 공급 및 개발에 의한 성장 정책에서 개발수요의 다양화에 대비한 세밀하고 정교한 질적인 도시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특히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경제성장의 둔화와 양극화 심화

- 서울경제가 전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해 볼 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경제의 성장세가 전국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을 알 수 있음. 1994년~2011년 동안 전국의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이 각각 37.8%, 43.8%, 107.9%가 증가한 데 반해 서울시는 14.8%, 24.5%, 60.5% 증가에 그침.
- 서울시 지역총생산(GRDP)도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1994년 서울시 지역총생산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9%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22.3%로 감소함.

〈표 2-1〉 전국 대비 서울시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현황

구분		1994년	2000년	2011년
사업체(개)	전국	2,518,454	3,013,417	3,470,034
	서울	655,139	719,536	752,285
종사자(명)	전국	12,583,630	13,604,274	18,093,190
	서울	3,612,150	3,574,824	4,498,312
생산액(백만원)	전국	531,953,264	691,467,810	1,105,864,941
	서울	153,895,577	182,152,093	247,003,197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해당 연도 / 통계청, 지역소득(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해당 연도.

- 서울은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중산층은 감소하고, 빈곤층은 증가하는 추세임. 일례로, 서울의 소득양극화 지수<sup>7)</sup>는 2000년 0.0209에서 2008년 0.0259로 악화되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불균형을 보여주는 지니계수<sup>8)</sup>도 같은 기간 0.31에서 0.35로 증가하여 소득양극화와 불균형이 동시에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지역균형발전과 노약자 및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대도시권 차원에서 경쟁 심화

- 세계 선진도시인 런던, 파리, 도쿄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공간의 범위를 대도시권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도시공간구조의 개편과 중심지 육성, 광역인프라 및 공항과의 연계성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2000년대 들어 지구촌 40대 광역도시권인 메가시티리전(MCR : Mega City-Region)에 경제활동과 성장이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 세계경제활동의 66%, 신개발혁신의 86%를 차지하고 있음.<sup>9)</sup> 이에 따라 국가의 성장을 선도하는 주체가 대도시에서 메가시티리전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7) 소득양극화란 중간 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함. Wolfson지수와 EF지수 등이 대표적인 측정지표임.

8)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냄.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은 완전 평등한 상태, 1은 완전불평등을 의미함.

9) Who's your city?, 리처드 플로리다, 2010 조사보고서 경쟁력부문 참고

-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위도시로서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이며, 경기, 인천을 포함한 서울 대도시권은 국토면적의 12%, 인구의 약 절반인 2,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 또한 전국의 철도, 도로 등 간선교통망이 서울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고 전국 대학의 약 35.6%가 집중되어 인적 자원이 풍부함. 이처럼 세계도시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이 10위권 내외로 기업활동 및 경제분야의 수준은 비교적 높지만, 정치참여 및 영향력, 인적 자원, 지식기반, 문화교류, 삶의 질 등 나머지 부분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sup>10)</sup>
-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수위도시를 대상으로 한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중심지 육성, 광역교통망의 정비와 공항기능의 확충 등을 통해 구현하고 있음.
- 서울시도 대도시권 차원으로 시야를 넓혀 도시공간구조의 정비 및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 고도화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위도시로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견인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 최근 급격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잦은 기상이변과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세계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도시차원에서도 기후변화예의 대응이 현실화되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환경가치와 에너지절약을 중시하는 저탄소 도시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교통과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도시관리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강구되어야 함.

### 개발 가용지의 부족 및 시가지의 집단적 노후화 진행

- 서울시는 1990년대 이후 미래 도시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개발가능지가 거의 소진한 상태로 지금까지와 같은 수평적인 도시개발은 한계에 이르렀음.
- 기존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대부분 1990년대 전후에 공급되어 향후 10년 이내에 대부분 정비 대상지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1980년대에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향후 20년 이내에 재건축이 쟁점화 될 것으로 판단됨.

10) GaWC Research Network, 중국사회과학원, AT Kearney, Knight Frank에서 발표된 세계도시 순위 참고



- 지금까지 개별 사업구역 위주로 추진되어 온 정비사업 방식은 향후 정비대상지가 한꺼번에 확대될 경우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집단적으로 노후화되는 단독주거지 및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도시환경정비사업 미시행지구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장기 미시행지구의 사업촉진 및 완료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소단위 정비 등 정비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

## 제2절 | 미래상과 계획과제

### 1. 미래상 설정과정

- 서울플랜과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래상을 시민 스스로가 제안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임. 서울플랜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단계에서 서울의 미래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음.
- 20년 후 바람직한 서울의 미래상 도출을 위하여 다양한 사전준비단계를 기획함.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sup>11)</sup>를 두 차례 실시하였고, 도시기본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울의 주요 변화와 미래 전망 등을 일반시민과 함께 토론하는 ‘토론한마당’을 5회에 걸쳐 개최하였음. 또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플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상시 설문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미래상 설정을 위한 기초현황 및 쟁점과 이슈분석이 사전기획단계에서 이루어짐. 이를 바탕으로 2030 서울의 미래상 설정을 위하여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을 모집함. 선정방식은 무작위로 일반시민 100인을 모집하되, 성별, 연령, 직업, 국적,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그림 2-8〉 시민참여단의 미래상 설정과정

11) 서울의 현재와 미래 및 분야별 주요이슈에 관한 설문조사는 총 2500명(2009년 1500명, 2012년 100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하였음.

〈표 2-2〉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개요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이란?**

천만 시민을 대표하여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한 100명의 시민들을 말하며, '서울의 미래상은 서울시민이 만든다'는 취지하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최초의 시민계획 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위촉함.

**구성목적**

서울시민이 직접 서울의 도시문제를 진단·발굴하여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시민 공감대에 기반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함.

**참여기간 및 방식**

- 참여내용 : 203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 도출
- 참여기간 : 2012년 9월 1일 ~ 계획 수립 시까지
- 참여방식 : 합의회의(숙의방식)

**모집방법**

- 대상 : 서울시내 거주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 기간 : 2012년 8월 7일 ~ 27일(21일간)
- 방법 : 전문 리서치 업체에 의뢰하여 무작위 유무선 전화조사 표집
  - 100인의 통계적 대표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하여 무작위 선정방식을 적용함.
  - 성별, 연령, 직업,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모집함.
  - 단, 장애인과 외국인은 서울시 내 관련부서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함.

**〈시민참여단 연령별·직업별 구성〉**

구분	대학생	직장인	기업인	자영업자	전업주부	기타			계
						어르신	장애우	외국인	
20대	13	5						2	20
30대		14		1	2				17
40대		8	6	6	5		1		26
50대		10	1	5	7		2		25
60대 이상		2		2	2	6			12
계	13	39	7	14	16	6	3	2	100

- ‘시민이 바라는 서울의 미래상 및 계획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에게는 기초현황 및 예측자료, 다양한 논의방식 등이 제공됨. 미래상과 계획과제는 두 차례의 예비회의와 한 차례의 본회의(1박 2일 숙의회의)를 통하여 도출되었음.
- 시민참여단의 회의는 정보제공, 숙의(충분한 논의와 토론), 최종결정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음. 시민참여단은 도시계획분야의 전문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서울의 주요 여건변화 및 쟁점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 및 발표를 통해 미래상 설정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음.
- 100인의 시민참여단을 10개의 분임으로 나누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도우미인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각 분임에 배치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분임별 토론결과에 대해 전체가 전자투표를 하여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선정하였음. 이렇게 선정된 서울의 미래상 및 계획과제는 시민참여단에 의해 직접 제안서로 작성되어 서울시장에게 전달됨.
- 전문가 자문단도 두 차례의 로테이션 원탁회의를 통하여 전문가가 보는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함. 최종적인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는 시민대표, 총괄 MP, 시민분과 MP, 자문단장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민참여단이 도출한 안으로 최종 확정됨.



〈그림 2-9〉 미래상 설정과정

## 2. 시민참여에 의한 미래상 및 계획과제

### 1) 시민이 바라는 2030년 서울의 미래상

-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예비회의와 1박 2일간 본회의를 통해 서울의 장점과 단점,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토론, 미래상 도출을 위한 숙의과정 등을 거쳐 2030년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함.
- 시민참여단은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서울의 미래상으로 선정함.



#### 도시기본계획에서 ‘미래상’ 설정의 의의

- 서울플랜은 ‘서울이 장기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함. 따라서, 미래상은 서울플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로 미래를 해석하고 계획의 내용이 작성됨.
- 따라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는 향후 20년간 서울의 시정운영에 있어서 최상위 가치판단의 준거가 됨.



## 2030년 서울의 미래상,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 서울에는 근대 이후 지금까지 ‘배워야 산다’, ‘잘살아보세’,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다이나믹 코리아’ 등 우리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슬로건이 있었고, 이는 오늘날 서울의 성장을 견인해온 구심점이자 원동력 역할을 하였음.
- 이제 서울은 향후 20년간 시대정신을 대변하고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은 미래상을 새롭게 설정해야 함. 서울의 미래상에는 해결해야 할 당면한 문제 뿐 아니라, 서울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이 포함되어야 함.
- 서울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높은 물가, 층간소음 분쟁 등 개인차원의 문제로부터 일자리부족, 지역불균형, 무분별한 개발 등 도시차원의 문제, 나아가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심화 등 지구촌차원의 문제까지 복잡다단하며, 서울의 미래상은 이러한 이슈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함.
- 서울시민은 이러한 서울의 당면 과제와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라는 미래상을 설정하였음. 소통과 배려는 그 자체로 서울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고(至高)의 가치임과 동시에 향후 20년간 서울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 도시정체성 확립,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제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서울이 지향하는 다양한 목표를 달성해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임.
- 2030년 서울의 미래상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에는 ‘소통과 배려’를 통해 서울시가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2030년 서울을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시민의 염원이 담겨 있음.

## 2) 시민이 선정한 서울의 계획과제

- 시민참여단은 미래상과 함께 2030년까지 서울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여 교육, 복지, 일자리, 소통, 역사문화 및 경관, 기후변화 및 환경, 도시개발 및 정비 등 7대 계획과제를 선정하였음.
- 시민참여단이 선정한 서울의 7대 계획과제는 이후 핵심이슈별 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교육·여성, 산업·일자리, 역사·문화, 환경·에너지·안전, 도시공간·교통·정비 등 5개 분과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며, 핵심이슈별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됨.



〈그림 2-10〉 시민참여단이 선정한 계획과제와 핵심이슈분과 구성









## 핵심이슈별 계획이란?

핵심이슈별 계획이란, 서울시 전체 실·국·본부의 행정분야를 융합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시정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전략적 성격의 계획임. 이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주제 중심의 계획을 서울의 특성에 맞게 구성한 서울형 주제계획임.

핵심이슈별 계획은 총괄조정분과와 5개의 핵심이슈분과에서 수립함. 총괄조정분과는 총괄MP(1인)와 분과MP(5인), 시의원, 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국장, 서울연구원 연구진으로 구성되며, 핵심이슈분과는 시민, 전문가, 시의원, 관련 실·국·본부 공무원, 서울연구원 연구진 등 각 분과별 20~30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됨.

핵심이슈분과는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7가지 계획과제(교육, 복지, 일자리, 소통, 역사문화·경관, 기후변화·환경, 도시정비)를 총괄조정분과의 조율을 거쳐 복지·교육·여성, 산업·일자리, 역사·문화, 환경·에너지·안전, 도시공간·교통·정비 등 5개의 분과로 구성하였음.

핵심이슈별 계획의 주요내용은 핵심이슈별 계획방향, 주요지표, 목표와 전략 등으로 구성됨. 계획수립을 위해 약 10개월 동안 분과별로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핵심이슈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하였음. 각 분과 간의 조정 및 조율은 총괄조정분과에서 수행하였으며, 시민참여단의 의견수렴을 위해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하였음.



## 17대 목표, 60개 실행 전략

<그림 3-1> 핵심이슈 선정과정

〈표 3-1〉 핵심이슈별 목표와 전략

핵심이슈 1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5개 목표, 17개 전략)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1-1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1-2 고령인구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세대통합 문화 조성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2-1 효율적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사각지대 해소 2-2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2-3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및 시민먹거리 안전성 강화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3-1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강화 3-2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3-3 나눔과 참여를 통한 자발적 복지공동체 구현 3-4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조성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4-1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교육 지원 4-2 학습사회 구축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4-3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의 기능 회복 지원 4-4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공동체 실현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	5-1 성평등한 가족·사회문화 조성 5-2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5-3 위험·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5-4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구현
핵심이슈 2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3개 목표, 10개 전략)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	1-1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1-2 창의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1-3 서울형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1-4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기존 산업집적지의 활성화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2-1 공존과 협동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2-2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2-3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 확대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3-1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한 창조계층 확대 3-2 세계인이 일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환경 조성 3-3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을 통한 21세기형 도시경제 환경 조성
핵심이슈 3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3개 목표, 11개 전략)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	1-1 역사적 특성이 드러나는 도시공간구조 형성 1-2 시민의 역사자원 접근성 개선 1-3 역사자원의 시간적 공간적 확대 1-4 실행력 있는 역사보전의 추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 관리	2-1 자연경관의 보호 2-2 역사경관의 보전과 관리 2-3 가로경관과 시가지경관의 관리 2-4 시민과 함께하는 경관관리 추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3-1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 조성 3-2 문화로 특화된 지역발전 도모 3-3 문화생태네트워크 형성
핵심이슈 4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3개 목표, 11개 전략)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 조성	1-1 공원 인프라 선도 도시로의 이행 1-2 도시기후 조절 능력 강화 1-3 도시 내 자연생태계 보전·회복과 공익기능 증대 1-4 도시생활 환경의 질적 향상 및 최적화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	2-1 에너지 위기 대비 관리체계 고도화 2-2 저탄소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정착 2-3 자원 리사이클링 확대
다 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3-1 위험정보의 획득 및 활용체계 고도화 3-2 조기대응 신속성 확보 및 역량 증진 3-3 도시 생활 안전 거버넌스 확대 3-4 기상 재난의 예방 및 환경지수 역량 향상
핵심이슈 5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 공동체 도시” (3개 목표, 11개 전략)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1-1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형 복합 토지이용 1-2 지역별 특화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1-3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1-4 도시공간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통합적 도시관리 1-5 효율적인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	2-1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재생과 복합 연계교통체계 구축 2-2 보행과 자전거 이용이 안전한 도로공간 재편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2-3 승용차 이용의 합리적 관리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 확대	3-1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수급관리체계 구축 3-2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확대 3-3 살기좋은 주거공동체 조성

## 핵심이슈 1 |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목표체계 : 5개 목표, 17개 전략

5개 목표		17개 전략
목표1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1-1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1-2 고령인구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세대통합 문화 조성
목표2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2-1 효율적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사각지대 해소 2-2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2-3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및 시민먹거리 안전성 강화
목표3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3-1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강화 3-2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3-3 나눔과 참여를 통한 자발적 복지공동체 구현 3-4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조성
목표4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4-1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교육 지원 4-2 학습사회 구축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4-3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의 기능 회복 지원 4-4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공동체 실현
목표5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	5-1 성평등한 가족·사회문화 조성 5-2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5-3 위험·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5-4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구현

### 1) 현황과 과제

#### 인구구조의 변화

-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30년에는 전체인구의 22.9%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됨. 그에 비해 출산율은 크게 감소하여 경제활동 인구비율은 65%로 떨어지게 되어 노인부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가족구조의 변화

- 2030년에는 현재의 3~4인 가구 중심에서 1, 2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의 이혼율은 2010년 7.8%에서 2030년 11.4%로 증가하여 이혼·재혼가족,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유형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가족 내 수발부담을 담당 하던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부모 부양의식은 2010년 40%에서 2030년 19.2%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돌봄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양극화의 심화 및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중산층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는 계속 증가하여 서구에서 경험한 이민·다문화 사회의 적응성과 통합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서울에는 전체 주민 중 외국인 등록인구가 10%를 넘는 동(가리봉동, 대림동)이 이미 생겨남. 2030년에는 이러한 다문화적 특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환경변화

-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악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환경성 질환 혹은 새로운 전염성 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건강을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웰빙과 삶의 질 향상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친환경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2) 기본방향

-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란 ‘차별이 아닌 평등, 승자 독식이 아닌 나눔, 물질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도시’를 의미함.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회로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말함. 이를 위해서는 우애, 협동, 나눔이 더욱 필요함.
- ‘사람중심의 도시’란 성장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닌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하며 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가능함. ‘사람다움’을 인정받고 구현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이 모든 구성원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함.
-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2030년 초고령화, 가족기능 약화 현상이 가져올 사회균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아울러 소득·교육·건강·지역·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의 구축과 복지욕구에 맞는 균형 잡힌 복지예산의 확보가 필요함.

### 3) 주요지표

-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5개 목표, 17개 전략을 설정하고 목표와 전략의 실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지표로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 지역 공공보건기관수, 노인여가복지시설수, 평생교육 경험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을 설정함.
-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수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수를 서울시 빈곤인구수로 나눈 비율로 2013년 48%에서 2030년에는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와 전략을 실현해 나감.
- 지역 공공보건기관수는 인구 10만명당 확보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총수를 의미하며, 2013년 0.5(개/10만명)에서 2030년에는 1.2(개/10만명)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노인여가복지시설<sup>12)</sup>수는 고령화시대에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며, 60세 이상 노인 천명당 시설수를 2013년 2.3개에서 2030년 10개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 경험률은 성인을 포함한 전세대가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수강한 경험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2013년 35% 수준인 것을 2030년에는 70%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은 서울시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3년 11%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2030년에는 35%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지표를 관리함.

〈표 3-2〉 핵심이슈 1의 주요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3	2020	2030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 (%)	48	80	100
지역 공공보건기관수 (개소/10만명)	0.5	0.8	1.2
노인여가복지시설수 (개소/노인 천명)	2.3	6	10
평생교육 경험률 (%)	35	50	70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 (%)	11	25	35

■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수+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수) / 서울시 빈곤인구수 × 100  
출처 : 서울시민복지기준, 2012.

■ 지역 공공보건기관수 = 서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총수 / 서울시 총인구 × 100,000

■ 노인여가복지시설수 = 서울시 노인여가복지시설수 / 서울시 노인(60세 이상) × 1,000

출처 : 통계청, 2012.

■ 평생교육 경험률 = 정규 교육과정 이외 평생교육 수강경험 비율

출처 : 서울서베이.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 = 국·공립어린이집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 100

12)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노인복지법 제36조)

## 목표 1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해지는 미래에는 노인 인구가 겪게 되는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사회적 소외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45.1%로 심각한 수준임. 2030년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져 노인가구의 경제사정이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지 않아 노인빈곤율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노인인구의 소득양극화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됨.
- 노인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하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사회문화의 조성이 필요함.
-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인세대만이 아니라 노인세대를 부양하게 되는 청·장년세대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과제임.
- 노인인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노인집단의 특성 또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함. 미래 노인은 개인적 역량이 높을 뿐 아니라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더 이상 복지의 대상으로만 남아있게 하기 보다는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고령자로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이들의 경험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전략 1-1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기반 구축

-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늘이기 위해 노인 적합 직종을 선정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자기업 및 노인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육성하도록 함.
-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특히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직업기술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임. 세계화와 경제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은 유연화 되고 평생직장 개념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 대비한 평생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최저소득보장 사각지대 노인가구의 지속적 발굴·지원

- 근로 불가능한 최저소득보장 사각지대 노인가구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함. 특히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한 빈곤노인 지원을 확대함.
- 현재 빈곤노인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빈곤가구로의 전락을 예방하는 사업도 확대되어야 함. 근로 가능한 저소득 노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원을 확보하고, 예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교육을 실시하여 노년기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함.

### 돌봄사각지대 노인을 위한 부가적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각종 중앙정부의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인을 대상으로 부가적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 공공과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가사지원,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함.
- 이용자와 가족 모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강화함.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위한 보호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야간 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을 10분 거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함.

## 전략 1-2

## 고령인구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세대통합 문화 조성

###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기회 확대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유지를 위해 노인이 참여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대 공급함.
- 미래 노인세대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와 같은 단순 취미, 오락 프로그램보다 자기개발, 사회공헌 등 생산적이고 주체적인 여가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함. 집단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서는 구별로 비용부담이 적은 식당, 영화관, 공원, 만담공연장 등이 어우러진 노인 놀이공간 조성이 필요함.

### 노인의 사회공헌활동 기회 확대

- 현재 노년층의 자원봉사활동은 대부분 단순 노력봉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만 미래에는 고령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는 전문봉사활동을 발굴·연계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함.

-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와 세대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년층 스스로 경제 활동,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더 이상 피부양 대상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독려하고, 노인들의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여 시상 및 홍보를 추진함. 고령자의 제2인생 설계, 노년기의 경제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 사회활동과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인생이모작센터를 확대 공급함.

### 세대 간 통합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확대

- 현재 각 복지대상별로 개별적인 형태로 건립되고 있는 복지시설을 대신하여 다양한 연령 계층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을 확대함. 복지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복합 커뮤니티화하여 세대통합형, 지역사회 개방형 주민복지시설로 운영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노인시설과 아동청소년시설의 교류 프로그램 확대, 노년단체와 청소년단체의 상호 교류·협력프로그램 지원, 노인-청소년 합동 자원봉사활동 발굴, 세대융합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세대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육성 지원함.

## 목표 2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 서울시민 중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자가 평균 18.1%(2010)나 되고 지역별 건강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2005~2010년 동안 서울시 자치구의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최저치를 보인 서초구는 인구 10만명당 335명인 반면, 최고치를 보인 중랑구는 469명으로 134명이나 차이가 남. 이를 동 수준으로 비교하는 경우 최고/최저 사망률 격차는 2.5배에 달함.
- 2030년 시민 건강 측면에서 서울의 바람직한 모습은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의 건강잠재력(health capability)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도시”라 할 수 있음. 이는 단순히 건강결과에서의 평등을 지향한다기보다 개인이 가진 각기 다른 건강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를테면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경우 질병의 완치 자체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관리와 재활을 통해 당대의 의료 수준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의 건강잠재력 실현이라 할 수 있음.
- 「세계보건기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는 2008년에 “건강격차를 한 세대 안에 없애기”라는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음. 서울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2030년에는 건강불평등이 더 이상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을 수준으로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
- 시민 누구나 건강잠재력을 실현하고 건강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 확충과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의 강화, 그리고 환경성 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전략 2-1

## 효율적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사각지대 해소

## 생활권역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 공공병원은 무료간병서비스, 호스피스 병동 운영, 장애인 및 노인 치과진료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노인·한방, 아동 등 전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화 병원으로 개편함. 보건지소는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및 시민의 의료서비스 접근 향상을 도모함.
- 보건기관은 인구 20만명당 1개소에서 5~7만명당 1개소로 관할인구 범위를 줄여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를 가능토록 함.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1차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고자 민간의료기관 중 야간·휴일진료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함.
- 24시간 전문의 건강상담(전문의 5명, 간호사 3명 교대로 상주)을 제공하는 서울건강콜센터를 확대 추진함. 이를 통해 의료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시민들 스스로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외국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형평사업 추진

- 서울시 지역 간 건강불평등 지표 분석 및 체계적인 건강 불평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건강형평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형평사업 기술지원을 통한 건강격차 해소를 추진함.

## 환자 안심병원 운영, 재가 중증환자 지원 및 환자권리 보호체계 구축

- 서울시민인 환자들이 가족의 도움 없이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투병생활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함.
-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임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을 활성화하고 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함. 암환자, 희귀질환자 등 중증 재가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벗어나 상대적 약자인 환자에 대한 권리구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 전략 2-2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산모,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결혼연령의 상승 및 고령 출산의 증가로 고위험 임신부 및 합병증이 증가(산모연령 35세 이상 '10년 서울시 17.9%, 전국 15.1%)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산전·아동기 건강발달 종합프로그램의 순차적 개발·확산 및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취약지역 산모·영유아의 건강관리 강화가 필요함.

### 아동, 청소년 건강관리 강화

- 예방접종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만12세 이하 영·유아를 비롯한 아동 대상 필수예방접종서비스를 확대함. 아동·청소년 구강질환에 대하여 1차 치과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강검진과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고령화에 대비한 아동의 구강건강권을 확보함.
- 학교 중심의 학생 정서행동발달 증진은 미래의 건강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한 학교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함.
- 갈수록 심화·만연되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자폐, 정서결핍 등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되, 신체활동 유형의 다양한 지역 자연치유 자원(숲, 텃밭, 동물, 도심농사 등)을 활용하여 건전한 정신과 신체만들기를 추진함.

### 민관협력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증진

-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현대생활 특성상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인구 증가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건강과 체육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질병예방 및 의료비 절감차원에서 생활체육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인 예방행정 차원으로 서울시의 가용부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건강한 시민생활을 도모함.
-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중장년 만성질환자의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사와 환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함. 가령 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하고 재진료 및 교육상담 등을 받으면 포인트를 부여하고 향후 검사나 예방접종 등에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도시의 숲과 농어촌의 자연환경 매체 등을 연계 활용하는 다양한 제도마련과 프로젝트 활성화로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포함한 만성적 질환을 완화·치유하는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함.

###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년기 건강관리 강화

- 장기요양상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인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기능을 회복, 유지 및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함.
-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노인 치매예방, 만성질환관리 및 낙상예방 등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 시행함.
- 치매발병률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 선별검진 및 집중관리로 치매검진의 실효성을 향상함.

## 전략 2-3

##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및 시민먹거리 안전성 강화

### (가칭) 「자연재해 및 환경성 질환 위기대응 연구센터」 건립

- 세계화와 기후변화로부터 초래되는 다양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발생 가능한 위기로 인해 파생되는 건강상의 피해를 추정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와 시나리오를 개발함.
- 개발된 대응체계와 시나리오에 기초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필요시설과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함.

### 유해물질로부터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보건정책 지속 강화

- 서울지역에 적합한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해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등 예방관리 대상 발암(유해)물질을 선정하여 물질별·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함.
- 서울시민의 환경성 질환 실태에 따라 구체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자치구 및 지역사회 환경보건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생산·유통 관련 업체와 협약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유해물질이 대체 또는 저감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함.

- 어린이 등 민감 계층을 위한 환경안전관리를 추진함. 어린이집과 놀이터 등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과 어린이 환경안전 가이드북 제작 등 환경 유해인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에코맘 선생님 등 지역사회 환경보건전문가를 양성하여 환경유해물질이 함유된 용품이나 시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 환경안전관리를 추진함.

### 식품안전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건강서울 먹거리 전략」 시행

- 안전, 건강, 문화, 환경까지 식품 영역을 확대한 「건강서울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여 서울시민의 먹거리 행복권을 보장함.
- 서울시 공공급식 영양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질 높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단계적으로 친환경 우수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여 먹거리 복지를 실현함.
- 「서울시 싱겁게 먹기 운동본부」 구성·운영, 서울시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 20% 감소를 위해 소비, 유통 등 분야별 나트륨 섭취 저감화 실천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섭취 모니터링을 실시함. 음식점 및 가정에 저염조리 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 감소를 유도함.
- 채식메뉴가 있는 식당을 지정하고,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한 ‘채식의 날’ 운영하는 등 채식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의 식생활을 개선함.
- 취약식품의 체계적 관리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감시를 강화함.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함. 예를 들어 시민이 나트륨 저감 메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저염실천 음식점’을 지정하여 전문가의 조리기술 지원을 통한 건강메뉴를 제공하고, 업소 내 금연실천 및 우수한 위생수준을 충족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건강음식점’으로 인증하여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함.

### 목표 3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 외환위기 이후 분배구조 악화로 중산층이 줄어드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서울시는 빈곤층의 유입인구가 많아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존재함.
- 또한 이주 노동자의 급속한 유입, 국제결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으로 현재 4%에 불과한 외국인이 2030년에는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서울이 외국인이 살기에 적합한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 인구가속환경의 변화 상황 속에서 미래는 소득 양극화 및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신체적 조건·연령·성별·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차별을 완화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발적 나눔,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체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전략 3-1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강화

#### 차별 개선 및 인권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신체적 조건·연령·성별·인종 등에 의해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함.
- 인권증진을 위한 시행방안 마련 및 이행 모니터링을 추진해나가고,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감. 또한 인권전문가 등 조사요원을 전문화하여 인권침해 실태점검 및 인권향상 교육을 적극적·지속적으로 실시함.

#### 교육권, 이동권 등 권리 보장 강화

- 교육은 그 자체로서 다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사회적 약자에게도 기본권이자 삶 전반에 걸쳐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이 되므로 장애인, 노인, 이주 외국인 등 특성별·육구별 맞춤 프로그램을 복지관 등의 관련기관에서 적극 개발·확대 운영함.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의 확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민간 건축물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 강화로 무장애 사회환경을 구축함.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립·자활 목표의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지역단위 서비스 거점 확보와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자치구별 수요자 특성 및 요구사항, 서비스 공급수준 등 차별화된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대상자별 맞춤형 자립·자활 지원정책을 실시함.
- 지역사회의 참여와 나눔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여 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함.

## 전략 3-2

###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 변화되는 환경에 맞도록 「서울시민복지기준」 지속 추진

- 사람이 중심인 서울, 삶이 편안한 서울을 추구하기 위해 2012년에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소득,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분야별로 서울시 지역과 가구의 특성에 맞는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하였고, 각 기준의 달성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 중으로 각 기준은 2018년까지 달성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임. 이후 각 기준선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2, 3차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소득불평등 완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제도가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제도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항상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는데, 2010년에는 서울시 인구 중 29만명이 기초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한국복지패널). 이에 따라 최저생계를 유지 하지 못한 사각지대 가구를 줄이기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함. 이를 통해 서울시 가구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sup>13)</sup>’을 2030년까지 100% 수준으로 높임.
- 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제 시행 확대를 검토함. 생활임금은 가족과 함께 생활유지가 가능한 임금으로 보통 중앙정부에서 정한 빈곤선(2인~3인 최저생계비)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정해짐. 이를 통해 2030년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을 현재의 50% 이하로 축소함.

13)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 = 보장대상인구 / 서울시 빈곤인구 X 100

### 지역 및 가구특성에 맞는 서울형 복지서비스 제공

-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법정급여 이외의 서울시 특성 및 가구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저소득 시민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서울희망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방문복지, 사례관리 등 주민센터 기능을 개편해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혁신을 통한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최일선 공공·민간 전달체계 간 상호 기능보완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함.

## 전략 3-3

### 나눔과 참여를 통한 자발적 복지공동체 구현

#### 지역 내 어려운 주민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형성

- 공공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 내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 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함.
- 통·반장 등 지역주민과 접촉이 많은 주민이 사각지대 발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거점기관을 마련함. 거점기관은 이들과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고,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 발굴과 지원 활동을 촉진하며,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참여 주민 중 활동역량이 높은 리더활동가를 지역별로 육성하여, 리더활동가가 지역 내 활동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지역 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조성함.

#### 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보유한 인력, 재능, 물품 등을 지원해 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적 보호에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네트워크를 활성화함.

- 생활권역 내 복지위원, 시민단체, 주민봉사조직,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종교기관, 복지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각지대 주민과 복지욕구를 발굴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 행정기관은 민간의 행정교육, 리더십 교육, 조직관리 등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민간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함.
- 지역 내 나눔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복지네트워크와 정보를 공유함.

### 전략 3-4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조성

#### 내·외국인 소통과 교류지원 강화

- 외국인 참여 공감정책(서울타운미팅, 유학생포럼 및 인턴십, 외국인불편살피미, 찾아가는 이동상담 등)과 내·외국인의 소통 및 교류지원(글로벌콘서트, 벼룩시장, 청소년글로벌마인드함양교육 등)의 강화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민간단체 공동협력을 통하여 다문화 가족통합교육, 사회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외국주민이 살기 편한 도시 인프라 조성

- 외국인이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거주지 및 주요 활동지역에 서울글로벌센터 등 지원시설을 확대 설치함.
- 명동, 동대문과 같이 외국 관광객이 주로 찾는 지역을 관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문화관광센터 등 외국인 안내시설도 확대 설치함.
- 외국인 자녀가 다니기에 적합한 맞춤형 ‘외국인학교’, 아플 때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외국인 친화 ‘주거공간’ 등을 확대 설치함.
- 현재 서울시 공공의료체계 내에 이주민, 소수자 건강과 관련된 센터(Global Health Center 혹은 소수자 건강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함. 이러한 센터를 통해 가이드라인과 서비스 내용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원(인터프리터 서비스)이 가능해지도록 함.

###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외국인주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주민정책, 시혜주의적 정책을 넘어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통합정책,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한국어 교육,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확대함.

## 목표 4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만인을 위한 평생 교육’을 선언하였고, 유네스코(UNESCO)도 “평생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며 21세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교육은 개인의 사회적 생존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함. 전통적인 의무·정규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만으로는 지식과 정보가 폭증하는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학습에 대한 욕구충족, 자기계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제도가 절실히 필요함.
- 서울시는 전 시민이 전 생애에 걸쳐 학습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아울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자·타·체를 겸비한 인성교육을 통한 학교 기능을 회복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공동체 실현 등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전략 4-1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사회적 약자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기회 확대 제공

-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탈북자, 빈곤노인 등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층 간, 지역간 차별없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 공교육 혁신, 학교혁신 기반 제공

- 학교교육은 공공재이며,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받은 대상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공교육 제공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학교혁신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
- 또한 학교 및 주변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OECD 평균 수준 이상의 교육환경 지표를 달성하도록 하며,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리를 통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적 기반을 구축함.

## 전략 4-2 학습사회 구축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확립

- 각자의 필요성과 동기부여에 따라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회를 ‘학습사회(learning society)’라고 함. 성인을 포함한 전 세대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회 제공, 학습공동체 구축 및 지원, 지역·세대 간 평생학습 기회 격차 해소 등 공적 지원을 통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함.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

- 저출산, 고령화로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어 성인들의 학습과 관련된 욕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적인 유초·중등 교육을 넘어 취업 전과 후, 재직 중,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이 요구됨.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역 내 학교시설을 이용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이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해야 함. 또한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환경에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한 평생학습 포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확보하여 학습자 생애단계에 따라 맞춤형 학습 컨설팅 등 유비쿼터스 평생학습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개방형 시민대학 운영 확대

- 시민들에게 삶의 성찰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대학으로서 시민대학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시민대학은 교육이 ‘특권’이 아니라 시민적 ‘권리’로서 향유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진지(陣地)로서, 평생교육적 역량을 체계화하면서 동시에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운영함.

### 평생학습공동체 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 학습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지역단위 학습공동체를 확산하고, 대학, 민간단체,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함.
- 조기정년을 맞는 수많은 시민이 제2의 직업을 추구하고, 정년이후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하도록 취업, 창업 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함.

## 전략 4-3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의 기능 회복 지원

### 다양한 창의 인성교육을 통한 재능 발견 기회 제공

- 저출산에 따른 한자녀 가정의 증가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으로써 학생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 인성교육을 통해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공동체의 식과 상호이해 등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학교 수업 외 다양한 문화예술 등의 체험활동 확대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주말행복체험 프로그램, 학교 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함. 아울러 교실 밖 현장수업을 강화하고, 특별한 분야의 장인을 찾아가 배우는 다양한 열린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함.

### 학교 안전망 강화로 안심 배움터 실현

- 학교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함. 학생의 삶을 위협시키는 비교육적 요소를 제거하고 학교 본연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을 위한 인력 및 시설지원을 강화하고, 학교보안관 배치, CCTV설치 확대,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등을 추진함.

## 전략 4-4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공동체 실현

### 지역 내 교육자원간 네트워크 구축

- 학교 위주의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내 교육자원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함.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내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관, 주민센터, 박물관, 도서관, 미디어센터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기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생활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화원, 소규모 건설현장, 교도소, 경찰서, 우체국, 목공소,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지역사회자원과 함께 하는 실용교과목을 확대 편성함.

### 교육재능 나눔 확산

-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들과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각자의 재능을 서울 교육에 기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교육에 관심이 있는 지역 인사가 시스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인재풀을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활용함.
- 인적 인프라 구성을 위해 '대학생 재능 나눔 동행 프로젝트', '교육 재능 기부 프로그램' 마련 등을 추진함.

###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위한 통합형 교육복지기관 운영

- 2030년 초고령화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공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의료, 복지, 문화, 교육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통합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따라서 양로원, 복지기관, 실버타운, 의료기관, 휴양기관 등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능적으로 통합·발전시키고, 원스톱 토털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함. 이러한 통합복지시설 속에서 양질의 교육활동과 학습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 목표 5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

-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매우 낮은 편이며<sup>14)</sup>, 특히 여성 대표성 및 경제적 지위 영역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양적·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sup>15)</sup>
- 성(gender)에 관계없이 서울시민은 개인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야 함. 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이 낮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여성이 폭력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 따라서 성별 분업 해소, 성별격차 완화 등 실질적 성평등 달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전한 도시’, ‘여성이 함께 일하는 도시’, ‘함께 돌보는 도시’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가족의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미래 사회에는 가족 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한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성평등 실현은 국가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할 때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에서의 불평등 문제(구조와 환경)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추진을 위한 훈련제공, 성고정관념 제거를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가족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없는 성역할의 수행과 성평등문화의 조성이 필요함.
- 가족돌봄기능에 대한 사회적 분담 확대와 가족 내 돌봄에서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 등을 통한 사회적 돌봄 실현이 바람직함.

14) 2012년 WEF의 성 격차지수는 135개국 중 108위임.

15) 서울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2%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

## 전략 5-1

## 성평등한 가족·사회문화 조성

## 조직의 유리천장(보이지 않는 장벽) 깨기 등을 통한 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국가성평등지수(평균 62.6점)도 ‘의사결정’ 부문(19.2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조직 내 여성리더십 개발을 지원하고 서울시 각종 위원회 및 행정 고위직에서 여성비율을 확대하며, 각종 계획 수립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
- 가족 및 사회 전반에 성평등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 어린 나이부터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성인을 위한 예비부부교육, 역할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성평등 가족·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확대함.

##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 서울시 맞벌이 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가사노동에 대한 성별 부담은 변하지 않고 있음. 또한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자 현황은 2011년 1.42%에 불과함.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의 제도 활용률을 높여나가고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함. 아울러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과 남성육아휴직활용이 높은 기업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강화

-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평등을 위한 제도가 빠른 속도로 도입되었으나, 성평등이 서울시 모든 정책과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정립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성평등위원회의 서울시 성평등정책에 대한 조정역량 강화, 서울시 실·국본부의 성평등 정책 실행에 관한 평가기능 강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에 시민단체, 전문 연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전략 5-2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조성 및 취업지원 확대

- 차별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고, 양질의 일자리 조성 및 여성취업지원 확대가 필요함.
- 생애주기별 고용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여성적합 직종 개발 및 여성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성특화 창업 지원,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을 활용한 취업알선 등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바람직함.

###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취업지원 기반 구축

-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예방대책과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를 통한 여성근로자 고충상담시스템을 정착·확산하고, 온·오프라인상의 직장맘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대 보급함.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을 늘리고, 시간연장·24시간 보육, 방과 후 교실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
-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하거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여성친화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 새일센터 등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상담, 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함.

### 여성의 일하는 근로환경 개선

- 여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민간기업의 여성 휴게시설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등 여성근로자의 휴식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이 민간기업으로 전파되도록 추진함.
- 직장 내 성희롱과 폭언, 폭행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전략 5-3 위험·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위험·폭력으로부터 아동·여성·노인을 보호할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서울의 도시 및 건축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설계함에 있어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 또는 변경하고 지역의 안전에 지역공동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
- 도시전체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고 어두운 골목길 등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CCTV, 보안등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 또한 출·퇴근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조성함. 지역 내 안전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함.

### 위험·폭력 관련 캠페인, 교육 등 예방적 정책수단 강화

- 위험,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여성·노인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안전확보에 대한 의식고취가 필요하며 폭력 반대와 이에 대응하는 인권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향상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여야 함.
- 낯선 사람으로부터 납치나 유인, 성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한 체험교육을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폭력추방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진행함.

### 위험·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위험·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신고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함.
- 24시간 신고·상담시스템 운영으로 사건발생 시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상담소를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 쉼터를 통한 맞춤형 보호서비스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을 강화함. 또한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료 서비스 지원시스템을 확대 운영함.

## 전략 5-4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구현

### 서울시가 책임지는 돌봄지원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가족의 소규모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자녀양육 및 가족돌봄 지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공립 돌봄서비스시설 확충, 돌봄인력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함.
-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비용 지원, 장애아 및 노인돌봄 바우처서비스 확대, 방과 후 아동돌봄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가족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시민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임. 따라서 공적 전달체계의 확충, 합리적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돌봄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정보제공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접근성의 보편성을 지향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대상에 대한 공동체의 보호기능 강화

- 방과 후 돌봄서비스(공적·시장)를 이용하지 않고 방임되는 아동이 여전히 존재하고, 서비스 이용아동이라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함. 또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복지관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상이나 서비스 내용 등에서 중복되며, 전달체계의 분절로 서비스들이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서비스 중복방지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돌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간 연계·조정을 강화함.
- 또한 육아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육아자원과 기회를 연결하고 나누는 돌봄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거점 형태의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제공하고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공동육아 돌봄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활성화함.

## 핵심이슈 2 |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목표체계 : 3개 목표, 10개 전략

3개 목표		10개 전략
목표1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	1-1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1-2 창의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1-3 서울형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1-4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기존 산업집적지의 활성화
목표2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2-1 공존과 협동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2-2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2-3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 확대
목표3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3-1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한 창조계층 확대 3-2 세계인이 일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환경 조성 3-3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을 통한 21세기형 도시경제 환경 조성

### 1) 현황과 과제

#### 창의성이 핵심동인인 창조사회로 진화

- 정보사회가 지식·정보에 기반을 둔 지식경제 시스템을 통해 부를 창출했다면, 이제는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이 부의 창출과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임.
- 창의성은 다양성, 협력과 신뢰, 관용성 등이 활성화된 분위기 속에서 가장 잘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서울시는 창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

- 서울시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지만, 이를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 및 비즈니스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으로 대체하면서 창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함.
  - 2010년 서울시의 창조계층(creative class)<sup>16)</sup>은 약 136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직업군 중 29.5%를 차지하여 전국평균(22.2%)에 비해 높지만, 창조계층 비중은 10년전의 32.5%에 비해 오히려 하락함.<sup>17)</sup>

16) 창조계층(creative class)이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학자, 엔지니어, 대학교수, 예술, 디자인, 교육자 등이나 지식집약적인 부문의 전문가(의료전문가, 경영전문가 등을 말함(Florida, 2002). 미국의 경우 전체 직업의 약 30%를 차지함.

## 서울시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

- 서울시는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메가시티 중의 하나임. 그러나 서울시는 세계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여전히 낮고<sup>18)</sup>,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해외유출정도가 심하며, 유입은 부진한 상황임.<sup>19)</sup>

##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산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필요

-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성장잠재력 위축, 추격형 성장모델(fast follower)의 한계 도달,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우리 경제가 전반적인 저성장시대에 진입하여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고용감소, 세계경제의 경쟁심화 및 발전도상국 부상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 글로벌 차원의 일자리 경쟁 심화 등도 어려운 여건을 나타내는 현상임.
- 성장과 분배, 경제와 복지, 효율과 형평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하여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2) 기본방향

###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

- 그동안 서울시는 성장산업의 집중적 육성, 대기업 중심의 투자주도형 성장, 인적자본에 대한 양적 투자확대를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함. 그러나 이러한 성장모델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품격있는 세계도시로의 부상에는 한계가 있음.
- 21세기 도시경쟁력의 원천은 창의성, 협력과 상생의 가치,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축에 있음. 도시경제를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주체 간 상호신뢰와 협력기반이 존재해야 함.
- 서울시에선 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동시에 협동조합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를 또 다른 발전축으로 하여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도시로 성장해나가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함.

17) 우리나라의 창의계층은 표준직업분류 대분류의 1.관리자와 2.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를 의미함(자료 : 인구총조사, 해당 연도).

18) 세계 12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경쟁력의 평가 결과(2012년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서울시 20위, 부산시 64위, 특히 인적자본의 경쟁력이 취약함.

19) IMD(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의 세계경쟁력 연감 조사결과(2010년, 조사대상국 59개국) : 해외 고급인력유인지수 33위(4.58), 두뇌유출지수 42위(3.69)

###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지향

- 서울시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동시에,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를 실현하도록 함.
- 서울시는 세계인 누구든 와서 일하고 싶은 도시, 시민 모두에게 일자리 기회가 열려 있고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 함께 잘 사는 창조도시를 지향함.
- 2030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30% 이상이 창의계층을 구성하여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동시에, 현재 상용근로자의 1.6%에 불과한 사회적경제부문의 일자리가 전체 고용의 15%를 차지할 수 있도록 세계 10대 경제도시로 육성함.

### 3) 주요지표

- 서울시를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3개 목표, 10개 전략을 설정하고 목표와 전략의 실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지표로 창조계층 비율, 사회적 경제 일자리 비율, 고용률을 설정하여 관리함.
- 창조계층 비율은 2013년 25%에서 2030년 33%까지 높일 수 있도록 지표를 관리함.
- 사회적 경제<sup>20)</sup> 일자리 비율은 2013년 1.6%에서 2030년 15%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표를 관리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달성하도록 함.
- 고용률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2013년 65% 수준인 서울의 고용률을 2030년에는 75%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함.

〈표 3-3〉 핵심이슈 2의 주요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3	2020	2030
창조계층 비율 (%)	25	30	33
사회적 경제 일자리 비율 (%)	1.6	8	15
고용률 (%)	65	72	75

■ 창조계층 비율 = 창조계층 종사자수 / 전체 직업 종사자수 × 100

■ 사회적 경제 일자리 비율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일자리 수) / 전체 일자리 수 × 100

■ 고용률 =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수 / 15세 이상 65세 미만 총인구수 × 100

20) 현재 EU, 미국 등 선진국의 사회적 경제 비중은 GDP의 약 4~7% 수준임.



## 목표 1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

- 서울은 우리사회를 창조사회로의 이행을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를 위해 서울시의 주요 산업에서 창의성이 활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창의적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의 지식·창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창의형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동시에 산업의 융합화 트렌드에 부응하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무한경쟁에 방임하기보다 다양한 산업과 업체가 공존하면서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도록 선도할 필요가 있음.
- 공간적으로는 권역별 산업의 특성화 발전 및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속적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기존 산업집적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임.

### 전략 1-1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산업융합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융합·연계형 창의산업 발전

- 제품, 서비스, 기술, 학문, 산업 등의 다양한 융합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를 창출하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계 및 융합, 다양한 사업 간 융합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일자리 질적 제고를 도모함.
  - 제조업 + IT 서비스업: 인터넷 소매업과 관련기기제조업 간 연계를 통한 통합 콘텐츠 서비스업, 수제화와 IT서비스의 연계 등
  - 제조업 + 관광 등 기타서비스업: 의료기기·화장품과 관광지 연계형 미용헬스케어 서비스업, 의료관광산업, 3D콘텐츠를 활용한 첨단 입체형 전시관 등
- 질적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산업육성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서울시의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 기존의 서울시 8대 전략산업<sup>21)</sup>만으로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창출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기존 8대 전략산업의 현실적인 경쟁력 검토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래형 성장동력산업을 추가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기존의 8대 전략산업 외에 첨단 모바일 및 엔터테인먼트, 뷰티산업, 의료관광 등을 서울시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화산업기반 강화

- 서울시는 연간 1,00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다양한 도시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산업과 MICE(Meeting · Incentives · Convention · Events and Exhibition)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함.
- 관광,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MICE산업 등과 연계하여 도시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체험, 교육, 명소화 전략 등을 통해 다양한 융합 및 차별화 요소를 개발함. 아울러 스토리텔링, 아카이브, 관광리소스 등 다양한 도시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함.
- 서울의 구로 및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산재하고 있는 산업유산, 생산현장, 첨단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생산현장 탐방프로그램 개발, 뷰티산업 인프라 확충 등 서울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대응하도록 함.
- 수도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광역차원의 관광프로그램은 중복투자 및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수도권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함.

## 산학연계 활성화를 통한 융합과 창의성 제고

- 서울시에 세계수준의 대학 및 연구소가 많이 포진해 있는데, 이들은 서울의 우수 인재양성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특히 산업융합시대의 창조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원과 자유로운 연구환경을 보유한 대학의 역할이 핵심적임.
- 또한 서울크리에이티브랩(SCL)<sup>22)</sup>과 같은 오픈플랫폼 형태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하여 산업융합 및 산학연계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의 창출에 활용함.

21)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관광/MICE, IT융합, 바이오메디컬, 녹색산업, 디지털콘텐츠, 디자인/패션

22) 서울크리에이티브랩(SCL)은 전문가, 기업, 연구소, 시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오픈플랫폼 형태의 연구소로 창조성과 분야 간 융합을 바탕으로 도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산업 및 직업군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창조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임.

## 전략 1-2 창의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 상생의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 지원

- 중소기업은 고용조건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여 노동시장 미스매치(부조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일자리의 주요 공급원인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도모함. 이를 위해 글로벌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포괄하는 상생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은 융합 생태계에서 정보·기술 협력, 수익 배분, 분쟁 등을 조절하는 플랫폼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 확대,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지원, 강소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건강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권의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 대도시권은 사람, 자원, 기술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창업초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보유함. 창업기업은 새로운 일자리의 주요 공급원이고, 창업이 활성화되는 지역에서는 기존 기업들의 성장도 돕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에서의 일자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서울의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청년창업교육·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며, 선도벤처기업과 연계한 멘토링 강화 및 글로벌 창업의 활성화 지원 등을 확대함.
- 또한 지역거점별로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형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시니어 창업 지원 및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함.

### 중소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지원 강화

- 미래 성장동력산업 부문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상용화 지원을 확대함. 중소벤처기업은 특정분야에 전문화하는 경향이 강하여 융합부문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융합기술 부문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외 판로지원 확대 등 전 주기적 종합적 지원 강화가 요청됨.

## 전략 1-3 서울형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

- 산업융합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정 산업분야의 선별을 통한 집중적 육성방식(picking winners)보다 다양한 산업들의 융합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의 제조업 기반 일정수준 지속 유지

- 서울시의 노동집약산업(의류, 봉제, 귀금속가공, 가구, 신발, 뿌리산업 등)과 지식집약산업(전자, 정밀가공, 의약, 바이오 등)의 고용비중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데, 산업의 다양성과 대도시권 창업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이들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일정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패션 디자인의 경쟁력도 디자인의 신속한 상품화에 기반을 두고, 기존 노동집약산업 또는 전통산업의 문화·디자인과 연계한 차별화, 지식기반화, 문화상품화 전략도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함.

### 지역특화산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기존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 내 권장업종 활성화보다 대규모 지역개발 위주로 계획되고, 지구 내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등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사업추진이 미흡하고, 입주중인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서울시의 뿌리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지구 내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함.
- 획일적인 용적률 완화 등 개발중심의 인센티브에서 임대자금 지원,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개발방식에서는 대규모 이주와 장기간이 필요한 전면철거 보다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주변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 수복형 정비기법을 적용함.

## 전략 1-4

##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기존 산업집적지의 활성화

## 주요 거점별 R&amp;D 기반 집적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육성

- 서울시 주요 권역별로 연구개발 시설과 기관을 집적하여 혁신클러스터화하고 권역별로 종합적 R&D 지원체계를 구축함.
-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 협력 연구 또는 융합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역의 거점별로 융합 공간(권역별 연합R&D지원센터) 마련을 지원함. 아울러 해외 우수 연구소 유치 및 연구인력과의 교류를 확대함.

## 준공업지역 산업 활성화 종합관리방안 마련

-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전체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업업무나 주거용도 등 다른 용도로 잠식되어, 실제 생산을 위한 공업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준공업지역이 서울의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공간을 마련하고 지역별 산업입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입지를 유도함.
- 또한 향후 산업기반을 보호하고, 무분별하게 타 용도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토지이용 관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함.

## 목표 2 경제주체 간 동방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저하와 고용없는 성장의 지속 가능성으로 인해 산업과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편향에서 벗어나 상생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산층 감소와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양극화 심화, 영세자영업의 과잉 및 고용의 질 하락,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안전망 부재 등의 상황은 기존의 시장경제 이외의 대안 경제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음.
- 사회적경제는 기존의 시장과 국가의 실패를 보완하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사회서비스의 빈자리를 메우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함.<sup>23)</sup>
- 다양한 사회적 협력을 지역기반으로 구체화하여 협력의 경제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사회적경제의 영역이 삶의 질과 고용의 질을 높여나가는 서울 경제의 명실상부한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역밀착형 마을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하며,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도록 함.

### 전략 2-1 공존과 협동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책임조달제 도입을 통한 공공시장의 확대 및 사회적 금융 기반 마련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확대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마련, 계약제도 정비, 공공구매 목표제 이행을 위한 행정지원 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함. 전략적 공공시장의 개발을 통한 유효 수요 창출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공공시장 대응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3) EU,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사회적경제 비중 : GDP의 약 4~7% 수준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비중 : 약 0.4%(기존 협동조합 포함 시 약 1.6%)

-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서울사회투자기금 등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역량을 구축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천 가능한 모델을 개발함. 기존 정책자금 외 민간기금, 지역재단, 시민투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함.

###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중간지원 기능 강화

-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로드맵을 제시해 중장기 인재육성 방향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심화 교과과정 개발, 학습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함.
- 서울시의 교육 인프라(인재개발원, 평생교육관, 서울시립대 등)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온라인 구인·구직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함.
-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광역단위 중간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자치구 단위의 지원센터 및 지역특화사업단을 설치하여 중간지원 인프라를 구축함.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

- 협동조합형, 노동통합형, 사회서비스형 등 유형별로 특화된 신규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유형별로 특화된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함. 아울러 일자리 창출, 사회혁신 모델 개발, 사회적경제 규모 확대 등 의제별로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도록 함.
- 특히 성장기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 클러스터형 사회적기업에는 입주 공간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셜프랜차이징 모델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수기업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함.

### 협동조합 중점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확대

- 지역은 커뮤니티 기반의 붕괴로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 토대가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지역 공동체 및 지역 연대구조의 활성화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조건임.
- 협력적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지역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사회적경제 부문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회복에 효과가 큰 분야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의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하여 안정적 일자리 확대에 기여함.
- 지역과 동네 단위의 보육 협동조합 및 일차 의료강화를 위한 의료생협 활성화, 협동조합형 주택공급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복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은퇴자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추진함.

### 협치적 거버넌스 제도화를 통한 정책 일관성 유지

- 공공부문과 시민사회 간 신뢰 기반의 협치 구조를 공식화하기 위해 서울시-시의회-사회적경제 부문 간 협약(COMPACT)을 연례화하도록 함.
- 매년 사회적경제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공식화하며, 연 단위 평가를 통해 정책 일관성 유지 및 발전방안을 도출함.
- 사회적경제 정상회의를 통해 통합적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서울시 실무부서와 사회적경제협의체 간의 민관회의도 정례화함.

## 전략 2-2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밀착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및 경영지원 컨설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재교육도 강화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브랜드 개발,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지역·업종별 상인단체 협업 등 영세자영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협업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함.
- 특히 전통시장,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상생의 동반성장 전략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 일정 지역단위의 순환형 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SSM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함. 이를 통해 골목상권 입지에서 대형유통업체 출점을 제한하고 골목상권에서는 중소유통업체 간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함.
- 대기업형 SSM에 대한 규제는 영세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서라기보다 다양한 업태의 공존을 통한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임. 지역별로 특화형의 전문유통서비스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유통서비스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임.
- 지역별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업종 및 업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함.



## 활력 있고 매력적인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전통쇼핑이 함께 어우러지는 융합시장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증대함.
- 시장의 전통 및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시장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미지를 쇄신하는 지역특화형 명소화 전략을 추진함.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공동구매, 공동물류, 시설현대화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함.

### 전략 2-3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 확대

#### 사회적경제 영역에 공공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과 역할 위임

- 사회 구성원들의 최적복지를 위해서는 국가 및 공공복지 확대와 아울러 지역형 복지 시스템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맞춤형 복지는 생활공동체 관계망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역 내 상호돌봄시스템 구축은 지역 내 시민들에게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해나가는 데 기여함.
- 사회복지 서비스 위탁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해 나갈 경우, 지역 내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고, 대상자의 고립과 관계 단절 등을 방지할 수 있음.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약을 추진함.

#### 지역 단위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 지역과 생활이 결합된 지역 내 사회경제적 토대가 활성화되면 지역 내 고용이 창출되어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됨. 특히 협동조합은 지역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보육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임. 지역과 동네 단위로 보육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보육분야에서 여성의 전문적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동시에 보육부담에서 해방된 여성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찾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선순환의 고용률 확대가 가능함.

### 공공유희공간을 활용한 지역일자리 특화지구 조성

- 지역일자리 특화지구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조직 등이 지역 내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당사자 조직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해가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
- 지역일자리 특화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지역일자리 특화지구는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상시적 공동협력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전략적 지점이 될 것임.
- 따라서 특화지구는 방치된 국공유지 및 지역재생이 필요한 토지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되, 시범지역 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확대함.

### 목표 3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 산업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 것임.
- 이러한 사람중심의 활력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며, 인적자원 개발에 노력하고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글로벌 시대에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서울에 들어오는 모든 창의적 인재가 손쉽게 정착할 수 있는 글로벌 생활환경을 갖추어야 함.
-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생활과 일자리의 통합공간 형태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과제임.

#### 전략 3-1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한 창조계층 확대

##### 창의적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한 도시환경 구축

- 미래 산업 및 좋은 일자리의 핵심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적 인재들이 몰려들 수 있는 지역환경을 갖추는 데 있음. 이를 위해서는 3T, 즉 재능있는 인력(talent), 기술기반의 창조적 시스템(technology), 도시의 개방적 환경과 관용성(tolerance)이 잘 갖추어진 창조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임. 도시계획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은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 수 있는 도시 인프라와 어메니티(amenity)를 확충하는 것임.

##### 문화, 교육 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학습도시화

- 시민의 창조성, 자발성이 고양되도록 하는 다양한 학습지원시설과 제안창구를 마련함.
- 서울시의 주요 경제거점뿐만 아니라 동네 단위로도 크고 작은 도서관과 정보문화센터를 설립하여 학습의 생활화를 도모함. 서울시의 곳곳에 산재한 대학과 고등교육시설들이 개방형 평생학습관으로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함.

##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체계 개선

- 일자리플러스센터의 확대 개편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산업의 인재 공급시스템을 구축함.
- 산업기능인력 수급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립직업전문학교의 교육 체계를 권역클러스터의 인력수요 맞춤형으로 개편함.
-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기술 및 시장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

## 전략 3-2 세계인이 일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환경 조성

### 경쟁력 있는 글로벌 경제거점 공간 창출

- 서울이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의 종사자가 활동하기 편리한 열린 공간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있는 업무 환경과 생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한양도성, 영등포·여의도, 강남을 21세기 서울의 지식서비스 산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인 국제기능 중심지로 육성함.
- 기존 도심인 한양도성은 국제문화, 영등포·여의도는 국제금융, 강남은 국제비즈니스 기능에 특화하여 글로벌 경제활동 거점 공간을 마련함.
- 이들 3대 거점에 도시의 중추기능 및 국제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용도관리를 함. 즉 국제기구 및 다국적기업 등 글로벌 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편리한 업무환경 및 주거문화공간을 조성함.

### 해외 우수 인재들의 정착 지원 강화

-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설과 인포메이션 센터 등을 주요 거점별로 설치하고,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등을 활성화하여 인적자원의 연계도 효율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 외국인 인재들에게 친화적인 거주지를 조성하고, 일시적 방문자들에게도 편리한 글로벌 서울로 만들 필요가 있음.
- C&D(Connect & Development) 구조 기반 다국적기업 및 국제적 인재 유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 원스톱 지원 등 개방형 선순환구조를 구축함.

## 전략 3-3

##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을 통한 21세기형 도시경제 환경 조성

## 21세기형의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

- 21세기형의 도시는 삶, 일, 여가, 그리고 자연이 공존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고 지식경제를 담아낼 수 있는 모자이크 도시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생활과 일자리가 함께 하는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보행 중심의 도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은 생활권별로 지역적 특색을 갖는 공간을 창출하고, 생활권별 공동체에 기반을 둔 명소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특색 있는 통합 공간으로 기능하게 됨.

## 압축, 복합, 입체형의 도시공간 조성을 통한 인간성 회복

- 시민들의 관점에서 콤팩트도시는 생활환경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만들어 내고 커뮤니티(communitiy)도 형성함으로써 도시성과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 콤팩트도시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고 온실가스(green house gas) 배출을 줄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음.
- 콤팩트도시의 장점을 최대화 하는 동시에 비배타적이며(inclusive), 포용적이고(embracing), 그리고 시민들이 도시에서 삶과 일을 누리는 비용이 적절한(affordable)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 21세기 도시화경제의 외부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용도 간 분리의 원칙에서 벗어나, 보다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공간을 3차원적으로 이용할 경우, 보행자 안전, 보차분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 향상될 수 있음.

## 핵심이슈 3 |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목표체계 : 3개 목표, 11개 전략

3개 목표		11개 전략
목표1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	1-1 역사적 특성이 드러나는 도시공간구조 형성 1-2 시민의 역사자원 접근성 개선 1-3 역사자원의 시간적 공간적 확대 1-4 실행력 있는 역사보전의 추진
목표2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 관리	2-1 자연경관의 보호 2-2 역사경관의 보전과 관리 2-3 가로경관과 시가지경관의 관리 2-4 시민과 함께하는 경관관리 추진
목표3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3-1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 조성 3-2 문화로 특화된 지역발전 도모 3-3 문화생태네트워크 형성

### 1) 현황과 과제

#### 도시의 이미지가 도시를 결정

- 세계의 우수한 도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도시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 왔음. 이러한 이미지 구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도시가 가진 자연과 역사, 그리고 시민들의 삶임.
- 지난 40여 년간 서울의 급속한 변화는 한편으로 한강과 강남 등 새로운 이미지 요소를 창출하였지만, 다른 한편 철거재개발 등으로 그동안 지녀온 역사적 이미지가 교란되고 훼손되는 아픔도 겪었음.
- 이제 서울은 역사성이 있는 한양도성지역이 그 특성을 드러내고, 다른 지역들도 지역마다 역사와 생활이 드러나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

## 2) 기본방향

- 서울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는 산과 물, 그리고 그 위에 형성된 역사적 자원을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기본 방향임. 이를 위하여 역사자원과 도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전통 및 역사와 현대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함.
- 나아가 서울은 시민과 사회의 변화된 요구를 반영하여 문화활동이나 시설이 그 내용과 접근성에서 참여와 교류가 가능한 지역밀착형 문화환경을 지향하는 즐거운 문화도시를 추구해야 할 것임.

## 3) 주요지표

- 서울시는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목표, 11개 전략을 설정하고 목표와 전략의 실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기반시설수, 외국인 관광객수를 주요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함.
- 문화환경 만족도는 서울시민의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2013년 65점 수준에서 2030년 90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문화기반시설수는 인구 10만명당 확보된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의 총수를 의미하며, 2013년 2.8개/10만명에서 2030년 4.5개/10만명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관광객수는 관광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의 수로 2013년 약 800만명에서 2030년 2,000만명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함.

〈표 3-4〉 핵심이슈 3의 주요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3	2020	2030
문화환경 만족도 (점)	65	75	90
문화기반시설수 (개소/10만명)	2.8	3.5	4.5
외국인 관광객수 (만명)	800	1,300	2,000

■ 문화환경 만족도 = 15세 이상 서울시민의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한 만족도

출처 : 서울서베이, 2012.(10점 척도를 100점 척도로 조정하여 사용)

■ 문화기반시설수 = 서울시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총수/서울 총인구 × 100,0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2.

■ 외국인 관광객수 = 관광 목적 입국 외국인 수 × 외국인 서울방문 비율(2012 외국인 서울방문 비율 82.5%)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목표 1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

- 서울은 기원전 18년 백제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일대에 도읍을 정한 이후, 고려시대 강북지역의 남경과 조선시대의 한양을 거쳐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에는 다양한 시대에 걸친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으며 이들은 서울의 자연지형과 함께 역사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시행되어온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러한 역사적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으로 진행되어 역사적 도시조직의 멸실을 가속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문화자원들이 사라지거나 훼손되었음.
- 그동안 도시의 역사자원 보호는 주로 조선시대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이미 조선시대 이후 100여년의 근현대의 시간이 흐르며 오늘의 서울을 견인한 많은 근현대 역사유산들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함. 이들은 우리의 생활과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아직 그 가치를 깊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나아가 백제의 유적과 고려의 유적도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잊혀지거나 훼손된 2,000년의 도시역사를 회복하여 오늘의 도시생활을 풍부하고 윤택하게 하여야 할 것임. 앞으로 조선시대의 역사문화재 뿐만 아니라 한성백제와 고려시대의 역사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함. 나아가 지난 100년의 근현대화 역사유산에 대하여도 평가와 보호 작업이 시작되어야 함. 이를 통하여 서울은 시간·공간적으로 깊고 풍부한 역사문화도시가 될 것임.
- 서울의 내·외사산과 하천 등 자연요소는 단순한 자연생태를 넘어 우리의 기억에 생생히 기록된 역사적 요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한양도성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벗어나 백제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을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적인 쉼을 가지고 있는 역사도시로서 서울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자원을 발굴·보존·관리하도록 함.



## 전략 1-1 역사적 특성이 드러나는 도시공간구조 형성

### 강북지역을 역사문화중심지역으로 정립

- 강북지역은 서울의 공간적 기원이 되었던 조선의 수도 한성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한양도성지역에는 궁궐, 종묘, 사직단, 도성 등 조선의 주요 역사문화자원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성 주변 홍제천과 중랑천으로 한정된 성저십리지역과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교역이 발달한 경강지역에도 많은 유물과 유산이 입지하고 있음.
- 다양한 시대에 걸쳐 많은 역사문화유산이 위치하고 있는 강북지역은 세계적인 역사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화·육성함. 서울시 전체지역은 한강을 중심으로 마포나루, 한강진, 백제유적 등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여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높여가도록 함.

### 한양도성지역을 역사도심으로 가꾸기

- 주요 문화재들이 집중되어 있는 한양도성지역은 역사도심으로 가꾸어나가도록 함.
- 도성 내 상업지역에 위치한 행정·업무·상업 등 도심의 중추적 기능들도 역사도심과 조화를 이루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관리해나가도록 함. 이러한 기능들은 글로벌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용산지역과 연계되며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함.

### 역사자원과 주변의 도시계획적 관리

- 창덕궁, 종묘, 왕릉 등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품격과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재뿐만 아니라 경관과 용도 등 문화재 주변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한양도성지역에서는 도심부 전체에 걸쳐 있는 하천을 바탕으로 형성된 유기적인 도시조직의 특성과 분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철거재개발방식을 가능한 억제하고, 도심 특유의 도시조직을 살리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해나갈 수 있는 소단위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역사문화유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등 인접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정비해나갈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하도록 함.

## 전략 1-2 시민의 역사자원 접근성 개선

### 주요 유적지의 역사문화거점 조성

- 조선시대의 역사문화유산이 담겨져 있는 한양도성지역에서부터 백제 위례성의 역사문화유산이 위치한 풍납토성과 고구려 남진정책의 역사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아차산성과 보루군, 그리고 암사동과 역삼동의 선사주거지 등에 이르기까지 2,000년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유적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거점을 조성하도록 함.

### 다양한 역사문화프로그램과 축제 개발

- 역사문화거점지역<sup>24)</sup>을 중심으로 고도 서울의 다양한 역사문화를 쉽게 접근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민속놀이체험 등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동문화축제, 인사전통문화축제, 한성백제문화제 등 서울의 다양한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역사문화 안내 및 홍보체계 마련

- 역사문화거점지역은 시민들과 외국인 방문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역을 중심으로 안내체계를 구축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해당 지역의 주요 역사문화자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지석·안내판,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함.
- 초·중등학생 및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지역의 역사 및 경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교재를 마련하고, 현장교육을 확대하도록 함.

## 전략 1-3 역사자원의 시간적 공간적 확대

### 역사적 지평을 확대하여 다양한 역사자원 발굴

- 서울지역에는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을 넘어 선사시대에서부터 시작하여 백제 위례성과 고려 남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역사의 지평을 넓혀 이들 자원들을 발굴하여 보전·관리해나갈 수 있는 계획 및 관리방안을 마련함.

24) 한양도성 내 8개소 : 경복궁주변, 창덕·창경궁 및 종묘주변, 정동, 북촌·인사동, 남촌, 종로·청계천 주변, 성균관·대학로주변, 남산 일대  
한양도성 외 6개소 : 부암·평창, 성북, 석촌·풍납, 암사동, 아차산일대, 용산

- 이미 발굴된 역사문화유산에 대해서는 표지석 등을 설치하고, 중요 역사유산에 대해서는 회복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리의 틀을 설정하도록 함. 특히, 한양도성지역은 조선조의 역사뿐 아니라, 대한제국의 자주적 근대화의 역사, 항일투쟁과 지식인들의 고뇌가 담겨진 경성의 역사, 그리고 해방이후 국가 형성을 위해 분투했던 정치인들의 생가와 외교무대 등 다양한 역사문화유산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역사적인 커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요소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역사문화재들 외에도 서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내사산과 외사산, 청계천 및 지천 등 자연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자연요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근현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도시평면 등 도시형태와 오래된 간판과 계단, 골목길 등 다양한 생활문화유산도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함.

## 전략 1-4

## 실행력 있는 역사보전의 추진

### 역사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2000년에 걸쳐 형성된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존·관리해나가기 위하여 역사유산자재은행 설치, 기금화, 트러스트 등 다양한 실현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재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의 연계

-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과 연계하여 역사자원을 활용하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도록 함.

## 목표 2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 관리

-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과거와 현재의 건축물과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를 연계하여 도시 고유의 경관특성을 유지·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경관을 형성해 왔음.
- 서울의 경우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경관과 내사산으로 둘러싸이고 도시의 중심에 하천이 흐르는 독특한 자연경관, 그리고 현대적 도시경관 특성이 모두 나타나는 유례가 드문 고유의 경관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 그간 서울은 압축성장 시기의 과도한 도심 재개발과 수변주거지 개발로 서울 고유의 역사·자연조망경관이 많은 부분 훼손되었음. 그러나 이는 오히려 경관가치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경관관리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 이상의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새로운 경관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
- 이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제도와 수단은 오랜 제도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한 엄격하고 정교한 체계를 완성한 선진도시와 달리, 아직은 권장유도 중심의 느슨한 단계이며, 주요대상도 물리적 혹은 시각적 경관보전과 관리에 머물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면 개정된 경관법은 관리수단의 집행력과 정밀한 관리를 상당부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토대로 역사·자연·시가지경관을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를 체계화하고 시각 중심의 경관관리를 넘어 시민의 일상생활과 문화, 장소의 역사와 이야기를 포괄함으로써 시민이 몸과 마음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함.

### 전략 2-1 자연경관의 보호

#### 내·외사산 및 구릉지의 경관특성 관리

-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고 시각적 배경요소로서 서울다움을 형성하는 내사산 및 외사산<sup>25)</sup> 주변의 경관관리를 위해 산의 자락을 이루는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산에서 시가지로 지형과 녹지가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시가지내에서 풍부한 자연과 녹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25) 내사산 : 백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 외사산 : 북한산, 덕양산, 용마산, 관악산

- 서울의 아름다움을 도시 속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망점·축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함. 특히, 서울의 상징인 북악산이나 남산으로의 조망을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산이 보이는 조망축 및 조망점이 중첩되는 주요 도로인 세종대로, 우정국로, 돈화문로, 삼일로, 한강로, 세운상가 축 등을 중심으로 조망경관 형성구역으로 설정하고, 조망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함.

### 한강과 주요 지천의 수변경관 관리

- 수변지역은 주거중심 토지이용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경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조망, 지형, 도시구조 등 한강 및 주요 지천의 구간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된 높이기준 및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함.
- 밤섬 등 한강의 섬은 한강 생태계의 장(場)이자 한강 고유의 수변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경관자원으로, 생태회복의 거점으로서 자연자원의 보호와 함께 한강의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하천의 원형경관 대상으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고려한 경관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 생태녹지축과 연계한 경관관리

- 도시화에 의해 단절된 녹지축의 지속적인 연결로 도시의 생태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동시에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남북녹지축, 내·외사산축 등의 보호로 자연경관으로 대표되는 서울의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부각시킴.

## 전략 2-2

## 역사경관의 보전과 관리

### 성곽도시 서울의 경관회복

- 옛 서울 한양의 경계 및 도성구조의 역사적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서 서울 한양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울 한양도성을 보존하고 멸실·훼손된 부분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서울 한양도성의 사대문을 중심으로 성문 주변지역의 관문경관 형성을 위해 서울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보행동선 활성화 등을 추진함.

## 시간적 층위가 중첩된 경관의 보호

- 시간적 층위가 중첩되어 있는 경관을 중시하며, 정동지구(대한제국기), 명동지구(일제강점기), 관철동지구(전재복구기) 등 시대별 특성이 드러나는 도시조직과 형태를 보호하며 관리함.
- 역사문화거점별 경관형성계획 수립을 통해 역사성 및 정체성을 나타내는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의 보전 및 활용방안, 네트워크 구축, 탐방노선 설정 등 역사문화거점의 특성과 이용 강화를 통해 역사적·장소적 가치를 향상시킴.

### 전략 2-3

### 가로경관과 시가지경관의 관리

#### 특성가로 및 보행밀집가로의 경관관리

- 서울의 주요 상업가로 등 가로경관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가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경관특성을 유지·강화함. 이를 위해 가로시설물의 복합화, 지중화 등 보행영역 침해를 최소화하고 건축물 전면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함.

#### 주변과 조화하는 건물디자인

- 일반적인 시가지경관의 문제는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는 건축물 디자인에 의한 것으로 디자인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특히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주변 지역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나홀로 아파트 등의 건설을 지양함.
- 용도지역·지구에 의해 높이가 관리되는 구릉지의 저층 단독주택은 가급적 현재의 주택유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함.
- 건축물의 신축·개선 시 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를 유도하도록 함.

####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

- 인공조명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체, 동·식물, 생태계, 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주고 있는 빛공해를 예방하고 과다한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적인 인공조명 관리를 위해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함. 빛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1종~제4종(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한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빛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울의 밤 정체성을 확립함.
- “서울특별시 도시조명관리조례”를 바탕으로 제도적 근거와 세부기준을 마련함.

## 공공디자인 강화를 통한 도시환경 질적 업그레이드

-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다양한 가로시설물, 도시의 색채, 서체, 도시상징물 등 도시의 이미지와 품격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공공부분의 디자인을 토털디자인(Total Design)차원에서 개선하고, 도시정체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분 디자인이 통합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추구함.

### 전략 2-4 시민과 함께하는 경관관리 추진

#### 장소의 이야기가 있는 경관관리

- 눈에 보이는 경관의 보전·형성·관리 이전에 현재의 경관이 형성되기까지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기는 장소 만들기를 중점 추진함.
- 장소를 중심으로 장기간 자연스럽게 형성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장소의 고유성을 공유하고, 문화재·사적으로 지정·관리되는 것은 아니나 인근 주민들에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와 지물 등은 주민 스스로 가꾸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도록 유도함.

#### 시민참여 기회 확충

- 경관계획을 통해 구축된 경관관리체계의 틀 안에서 공공주도의 하향식 경관관리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적인 경관관리 이행을 유도함.
- 도시공간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경관협정 및 주민협정 등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와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시민 스스로 확립해 나가도록 유도함.

#### 규제를 넘어 관계·완충·협력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 규제중심의 경관개선·관리에서 경관협정, 인센티브,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등의 기존 계획 활용을 통해 관계·완충·협력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함.
- 시민들 사이에 공유된 장소의 기억과 고유성을 지역별·장소별 통합디자인 마련 시 반영하도록 유도함.

### 목표 3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 이제 문화는 대규모 홀에 많은 사람이 모여 대중적으로 즐기는 것과 함께, 소규모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상호 교류하는 것을 통하여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음. 또한 세계적이며 일반적인 문화의 향수와 함께 지역적이며 개별적인 문화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울은 그동안 대규모·대중적인 문화시설과 활동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지역적이며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측면의 문화향수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편임. 나아가 사회의 다문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와 시설이 필요함.
-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고 생활 속에 가까이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과 시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도시가 국제화·다문화화 하는 것에 발맞추어 이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인적, 공간적 여건조성이 필요함. 나아가 이러한 독특한 지역과 생활문화는 방문객 등의 증가로 그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전략 3-1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 조성

##### 생활 속 문화공간 창출

-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함. 지금까지 시설중심의 문화기반 확충에 주력하였다면, 앞으로는 일상적인 공간들을 문화화 하는데 주력함. 즉, 공원이나 빈터, 가로 등 다양한 일상 생활공간 내에서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 및 생활공간 혁신에 주력하며 이들 공간 내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함.

##### 온·오프 공동체 활동 활성화

- 오늘날 시민은 문화의 일방적인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이자 창작자임. 따라서 각 시민이 자신의 취미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형태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
- 특히 다양한 지역 마을문화 기반시설(마을예술창작소,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을 확충하여 지역단위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고유한 문화정체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생활문화와 여가형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고 변화하는 시민문화활동에 적합한 공공공간을 개발함.

### 차별없는 문화서비스 제공과 문화민주주의 구현

- 모든 시민은 동일한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특히, 경제적인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노인 등이 필요한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들을 위해 기존의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필요한 시설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함.
-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의 소수문화가 발현될 수 있도록 공공문화시설의 접근편의성을 제고함.

## 전략 3-2

## 문화로 특화된 지역발전 도모

### 고유성에 기초한 특화된 지역발전

- 오늘날 지역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성에 바탕을 둔 고유한 미학을 창출하는 것임. 즉,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미학을 갖는 것이 오늘날 지역발전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즉, 그 지역의 역사와 주민 문화활동에 기초한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켜야만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음. 이에 따라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발전 및 이에 바탕을 둔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추구함.

### 문화적 재생과 활성화

- 지역의 재생과 혁신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임. 문화를 통해 그 지역의 미학을 새롭게 하고 가치를 제고할 때만이 그 지역을 새롭게 할 수 있음.
-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 많은 도시는 예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역발전을 추구함.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에 예술가를 유입, 지역을 혁신하고 새로운 미학을 조성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현대도시의 전략임.
- 따라서 향후 도시발전에서 예술에 바탕을 둔 지역재생과 활성화에 주력하며, 이를 위해 지역에 예술적 혼을 불어넣는 공공예술가 및 기획자 육성에 주력함.

## 문화예술인의 육성과 지원

- 모든 시민이 즐기고 나누는 풍요로운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발전이 절대적임. 이에 따라 다양한 지원제도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 육성에 주력함.
- 우선, 창작공간을 확대하여 예술인들이 보다 편안한 안정감 하에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며, 다양한 유형의 예술기금을 조성하여 예술인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함.
- 이어 다양한 예술기반형 지역혁신 및 생활혁신 사업을 추진, 시민들이 보다 가깝게 예술을 느끼고, 예술을 통해 더욱 풍성한 문화적 삶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함.

### 전략 3-3

### 문화생태네트워크 형성

#### 전문화·특화된 문화시설 확충

-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장르별 특성에 기초한 전문화·특화된 시설이 필요함. 지금까지 시설확충이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는데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장르별 특성에 기초한 전문화·특화된 시설 확충에 주력함.
- 특히,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대중문화 시설, 국악의 발전을 위한 국악관련 시설, 예술창작 및 연습을 위한 시설 등 기초기반 및 취약장르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희시설(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개발 시 관련 시설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임.

#### 문화밀집지역의 보전·육성

- 서울에는 문화자원이 밀집된 다양한 ‘문화자원밀집지역’이 존재함. 이들 지역을 보전·육성하여 문화생태계의 보전·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서울의 관광활성화에 주력함.
- 주요과제로 9대 밀집지역에 대한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표 3-5〉 주요 문화자원 밀집지역

지역	밀집요소	위치	거점 및 공공시설	밀집현황
대학로	공연장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 일대	아르코극장, 아르코미술관, (구)예총회관	공연장-99 극단 및 단체-77 예술관련 학교-8 문화재 -7
정동-태평로*	공연장, 전시장 및 역사문화 자원	중구 정동 및 태평로, 종로구 신문로일대	경희궁, 덕수궁 등 궁궐, 시립미술관, 정동극장, 세종문화회관,	공연장-9 박물관-6 미술관-4 영화관-3 문화재-20
인사동	전시시설 및 공예품점	종로구 관훈동 197-4일대	인사동쌔지마당, 공예문화진흥원, 경인미술관,	화랑-140 연구소-3 단체-4 문화재-5
삼청동*	전시시설	종로구 소격동, 삼청동 일대	정독도서관, 월전미술관 아트선재센터, 국립민속박물관	화랑-71 박물관-13 미술관-5, 문화재-21
평창동*	전시시설	종로구 평창동 일대	토달미술관, 가나아트센터	박물관 문화관-3 미술관-3 문화재-12 화랑-3 학교-3
청담동*	전시시설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	갤러리아백화점	화랑-37 공연장-4 영화사-36
홍대	복합 다원	서교동, 동교동, 창전동 일대	홍익대학교	소극장 및 클럽, 화랑 및 미술학원,
문래동*	작업실	문래3가동 철공소지대	애미집센터 (AemeeZip Center)	예술가 작업실 30여개
신사동*	복합(예술 기반산업)	신사동, 가로수길	려갤러리, 갤러리SP, 떼아트르파우	공연장-5 화랑-26 영화관-2 영화사 53
삼각지*	화구화방	한강로1가 일대	가 갤러리	화실/공방-7 화랑/그림판매-37 화구화방-15
서초동*	악기상가	서초3동 예술의전당 앞	예술의전당, 한원미술관	악기상-79 공연장, 전시장
낙원상가*	악기상가	낙원상가	낙원상가	악기상 240여개

주 : \*는 9대 밀집지역임.

## 5대 생활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축 구상

- 도심권 : 서울상징문화 지역
  - 한양도성 일대의 역사를 보전하고 각 지역을 문화적 공간으로 개발하여 서울의 문화적 중심이자 국제문화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킴.
  - 주요과제 : 한양도성 일대 역사문화의 보전·발전, 다양한 문화공간개발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 동남권 : 대중문화-한류문화축
  - 강남·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권을 다양한 대중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시킴.
  - 주요과제 : 대중음악 관련 시설 및 공연장 확충, 연예 및 디자인 산업발전기반 구축

- 서남권 : 디지털 문화축

- 가산디지털 산업단지 및 마곡지역을 중심으로, 서남권을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는 지역으로 육성함.

- 주요과제 : 디지털 콘텐츠 산업단지 발전지원, 디지털 콘텐츠 전시장 및 체험관 등 디지털 문화기반 구축

- 서북권 : 디지털 미디어 및 창의·창작문화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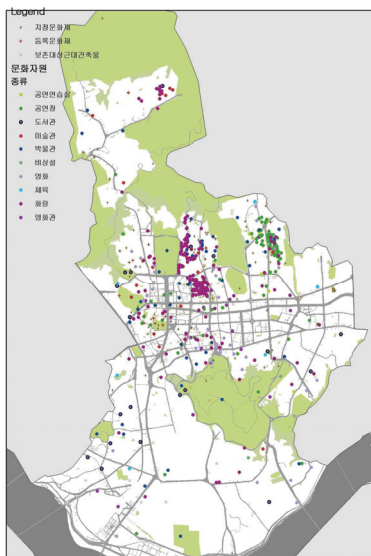
- 상암·수색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화와, 홍대·신촌지역의 창의·창작문화 지역을 발전시킴.

- 주요과제 : 상암·수색지역의 발전·육성

- 동북권 : 대학문화 및 생활·생태문화축

- 서울의 동북권을 대학생활과 생태가 살아있는 대학생활·생태문화축으로 발전 육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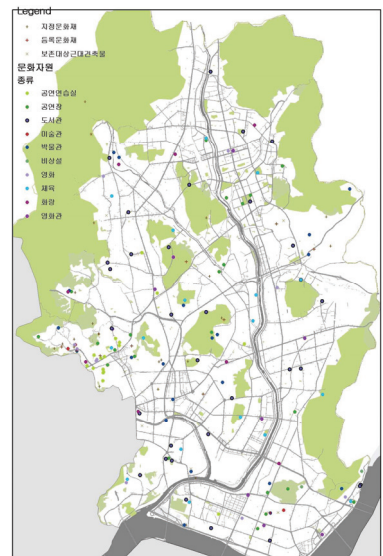
- 주요과제 : 다양한 대학문화 및 생활문화공간 개발, 공원기반 생태문화축 구성



〈그림 3-2〉 도심권 문화자원 분포 현황



〈그림 3-3〉 서북권 문화자원 분포 현황



〈그림 3-4〉 동북권 문화자원 분포 현황



〈그림 3-5〉 서남권 문화자원 분포 현황



〈그림 3-6〉 동남권 문화자원 분포 현황

## 핵심이슈 4 |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목표체계 : 3개 목표, 11개 전략

3개 목표		11개 전략
목표1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 조성	1-1 공원 인프라 선도 도시로의 이행 1-2 도시기후 조절 능력 강화 1-3 도시 내 자연생태계 보전·회복과 공익기능 증대 1-4 도시생활 환경의 질적 향상 및 최적화
목표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	2-1 에너지 위기 대비 관리체계 고도화 2-2 저탄소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정착 2-3 자원 리사이클링 확대
목표3	다 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3-1 위험정보의 획득 및 활용체계 고도화 3-2 조기대응 신속성 확보 및 역량 증진 3-3 도시 생활 안전 거버넌스 확대 3-4 기상 재난의 예방 및 환경치수 역량 향상

### 1) 현황과 과제

#### 생태환경의 고립 및 단절

- 서울의 도시표면은 주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여 있어 생태를 단절시키고 열섬현상 등 도시기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
- 고도성장기에서 안정화기로 접어들고 있는 서울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함.

#### 자원 소모형 도시발전의 한계

- 서울은 자원소모형 도시발전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의 에너지자원의 가격 상승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부담이 되고 있음.

#### 도시 위험요소의 증가

- 도시기능이 고도화되고 집중됨으로써 재난 시 피해가 증폭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재난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 또한 기타 고령화 및 거주외국인의 증가는 안전과 환경에서 또 다른 도전요인이 되고 있음.

## 2) 기본방향

-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란 단절되고 고립된 도시의 생태환경을 회복하고 저탄소 소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가능한 구조로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각종 위험과 불안요소를 관리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건전성을 높인 도시임.
- 이를 위해 서울의 공간을 바탕으로 시민과 자연이 잘 조화되어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보장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도시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배려’라는 큰 틀의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세부전략을 설정함.
- 핵심이슈의 실현을 위해 다 함께 지켜주는 안심도시, 세계적인 공원 선도형 도시,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 순환형 도시를 주요 목표로 설정함.

## 3) 주요지표

-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목표, 11개 전략을 설정하고 목표와 전략의 실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비율,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재난 인명피해자 증감률을 주요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함.
- 공원서비스 소외지역<sup>26)</sup> 비율이란 공원 및 하천에서 반경 250~500m를 넘어서는 곳에 위치하여 공원 이용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의 면적 비율을 의미하며, 2013년 서울 전체의 4.6%인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비율을 2030년에는 0%로 만들어 서울시 전 지역이 공원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sup>27)</sup> 이용률은 서울에서 생산되는 전체 에너지량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로 2013년 2%를 2030년에는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표를 관리함.

26)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도출과정 (미조성 공원면적 제외, 2011년 기준)

[1단계] 국립·도시자연·근린·묘지·역사·기타공원은 반경 500m,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은 반경 250m 이내를 공원서비스 범역으로 설정

[2단계] 한강 및 4대 지천(중랑천·불광천·안양천·탄천) 반경 500m, 청계천 및 양재천 등의 지류하천 반경 250m 이내는 공원서비스 범역으로 설정

[3단계] 사람의 거주/활동이 없는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부지 등은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에서 제외

27) 신재생에너지 :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가스,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소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 재난<sup>28)</sup> 인명피해자 증감률은 자연현상, 인적사고 등 재난으로 인해 일어나는 연간 사망자 및 부상자수의 변동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2030년에는 2013년의 재난 인명피해자수 대비 20% 정도 재난 인명피해자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함.

〈표 3-6〉 핵심이슈 4의 주요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3	2020	2030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비율 (%)	4.6	2.0	0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	2	15	30
재난 인명피해자 증감률 (%)	-	-10	-20

-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비율 = 공원 및 하천으로부터 250~500m 초과하는 지역 면적 / 서울시 전체 면적 × 100
-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서울시 전체 에너지 생산량 × 100
- 재난 인명피해자 증감률 = (목표연도 인명피해자수 - 기준연도 인명피해자수) / 기준연도 인명피해자수 × 100

28)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

## 목표 1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 조성

- 도시발전의 결과 공원으로 대변되는 녹지환경은 도시 기능 내에서 분절된 공간으로 인식되었는데, 공간적·기능적으로 단절된 공원들을 도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커뮤니티 활동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필요함.
- 도시 표면의 상당부분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있어, 열섬현상으로 생활온도 상승, 국지적 폭우 등 도시기후가 극단화됨에 따라 재해 가능성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
- 그간의 개발 중심 패러다임으로 인해 서울의 도시생태계가 취약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자연정화기능이 약해지는 등 문제가 생겨 도시의 생태순환 시스템을 건강하게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
- 공원의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하여 공평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품격 있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원이 사회적·문화적 가치의 생산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함.
- 대도시의 기능유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도시 내 수질 저하와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등에 따른 대기오염, 자연정화에 필요한 녹지의 부족과 훼손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음.
-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물, 공기, 녹지와 같은 자연환경 뿐 아니라 소음, 쓰레기 등 생활환경 요소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음.
- 도시공간의 전체 구조에 생명과 소통·배려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원개념을 도시전체에 적용함으로써 주요 환경요소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립된 공원들을 도시기능과 연계하여 지역의 건전성을 회복함.
- 이를 위해 공원인프라를 확충하여 도시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시기후 극단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도시생활 환경을 공원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함.



## 전략 1-1

## 공원 인프라 선도 도시로의 이행

## 공원개념의 확대와 공원이용의 형평성 개선

- 현재의 공원은 도시와 분리된 휴식공간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도시와 공원의 유기적인 네트워크화를 통해 기능을 높이고 도시민의 공원수요 충족을 최대화하기 위해 옥상, 학교, 골목, 가로, 공개공지 등을 공원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생활공간 전반으로 공원개념을 확대함.
- 도보로 10분 거리 내 공원이 없는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내 공원 녹지 확보로 균형적인 공원서비스를 공급함.
- 생활권역별 지역특성과 이용형태에 맞는 테마를 부여한 사회문화적 안심공원을 조성함. 기존의 공원에 생활권역별 지역특성과 이용형태에 맞는 테마를 부여하여 범죄와 안전의 강화, 사회문화적 가치의 부여, 사회적 약자의 배려, 생태적 복원을 통한 시민의 환경체감 기회 부여 등의 특성을 가진 공간으로 변모시킴.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에 대응하여 공원별로 단계적이며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하도록 함. 미집행 도시공원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공원별로 공원의 활용성이 높은 토지를 우선 보상하고, 공원의 기능 제고를 위해 면적(面的)으로 연계되도록 보상함. 보상이 어려운 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인 방안과 비재정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 기업, 시민단체 등의 기부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민관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규제지역은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공원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함.



〈그림 3-7〉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의 공원 확충 구상

## 공원의 역할 강화로 사회·문화 가치 창출 확대

- 공원이 시민생활 전반을 담당하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원의 운영관리에 시민참여를 확대함.
- 단순휴식공간으로서 기능하던 공원에 도시기능을 접목하여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축제·문화프로그램 활동 공간으로서 공원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생산기능을 제고함.
- 시민들의 환경체감기회를 확대하고 녹색친화적 시민문화를 형성·발전함. 기존의 공원개념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이 체험을 강화할 수 있는 녹색 공간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을 확대하고, 시민 누구나 녹색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함.

## 생활권 녹지보존·확대를 위한 제도·관리기반 구축

- 시민이 주도하는 녹색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 꽃으로 피다’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녹색환경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서울시 공원화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녹화지원 시스템을 구축함.
- 공원정책의 지속적인 전략 개발과 추진을 위해 푸른도시선언(2013.4.1) 등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찰함.
-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공원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로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형성의 장을 마련함.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각적 녹지량 증대를 위한 생활주변인 골목길, 아파트, 학교, 다중이용지 등의 녹화 확대 및 민관연계 도시녹화사업인 녹지조성, 도시구조물 녹화, 나무나눔, 나무분양 등으로 녹지량을 확충함.
- 가로수 사이 녹지 조성, 가로화단 조성 및 보도 옹벽, 분전함 등 구조물 녹화를 연계 조성하여 녹지 공간 조성효과를 최대화하고, 보도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함으로써 생활권에서 시민이 누리는 녹지서비스를 증대함.
- 도시공원의 다양한 제도인 민간공원, 도시공원구역, 자연녹지지역 등을 활용하여 녹색공간을 보존함. 녹지충량제 등 녹지보존을 위한 제도 검토가 필요함.
- 다양한 공원녹지 정보 시스템구축으로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효율을 증대함.

## 전략 1-2 도시기후 조절 능력 강화

### 도시표면(피복)의 친환경성 강화

- 물이 통하지 않는 서울시의 지표면을 물이 통하도록 투수층화함으로써 도시기온의 극단화를 방지할 수 있음. 물순환이 단절된 서울의 불투수면을 빗물이 스며들도록 투수면을 확보하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방안을 확대함.
- 도시표면의 녹지공간 확대(수평적 녹지화)와 고층건물의 녹지공간 활성화(수직적 녹지화)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도시피복의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도시구조를 그대로 두고, 현재의 도시구조 하에서 녹지공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의 전환이 필요함. 예를 들어 공원 내부 주차장 등의 그린화 등 실질적 녹지공간 확충이 바람직함.

### 열섬현상 저감·완화

- 여름이면 서울의 도시표면온도의 상승으로 시민의 생활환경이 저하됨.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바람길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구조의 검토가 필요함.
- 열섬 현상을 저하시키기 위해 공원·버스정류장 등에 분무(mist spray) 도입 검토가 필요함.
-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폭염 시 도로 물청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표면의 온도 상승을 방지해야 함.

### 기후변화 모니터링 강화

- 기후영향 시뮬레이션 모델링 평가를 바탕으로 현재의 도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요청됨.
- 기상청의 기후변화 예측 및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의 공유 등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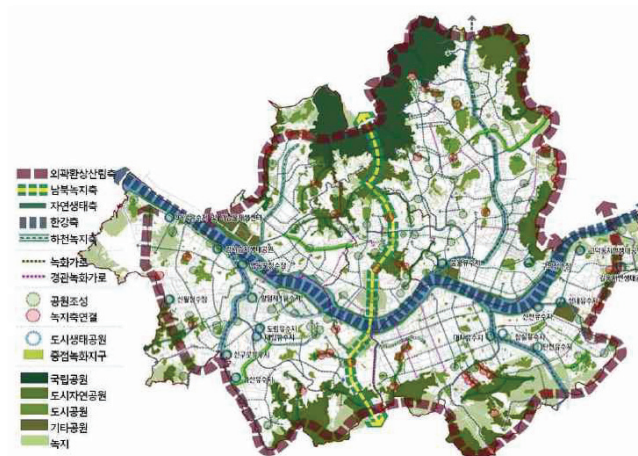
## 전략 1-3 도시 내 자연생태계 보전·회복과 공익기능 증대

### 도시생태계 보전·관리

- 서울 도처에 산재하는 도시숲 및 한강 본류와 지류의 생태계에 대한 보존 관리를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생태계가 파괴된 서울의 도시 내에 소생물 서식지, 철새 보호지,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생태 녹지 네트워크 구축

- 북한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과 서울의 도심과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사산을 연결한 환상녹지축을 주 녹지축으로 하는 생태적 망과 주민생활 이용체계를 고려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녹지축은 수도권 근교도시와 연계하여 전개하고 내·외사산은 서울둘레길, 자락길, 생태문화길 등의 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극대화함.



〈그림 3-8〉 녹지축을 연결한 그린네트워크 구축 체계

### 도시생태계를 활용한 도시계획

-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은 생태적 요소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되었음. 따라서 도시생태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등급화한 것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재개발·재건축 등의 계획에 기준으로 삼음.
- 생태적 요소를 고려한 도시계획·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 환경생태에 관한 정보지도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환경생태계획을 수립·발전시켜야 함.

## 산림 공익기능 증대

-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 수단으로서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림의 휴양·문화·교육 등 산림 이용 및 다양한 서비스기능에 대한 시대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 산림의 휴양적 가치 활용과 건강·문화·교육 등 복지적 가치 확립을 위해 생애 주기별 산림 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이 확대되어야 함.

## 전략 1-4 도시생활 환경의 질적 향상 및 최적화

### 미세 먼지·스모그 저감

- 미세먼지와 스모그 수준을 낮추기 위해 수송분야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확대 보급함.
- 수송분야 이외의 배출원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 PM-NOx 저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보급, 분진흡입청소차의 대폭 확충이 요구됨.
- 도로시설물을 미세먼지 재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시 수돗물 급수환경 개선 및 음용 확대

- 수돗물 공급의 질적·양적 성장에 비해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사적영역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소형 옥상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등 도시 급수환경을 개선함.
- 음용 시 불편을 느끼는 소독냄새의 적정관리와 심리적 부담요인의 제거를 통해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하여 정수기, 생수 등 소비에 따른 에너지 절감, 가계부담 경감, 환경보호에 기여함.

### 실생활 환경요소 지표 강화

- 시민들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 생활 소음의 종합적인 분석·관리, 저소음 공사장비 및 고효율 방음시설의 사용 확대 등으로 공사장 소음을 관리하고, 이동소음과 기타 생활 소음은 다양한 억제정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함.

- 쾌적한 생활을 위해 수돗물의 수질과 소음 이외에도 기타 환경 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생활폐기물 관리방식 개선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으로 수입·운반 대행업체 운영비를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제도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작업위험과 낮은 임금수준 및 열악한 근무 조건 등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함.
- 현행 쓰레기 격일제 문전배출·수거로 인해 주택가 골목길이 잔재쓰레기로 불결해지는 문제가 있어 제반비용 절감과 재활용률을 높이고 도시의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거점수거 등 다양한 방식의 검토 및 도입을 확대함.

## 목표 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

- 그간의 에너지 정책은 도시 생산을 위한 에너지공급 확대에 과도하게 관심을 집중하여 서울의 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의 대량 소비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위기의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음.
- 현재의 도시구조에서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방안을 찾고 에너지를 더 적게 소비하도록 도시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성찰이 필요함. 이를 위해 에너지 위기의 시스템적 관리를 지향하고 저탄소 에너지 생산구조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서울이 자원을 소비하기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원을 생산하는 도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버려지는 자원들을 재생하여 순환시키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자원 순환의 지속가능성 확대 전략이 필요함.
- 에너지와 자원의 대량소비로 유지되는 서울의 도시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서울로 이행함. 이를 위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저탄소화와 함께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며, 자원의 리사이클링을 확대함.

### 전략 2-1 에너지 위기 대비 관리체계 고도화

#### 스마트에너지 관리체계 도입

- 최근 서울은 매년 에너지 전력위기를 겪고 있음. 전체 전력 사용에서 가정용 전력의 사용은 그리 많지 않아 시민들의 에너지절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위기 시 에너지를 제어하여 정전을 막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 대규모 정전 등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지능형 전력수요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대규모 발전소에 의존하던 전력공급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분산형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비상 시 공공기능 유지를 위해 전력에너지 사용 시 비상발전기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역량도 필요함. 현재 중앙정부 주도로 되어 있는 에너지 관리에서 서울시의 역할확대가 필요함. 서울시가 참여하여 에너지 타당성 평가기반의 컨센서스 확보가 바람직함.

### 전략 2-2

### 저탄소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정착

#### 저탄소 에너지의 확보·생산

- 현재 서울시의 에너지원은 도시외부에 기반을 둔 에너지 의존형 구조가 됨. 서울 내에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며, 그 중 태양광·연료전지·지열·바이오·하수열·소수력 등 친환경·신재생에너지의 생산 활성화가 필요함.
- 도시 내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하고 거시적 시각에서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과 인근 도시지역의 소각 또는 열병합발전 등 폐열 이용기반 구축을 통한 집단에너지 관리·확대가 요청됨.

#### 에너지 사용 효율화

- 현재의 도시구조 하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확대해야 함.
-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노후주택의 에너지 손실 개선 등으로 관리비용 절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함.
- 공공 및 민간 조명에 선도적으로 LED 등 고효율 방식을 보급하는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에너지 절감의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민간의 참여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결합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기존의 송배전 시스템의 효율화를 높이고 송배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저장장치(배터리) 등 신기술을 적극 수용·적용하고, 연료전지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복지 증진

- 저소득계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집수리 개선사업 시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설치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여 난방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절감시키는 동시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함.



## 에너지 절약 교육 체계화

- 현재의 에너지소비구조에서 가정용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음. 그렇지만, 가정의 주체는 동시에 기타 부문들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에너지사용에서 시민들의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추진함.
- 에너지절약을 추진할 경우, 경기위축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전략 2-3

## 자원 리사이클링 확대

### 물 재이용 확대

- 수도물 생산에 필요한 자원소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원확보를 위해 빗물이용 확대가 필요함.
- 지속가능한 저탄소 도시전환과 자원을 소모하여 생산하는 수도물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향후 기후변화 및 물 부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한 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함.
- 한 번 사용한 물을 처리하여 재이용하는 중수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보급을 확대하고 활용을 촉진함.
- 수자원 절약을 위해 절수기 도입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함. 한강 취수원에 의존하는 현재의 물자급률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와 재해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물 확보체계 구축이 중요함.

### 폐기물 활용(재활용·자원화) 및 자원순환 확대

- 지속가능한 도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시 자체의 자원 재활용을 강화해야 함. 폐기물을 원천감량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배출을 강화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차등 부담하는 등 정책적 수단의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악화 및 온실가스의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매립을 최소화함. 폐기물 실명제 확대, 재활용률이 낮은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에 대해 수거율 및 재활용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 등 정책수단을 개발함.
- 소각로 바이오에너지화를 포함하여 재활용센터 활용 등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구축돼야 함.

- 쓰레기 종량제(일반, 음식물) 및 1회용품 사용규제, 과대포장 줄이기 등 정책이 시민의식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성이 필요함.

### 물품 재사용 문화 정착

-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함양이 중요하며, 시민문화로의 확산·발전을 위해 이벤트 및 경험 있는 민간 조직 활용과 지원 등을 통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함.
- 재사용 물품 유통의 신뢰성과 편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재사용 플라자」 조성 사업 등과 같은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발전과 지원을 통해 재사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대함.
- 시민이 주도하는 나눔장터가 지역·규모별로 효과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원절약 및 이웃 간의 나눔 실천 등 시민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
- 버려지는 폐기물을 활용하여 만든 예술작품 전시회 등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교육·홍보·지원을 수행함.

### 목표 3 다 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 서울의 도시기능이 복잡화됨에 따라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생산과 공유는 도시안전 관리의 수준을 가늠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로 작용함.
- 홍수·산사태·화재·지진·범죄 등 물리적 안전에서 안심에 이르기까지 시민생활 및 도시기능과 관련한 각각의 위험에 대한 정보가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에 이은 제3의 방재자원으로서, 방재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시각에서 시스템의 구축과 관리가 수반되어야 함.
- 의료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지형적 특성과 시간대별 교통량 유동특성, 서울의 지역 내 도로사정으로 인한 초동조치 시간의 지체는 신속한 구난 및 구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시설노후화로 인한 전기·가스 등의 위험에 대처 시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조기 감지할 수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완비가 중요함.
- 범죄와 재난 등 복잡해지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에 있어 행정력만을 중심으로 편제된 기존의 구조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개선을 위해서는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의 역량까지 집결시켜 도시방재역량을 확대할 것이 요청됨.
- 서울은 소득과 의식수준의 향상과 함께 고령화·저출산·다문화 사회구조로 이행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생활안전에 대한 행정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민 복지를 위한 맞춤형 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됨.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개발위주 발전을 해온 서울에서 산사태나 국지적 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도시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기존의 방재 체계를 도시 전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기상이변과 도시기능의 발달로 도시 위험요소들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재해가 복합화·대형화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시각에서 도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위험정보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기대응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아울러 기상재난의 대처 역량 강화와 함께 도시생활의 거버넌스를 확대하여야 함.

## 전략 3-1

## 위험정보의 획득 및 활용체계 고도화

## 위험인지 기반 구축 및 활용

- 안전 및 재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임. 각종 위험과 관련한 재난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발전시켜야 함.
- 도시의 기능적 유지를 위해 전력·수도 등 도시기반체계와 지하공간 데이터베이스 또한 확충하고 이를 활용해야 함.
- 도시재난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범죄 등 시민의 안심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도 이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안전 및 안심 정보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도시 내 위험 및 안심 정보들을 관장하는 기관들 간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함.

## 도시공간 안전평가 기반 마련

- 도시안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확충되면, 지진·화재·생활안전 등 다각적 각도에서 공간안전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함.
- 재난 및 위기 시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확충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재난피해 평가 및 예측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됨.
- 구체적으로는,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유사 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전략 3-2

## 조기대응 신속성 확보 및 역량 증진

## 비상출동 차선 관리방식 개발 및 적용

- 구급구조소화 등 비상 시 차량이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비상차선의 지정, 장애구간 유비쿼터스 기술에 의한 가변형 비상체계 등 다각적인 검토와 활용이 필요함.
-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로의 비상용 차선에 대한 디자인 개선 및 교육 확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위험감지 시스템 신뢰성 확보

- 도시 내 건물 및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화재나 붕괴 등 각종 위험요인의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발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됨.
- 도시재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재는 전기·가스 등의 위험요소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 구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육성 및 지원

- 재난 시, 대응활동의 일환으로서 구난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대비하여 훈련을 체계화 및 과학화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재난 시 구조와 구호는 주로 이웃에 의해 이루어짐. 또한 재난대응은 소방 등 정부만의 역할이 아니고 사회 전체적 역량을 집결해야 하므로 주민의 자주적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전략 3-3

## 도시 생활 안전 거버넌스 확대

###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시민교육 강화

- 안전과 관련하여 역량 있는 민간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 특히, 시민교육에 있어 관 주도의 교육은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민간조직을 활용한 시민참여 및 교육기회 확대가 요구됨.

### 민간조직 역할 활성화

- 자동제세동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등 도시 내 산재하는 안전시설은 보존 및 관리가 어려움. 또한 지역밀착형인 안전인프라는 지역의 안전역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조직을 활용한 공동관리의 방안이 요청됨.
- 도시안전 거버넌스에서 핵심은 지역의 역량임. 따라서 지역의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마을지킴이·안전지킴이 등 지역 안전조직에 대한 구축과 교육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용소방대 등 민간역량의 강화가 필요함.

###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설계 기법(CPTED) 활용

- 안전도시의 지향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불안요소까지 고려해야 함. 대표적인 불안요소는 범죄이며, 범죄와 관련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도시안전 환경을 구축할 것이 요청됨.
-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궁극적으로 시민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증진시켜야 함.

### 안전서울 홍보 확대

- 시민의 안전과 서울의 이미지 향상에서 안전인프라 구축은 그 역할이 큼. 따라서 안전인프라가 구축되고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이 정립되면 아시아 도시들과 소통에서 리더십 확보가 가능함. 서울의 방재안전 신뢰성이 확보될 경우, 부수적으로는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령화·저출산 사회 구조에 따른 맞춤형 정보제공 및 케어

- 고령화 사회 구조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이에 대처하기 위해 낙상교육 등 노인에게 취약한 안전에 대해 방문 등을 통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함. 저출산 시대에 출산가정에게도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생활안전 취약계층 및 지역 안전 프로그램 운영

- 재난의 속성상, 재난이 발생하면 저소득층 등 사회의 취약계층이 재난의 영향을 더욱 받는 재난의 불평등성이 있음. 재난안전 정책에서도 저소득층 등 안전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신설과 지원이 요청됨.

## 전략 3-4

## 기상 재난의 예방 및 환경치수 역량 향상

### 기상이변으로 인한 풍수해 대응역량 확대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국지적인 홍수 및 풍수해의 대형화 등을 초래하고 있음. 지역의 물순환환경 및 홍수위험 등 변화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단위 물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풍수해 대응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 내 배수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요구됨. 또한 침수위험에 대한 예·경보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 시스템이 필요함.
- 기존의 하천부지에 대한 도시 개발로 인해 해당 지역의 홍수위험이 증가하여 이를 원래대로 복원하는 방안이 요청됨. 즉, 자연하천의 복원과 저류지 확대가 필요함.

### 사면재해 예방 확대

- 도시 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산사태 위험지역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사면재해에 대한 주기적이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위험지역의 개발을 제어해야 함.
- 사면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방재계획기준을 변화된 위험요소에 맞추어 상향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주거지는 주택가의 축대와 옹벽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보수를 실시하여 실생활 지역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도시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 계획 도입

-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의 자연적인 물순환 환경을 파괴시켜 하천의 건천화, 도시열섬현상 증가, 홍수량 및 비점오염부하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발 이전의 물순환 환경으로 회복하기 위한 빗물관리 계획의 도입이 필요함.
- 기존 도시의 물관리는 하수관거, 빗물펌프장, 제방 등의 유지관리 및 시설확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대책에 편중되어 왔으나, 물리적 시설의 설치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재원이 필요하며 환경을 파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기존 관거중심의 구조적 대책과 물순환계획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도시유역 물관리대책으로 환경치수계획의 도입이 필요함.

###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단위의 분산형 빗물관리 추진

- 기존의 중앙 집중식 빗물관리방식에서 빗물 발생원 중심의 관리방식인 분산형 빗물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함.
- 다양한 빗물관리시설을 빗물 발생지점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하천으로의 빗물 유출량을 줄이고 물순환의 복원, 빗물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도심열섬현상 완화 및 비점오염 부하 저감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이 기대됨.
- 빗물관리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개별 건축물 뿐 아니라 마을·골목단위의 종합적인 빗물관리 시스템을 확충하고 효과적인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함.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이용·관리를 위해서는 시설 설치비 지원 및 서울시 빗물이용 주치의 제도 등과 연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함.

## 핵심이슈 5 |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

목표체계 : 3개 목표, 11개 전략

3개 목표		11개 전략
목표1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1-1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형 복합 토지이용
		1-2 지역별 특화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1-3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1-4 도시공간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통합적 도시관리
		1-5 효율적인 친환경적 물류체계 구축
목표2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	2-1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재생과 복합 연계교통체계 구축
		2-2 보행과 자전거 이용이 안전한 도로공간 재편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2-3 승용차 이용의 합리적 관리
목표3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 확대	3-1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수급관리체계 구축
		3-2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확대
		3-3 살기좋은 주거공동체 조성

### 1) 현황과 과제

#### 토지이용의 유연화·복합화

- 지식기반경제 중심의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 정보화 추세의 가속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일터, 삶터, 놀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도시기능의 융복합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계화시대에 서울이 창조도시로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해 도시기능의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것이 요청됨.

#### 대중교통 및 비동력 교통수요의 증가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에너지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도시활동에 투입되는 에너지·자원을 절감하기 위해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원인 자동차 교통을 대체하여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등 비동력교통을 활성화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임. 이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보행, 자전거 등 비동력교통과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의 양적 수요 안정과 지역사회복지시설 등 주거환경개선 수요 증가

- 도시화와 교외화(광역화) 현상으로 대표되었던 인구이동의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로 인해 주택의 양적 수요는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됨. 대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탁아·보육시설, 노인시설, 여가·체육시설 등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질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 기본방향

- 주거 안정 및 이동의 편의성은 서울 시민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 주거는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사적(私的) 공간 및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활동을 의미하며, 이동은 사적(私的) 공간과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적(公的) 공간과의 연계를 의미함.
- 따라서 주거 안정은 시민들이 일상의 공간을 서울시 어디에 정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줄여주는 것이고, 이동의 편의성은 집과 직장, 기타 사회적 공간과의 연계에 대한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임.
- 주민공동체 도시는 전문가·관주도의 일률적 계획 수립 위주인 기존의 계획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주거환경 정비 및 각종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임.

## 3) 주요지표

-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3개 목표, 11개 전략을 설정하고 목표와 전략의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주균형지수, 녹색교통수단 분담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주요지표로 설정·관리함.
- 직주균형지수는 권역별 자족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권역별 가구수 대비 일자리(고용자)수의 비율을 의미함. 동북권은 직주균형지수를 2013년 가장 낮은 71(권역별 최소치)에서 2030년 90으로 향상시켜, 자족기반(일자리)을 확충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권역별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함.

- 녹색교통수단 분담률은 서울시 전체 통행량에서 대중교통(환승 포함), 보도,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3년 70%에서 2030년 8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지표를 관리함.
-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서울시 전체 주택 호수 중 공공이 공급한 모든 임대주택 호수의 비중을 의미하며, 2013년 현재 5% 수준에서 2030년 12%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함.

〈표 3-7〉 핵심이슈 5의 주요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3	2020	2030
직주균형지수 (권역별 최소치)	71	77	90
녹색교통수단 분담률 (%)	70	75	80
공공임대주택 비율 (%)	5	10	12

- 직주균형지수 = 권역별 고용자수 / 권역별 가구수 × 100 (권역별 최소치(동북권) 71, 서울시 평균 126)  
출처 : 국토해양부,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10.
- 녹색교통수단 분담률 = 대중교통(환승 포함), 보도,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량 / 교통수단 전체 통행량 × 100  
출처 : 서울교통비전 2030.
- 공공임대주택 비율 = 공공이 공급한 모든 임대주택수 / 서울시 주택수 × 100  
출처 : 서울시민복지기준, 2012.

## 목표 1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 삶터는 다양한 주거형태의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소셜 믹스(Social Mix)가 강조된 주거지를 의미하며,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지는 것은 주거지와 일자리가 있는 중심지가 서로 잘 연계되는 직주 근접의 실현을 의미함.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통합적 개선, 지역 특성별로 특화발전을 통한 낙후지역의 재생 및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적 추진을 뜻하는 것임.
-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은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형 복합토지이용 추구, 지역특화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도시공간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통합적 도시관리, 효율적인 친환경적 물류체계 구축 등 임.
- 도시활동이 집중되는 중심지인 일터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하되, 직주근접·직주균형의 자족생활권 형성, 수도권과의 연계, 서울시내 부족한 가용 토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업과 주거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되는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 주거지인 삶터는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살려 획일적인 정비·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이 주거환경정비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삶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
-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특성별로 특화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규모 가용지가 고갈된 서울의 현실을 감안하여 저·미이용되는 개발가용지의 공익적 활용을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공간으로 활용함.

### 전략 1-1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형 복합 토지이용

#### 역세권과 대중교통 중심의 공간구조 형성

- 21세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도시구조를 요구하고 있음. 대중교통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를 형성하여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중심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간선도로망을 비롯하여 대중교통, 특히 철도에 의한 직결노선 확충 등 네트워크 연계성 강화를 통한 중심지 간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도권과 연계한 다핵연계형 중심지체계 구축

- 서울과 주변지역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일체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음. 즉, 서울과 주변지역이 결합된 서울대도시권은 행정구역을 넘어서 사실상 하나의 권역으로 작동하고 있음.
- 향후의 공간구조정책 및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비롯한 각종 공간정책을 전개할 경우에는 서울만이 아닌 주변지역까지 고려하는 서울대도시권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특히 서울대도시권 차원의 공간계획에서는 서울의 중심지와 수도권의 중심지가 상호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다핵연계형 중심지체계의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중심지의 전략적인 지정으로 수도권으로부터의 장거리 통근 및 교차통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으로부터 통행유입의 길목이 되는 주요 결절지점에 중심지를 육성하여 배후지역의 생활권에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도심으로의 장거리통근을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역세권 중심의 입체·복합화

-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은 주거·비주거 기능의 입체·복합화를 유도하여 총 통행발생을 최소화하고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위한 콤팩트한 도시구조를 지향함.
- 대중교통의 강화 및 교통축의 정비와 병행하여 교통결절점 주변에 시가지의 정비와 토지이용의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생활편익기능은 도보·자전거 교통권 내에 배치하도록 함. 또한 기존 중심지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중심기능 및 생활편익기능의 추가적인 도입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기능도입을 추진하도록 함.
- 역세권별 특성을 고려한 기능 특화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함. 역세권 지역은 전반적으로 업무, 상업, 문화·여가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주거용도의 비중을 높이고 환승 등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 지역 내 주거·비주거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복합비율을 차등화함.

## 전략 1-2 지역별 특화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자족생활권 형성을 위한 중심지체계 구축

- 중심지를 현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현실여건에 맞추어 지정하게 되면 중심지에서 소외가 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됨. 따라서 서울의 균형발전 및 생활권별 자족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심지체계에도 생활권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중심지 설정이 필요함.
- 중심지별 산업, 토지이용 등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중심지의 육성과 이와 연계된 거점 개발로 생활권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도록 함.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중심지별 특성화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생활권계획을 통해 중심지별 특화·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및 광역중심에 해당하는 중심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별도의 중심지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기초생활서비스의 지역별 배분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

- 공공분야의 기초생활서비스를 지역별로 배분하고 공급하도록 함. 특히, 기초생활서비스 및 대중교통서비스가 취약한 동북권, 서북권 및 서남권 일부 지역은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우선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함.
-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은 경전철 등의 신교통수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서울시 대중교통난 완화 및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노선을 연장하거나 중심지와 배후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 및 지선철도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함.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생활권단위의 정비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설치의 주체와 우선순위, 자원조달 방안, 공공 및 민간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함. 또한 지역생활권 단위에서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 간 연계·검토하며 이때, 기존의 기반시설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치함.

### 생활권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별 특화발전 토대 마련

- 도시기본계획의 권역별 발전구상과 이후 수립될 권역(대생활권) 및 지역(소생활권)계획을 통해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함. 권역(대생활권) 및 지역(소생활권)계획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이슈를 제도적 도시계획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하게 추진·관리할 수 있는 계획체계로 정립하도록 함.

- 이와 함께 과거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에서 시민 삶의 질과 연계된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권역생활권별 불균형 지표 선정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이 누리는 삶의 질의 생활권역 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도록 함.

## 전략 1-3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 주민주도의 다양한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 지역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구역지 정부터 계획수립,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기존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을 배려하여 추진하도록 함.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참여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주도하던 공급자 중심의 주거지 정비정책을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발적 참여 속에 동네의 주거환경과 함께 사회·경제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 과거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조직과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등 여러 가지 대안적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함.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 노력에 참여하여 동네의 미래 모습을 가꾸어 나아가고 이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함.

###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공익성 및 공공성 강화

- 인·허가권자로서의 제한된 역할에 머물렀던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다수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좋은 개발을 실현해 나가도록 함.
- 도시계획 수립에서 실행까지 전 과정에 세입자, 상인, 주변지역 주민 등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조화하도록 함.
- 서울에서 수립되는 계획은 기본적으로 ‘시민 참여형’이 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뿐 아니라 그 영향을 받게 될 인근주민까지 계획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서울시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계획의 경우 보다 넓은 차원의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계획과정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주민갈등이 심한 뉴타운·정비사업구역에 대해서는 공공이 주민과 밀착하여 갈등을 관리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속적인 대응체계를 운영하도록 함.

- 서울시 사회·경제적 여건과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뉴타운·정비사업 시 정비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변화한 여건에 맞도록 보완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관리체계 구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 정비구역 위주의 점적인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생활권 단위에서 주거지와 그 지원기능에 대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함.
- 자연환경이 수려한 구릉지,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한 한양도성 주변 주거지 및 한옥밀집지, 기성시가 내 양호하게 조성된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 특성보존이 필요한 지역 등은 고유한 도시경관을 보호함.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관리 혹은 정비를 통해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함.
- 생활권 단위의 계획을 통해 현재 기반시설의 수준을 고려하여 주거지를 관리하여 보다 나은 주거서비스와 환경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함.

###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 발굴 및 추진체계 마련

- 생활권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특화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함. 이를 통해 서울 도시재생의 중·장기적 정책방향과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을 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마련함.
-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추진하기 위해 지역 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의 전담조직 및 지원센터 등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노후 철도축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유도

- 서울의 중심지 중 지상철도 통과로 지역이 단절되거나 전철 운행에 따른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함.
- 지상철은 단계별로 입체화하여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지상부는 주변의 낙후지역과 통합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상철 구간 중 중심지 역세권 주변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추진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소단위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 대규모 인프라의 입체화 및 주변지역의 재생은 투입비용 및 도시에 미치는 과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시민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도록 함.

## 전략 1-4 도시공간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통합적 도시관리

### 기술, 환경, 문화, 공간이 결합한 신개념 미래도시 구현

- 도시의 거대화 및 과밀화, 가용지 부족 등에 따른 도시개발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도시의 성장은 정체기를 맞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 고령화, 환경, 안전, 일자리, 다문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와 공간이 조화를 이루어 모든 시민이 지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개념 미래도시 “스마트 시티” 구축이 필요함. 이를 통해 기술의 융합(ICT, BT, NT)이 도시공간과 결합함으로써 미래사회 구조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함.

### 도시문제와 정보이용 욕구 해결을 위한 통합적 도시관리

-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 정보제공 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정보이용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과 공간이 일체화된 통합적 도시관리가 요구됨.
- U-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간특성에 맞는 공간개발전략을 구상하고,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구축 및 U-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도록 함.

## 전략 1-5 효율적인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 도시 내 물류거점시설 정비

- 과거의 지역 간 화물 환적과 화물자동차의 주차 및 대기를 위한 물류시설에서 최근에는 화물의 보관 및 분류 등의 복합적인 집배송 기능을 위한 물류시설이 요구됨. 동남권 물류단지를 비롯한 서울 내 위치한 물류거점시설(한국화물터미널, 서부트럭터미널, 동부화물터미널)을 복합적 집배송 기능을 담당하도록 재정비함.
- 기존 물류시설은 장래 물류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첨단 물류시설로 정비하고, 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 방안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의 개발을 유도, 복합적 개발을 통한 고효율 물류시설을 조성함.



### 단위지구 물류개선 사업 시행

- 물류활동이 많은 상가 밀집지역 및 시장 등은 대상지구 내 주차 및 하역공간 등의 물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비효율적이고 인근 도로의 교통환경, 보행환경, 도시미관 등을 저해함. 이러한 단위지구에 맞춤형 물류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 단위지구 정비사업 추진 시 대상지 여건에 부합한 물류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상가 밀집지역 및 시장 등에 화물조업공간 및 하차장 시설을 확보하고 거주밀집지역은 택배화물을 위한 집배송시설을 확보함.
- 단위지구별 소형 물류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 내 물류환경 개선과 주변 도로 및 보행로의 영향 감소가 기대됨.

### 물류정보화체계 강화

- 효율적인 물류정책을 위한 물류지표를 개발하여 통합적 관리의 발판을 마련함.
- 물류정보화를 위한 통합적인 물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타 물류관련 시스템간의 데이터베이스 연계로 물류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함.

### 환경친화적 물류시설 개발 유도 및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

- 도시 내 물류거점시설 입지 및 확충 시 녹지 등의 확보를 최대화하고, 지역과 조화로운 외관 디자인을 적용함. 또한 표준규격의 물류시설과 소음 및 매연 배출이 적은 저공해형 물류장비 설치 등을 장려함.
- 친환경 화물자동차 도입으로 대기오염 등 환경 부담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 협약 등에 대비함.

## 목표 2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

- 지금까지의 승용차 위주 교통정책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체계를 갖추고, 대중교통수단 간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함.
- 과도한 승용차 이용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불필요한 통행을 줄이고 승용차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강화가 요구됨. 이에 따라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지역에서는 승용차 통행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이 배치하는 등 교통정책과 도시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함.
- 보행과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시민의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보행과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이 우선하던 생활권도로를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공간으로 재정비해 나감.
- 이러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근거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철도 기본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 ‘보행환경 기본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추진함.
- 서울시 교통정책의 목표인 편리한 녹색교통환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히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철도중심의 공간구조를 지향하도록 함. 녹색교통환경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중심지 간 네트워크를 철도교통 중심으로 강화하여 지역활성화 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전략 2-1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재생과 복합 연계교통체계 구축

####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 지속 확충

- 대중교통체계는 정시성이 높고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버스는 도시철도를 지원하는 지·간선체계로 재정비함.
- 따라서, 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경전철 노선을 신설하여 철도서비스 사각지역을 최소화하고, 도시철도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지선버스 등)을 제공하여 서울 어디서나 도시철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함.

- 한편, 버스의 운행속도와 정시성을 높여주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 철도와 함께 도시 내에서 더 빠른 이동을 보장함. 또한 버스노선체계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간선버스노선, 도시철도 및 간선버스노선을 단위지역과 연계하는 지선버스노선, 특정지역을 순회운행하는 순환버스노선 등으로 개편함.
- 이러한 철도인프라의 확충과 개선, 버스체계 개편 등은 ‘도시철도 기본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추진함.

### 교통 결절점 중심의 환승체계 구축

- 도시 내 교통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 통행을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체계와 함께 효율적이고 편리한 환승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시외곽지역의 주요 결절점에 P & R(Park & Ride : 승용차와 대중교통 간 환승이 이뤄지는 환승시설) 기능을 수행하는 환승센터를 설치하여, 시 외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승용차 수요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함. 이러한 수도권 광역환승체계는 경기, 인천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행방안을 마련함.
- 시 내부의 대중교통 수단 간(버스-도시철도, 버스-버스, 도시철도-도시철도) 환승이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 결절점에 R & R(Ride & Ride : 대중교통 간 환승이 이뤄지는 환승시설) 기능을 수행하는 환승센터를 설치함.
- 도시철도 역사 인근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소는 역사와의 환승거리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환승정보와 환승편의시설 등도 함께 제공함.
- 대중교통 역사나 정류장 등을 설치할 때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접근하는 보행, 자전거, 승용차 등 교통수단의 접근과 주·정차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함.

### 대중교통의 서비스 용량·확장성을 고려한 도시 정비 및 관리

-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은 더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급보다 관리를 통한 교통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특히, 서울은 새로운 교통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를 재정비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현재의 교통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중교통서비스의 공급기반인 도로망의 정비·확충도 배려하여야 함.
- 통행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시설은 가급적 분산 배치하고, 기존 교통시설의 서비스 용량과 확장가능성을 고려해서 도시개발이나 정비 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도시개발에 따라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한 교통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등 ‘선 교통대책 후 도시개발’ 원칙이 확립되어야 함. 이와 같은 전향적인 도시계획 정책이 바탕이 되어 과거의 성장위주의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개선해 나감.

##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교통서비스 수준 제고

-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로, 차량, 신호시스템 등 기존 교통체계의 구성요소에 전자, 정보, 제어,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교통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확대 도입이 요구됨.
- 간선급행버스(BRT) 사업 구축 시 기존 버스정보센터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승 불편 해소 및 도로소통 완화를 도모함.
- 중앙·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사 등에 대중교통 정보안내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정보, 이동경로, 도착정보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함.

## 서울과 주변 도시를 통합한 광역교통망 구축

- 서울 대도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장거리 통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장거리 통행자가 승용차 대신 쉽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대중교통시설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
- 기존의 도시철도를 인접지역으로 연장하고 광역철도를 신설하여 서울과 경기, 인천과의 철도연계망을 구축함. 또한, 신설되는 노선은 물론 기존의 노선에도 대피선 등을 설치하여 급행운행서비스를 확대해 나감.
- 각 지자체와 정부가 별도 운영 중인 광역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 서울역, 광화문, 강남역 등에 집중되고 있는 광역버스노선을 시 내부의 대중교통거점으로 분산 배치하고, 광역환승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서울로 들어오는 승용차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함.
- 이러한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광역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담기구의 기능강화 등 인접 시·도 및 중앙정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이와함께 단절구간, 차로 불균형 구간 등 불합리한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역통행의 이동권을 일정 수준까지 확보해야 함.

## 전략 2-2

보행과 자전거 이용이 안전한 도로공간 재편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행친화적 생활권 조성

- 생활권에서 도로와 보도는 이동을 위한 공간이자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로서 삶의 일부인 중요한 공간임. 그동안 이러한 생활권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었으며, 일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개별 사업에 의해 부분적으로 관리·정비되었음.
- 편리한 이동을 위한 기능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머무는 공간으로서의 질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개별사업 위주의 생활권 정비에서 벗어나 생활권의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면(面)단위의 통합정비 추진이 요구됨.
- 면단위 통합정비는 교통측면에서는 통행속도 제한, 교통 정온화, 통과교통 억제, 보호구역 통합 관리, 주차공간 정비 등을 고려하고, 도시공간 측면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 등과 함께 연계·정비하는 형태로 추진함. 또한 차 없는 마을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생활권을 확대해 나감.
- 이러한 생활권 정비는 지역 거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동네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시행됨.

##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녹색(Green) 도로 조성

- 지금까지는 차량을 우선하는 도로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즉, 차량만을 위한 도로공간을 보행자, 자전거, 버스 등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전환해 나감.
- 도로폭이 과도하게 넓은 구간은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차도부를 줄이고, 줄어든 도로 공간은 보행자를 위한 보도,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을 지역 상황에 맞게 설치함.
- 또한, 도로를 신설하거나 재정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등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공간으로 조성함.
- 한편 보행자가 많이 몰리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는 ‘차 없는 거리’와 ‘대중교통 전용 지구’ 등과 같이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함.
- 아울러, 도심의 주요지점과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도심 보행길(프롬나드)을 조성하고, 기존의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등을 연계하는 지하공간 보행축 등을 구축하는 등 도시를 마음껏 걸어도닐 수 있는 보행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

## 단절 없는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자전거 이용자가 생활속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절 없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전거 지원·대여시설 등을 곳곳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우선 생활권 내부에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곳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함. 아울러,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위해 지하철 역사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대중교통 탑승 시 자전거를 소지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
- 특히, 한강과 지천의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간선축으로 활용하고, 이를 생활권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도시 내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감.
-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공공자전거를 도심 주요지점으로 확대하고, 각 자치구 등에서 개별운영 중인 대여자전거와도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전략 2-3

### 승용차 이용의 합리적 관리

## 대중교통 서비스가 양호한 도심부의 승용차 접근관리 강화

-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만으로도 접근이 편리한 한양도성지역 및 강남지역 등은 다른 지역보다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함.
-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는 등 도심의 주차수요관리를 우선 시행함. 특히, 도심 지역에 높은 주차요금을 차등적으로 부과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주차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함.
- 또한, 불필요한 승용차 통행을 제한하는 주행거리 기반의 혼잡요금제도를 도입하고, 도심 지역을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구역(LEZ : Low Emission Zone) 등으로 설정하여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는 등 통행량을 줄이고 대기환경도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함.
- 더불어, 승용차 통행수요가 대중교통으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도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충하고 버스노선체계를 재정비하며, 승용차가 줄어드는 도로공간을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도로공간 재편을 함께 추진함.

### 자동차 통행을 대규모로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강화

- 과도한 자동차 통행은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발생시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책임을 자동차 통행을 유발하는 시설에게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함.
- 교통수요 유발 정도에 따라 시설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강화하고, 통행수요를 줄이는 경우, 감축량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교통량 감축 활동(프로그램)’제도를 병행해서 추진함.
- 도심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시설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주차상한제’를 확대·강화하고, 교통혼잡이 심각한 경우에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시설로 지정하여 교통혼잡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감.

### 직주근접을 통한 이동저감사회 구현

- 집과 직장이 가까이에 있거나, 대중교통만으로도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다면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음. 출퇴근 시간대 시내 도로와 대중교통차량 내부는 매우 혼잡한 수준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과 직장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직주근접의 실현이 필요함.
- 초기 계획단계부터 주거와 업무, 상업 지역 등을 인접해서 배치하는 등 직주근접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통행거리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요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입체적으로 개발하여 대중교통과 집과 직장이 가까이에 위치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직주근접 도시구조를 지향함.

### 목표 3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 확대

-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주된 주택수요계층의 감소,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해 주거부문에서는 복지소요의 증가에 따른 주거복지 프로그램 제공, 사회 안전망으로서 주택의 역할 강화, 주택재고 관리의 적정성 제고 등이 필요함.
-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 주도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1·2인 가구·노인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소형·저렴주택 소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소형·저렴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함.
-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 확대,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가구특성별·지원대상별로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제공함.
- 아울러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커뮤니티 시설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참여에 의한 커뮤니티 정비와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는 복지 및 편의시설을 확대함.
- 결국, 공급자 위주의 주택 대량공급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및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택계획의 발전방향을 근거로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서울시민 복지기준-주거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전략 및 시책이 시행되도록 함.

#### 전략 3-1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수급관리체계 구축

#####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 저출산, 고령화, 1·2인 가구의 비율 증가 등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와 생활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함.
- 주거생활의 질을 고려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원룸 등은 초소형보다 2인 이상도 거주할 수 있도록 투룸형으로 건설을 유도함.
- 전용 50㎡~60㎡ 정도의 소형주택 공급은 택지개발사업·보급자리주택사업 등의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통해 확대함.
- 오피스텔·고시원 등 준주택은 주거환경·안전기준 또는 최소한의 거주기준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주거공간의 형태로 공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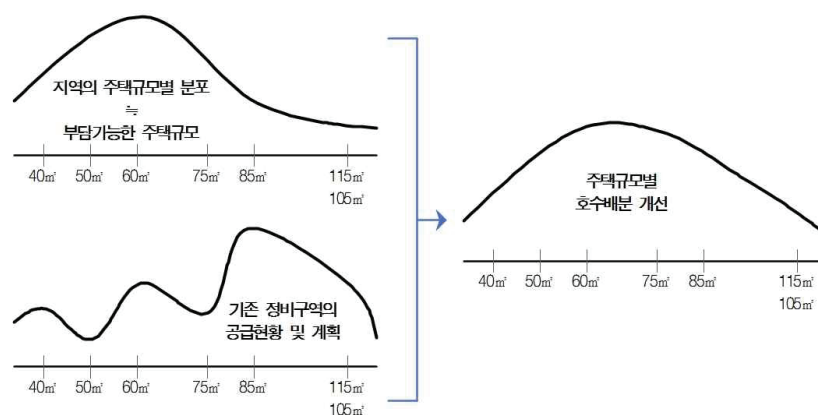


## 자가주택 보유 부담 감소 유도

- 소득 6분위 이하 가구의 자가주택 점유율이 40% 정도에 불과하고, 전세물량의 감소에 따른 주거비부담 증가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세수요 조절 차원에서도 주택구입 시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분주택 또는 할부주택 등 저렴분양주택의 공급이 필요함.
- 지분주택 및 할부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민간건설·분양업체도 함께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택수급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주택수요와 주택공급의 총량적·단기적 미스매치(부조화) 때문에 발생하는 가격의 급등 및 급락, 미분양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경제상황의 변화, 주택시장의 변화, 가구특성의 변화 등을 적기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주거실태조사에 기반을 둔 주택수요를 추정하고 발표하도록 함.
  - 주택수요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주거실태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입·지불능력 및 구입·지불의사를 파악하거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실태조사의 표본수와 설문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가구주택, 세대구분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구수 기준으로 주택수를 정확히 파악·산정하고, 주택소유자와의 계약을 통한 공개(빈집)의 공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함.
-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 부담능력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순환개발 및 소규모 점진개발을 장려하여 단기적 지역별 주택가격 급등을 최소화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 소형·저렴주택의 과도한 멸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주택의 멸실 및 공급에 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그림 3-9〉 주민의 부담능력에 맞는 주택공급 개념도

### 부담 가능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 월세전환에 따른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임대주택 소유자와의 계약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함.
- 또한 민간임대주택 소유자에게 유지관리, 주택리모델링 등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임대료 제한, 임대기간 연장을 제공받는 등의 형태로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
-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연금·기금·금융기관 등의 장기투자를 유도함. 기관투자자가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때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국가 차원의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월세계약의 확대 등에 따른 임차가구 보호를 위해 임대료 정보은행(임대료 등록제 포함), 월세전환을 상한제 등의 월세임대주택 관리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함.

## 전략 3-2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확대

### 주택제고의 10%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충

- 장기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시장의 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차가구의 임대료부담 충격완화를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주택유형도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 다양화함.
- 민간관리형, 건설기부형, 민간의지 임차형, 공공토지 임대형, 민간계약형 등 민간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
- 또한 자치구별로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를 장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고가 적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도록 지원함.
- 여관·고시원 거주가구, 가족노숙인 등을 위한 6개월 이하 거주의 긴급임대주택 제공 및 긴급주거지원을 실시함.

〈표 3-8〉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

(단위 : 만호)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이후
호수	19.3 ( 5.2%)	22.0 ( 5.9%)	24.7 ( 6.5%)	26.7 ( 7.1%)	28.8 ( 7.6%)	31.6 ( 8.3%)	34.3 ( 8.9%)	36.6 ( 9.5%)	38.8 (10.0%)	매년 1만호 이상 공급

자료 : 2012년 말 현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표 3-9〉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현황

(단위 : 호)

구 분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장기전세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계
SH공사	22,370	17,432	16,029	55,339	19,617	4,649	3,118	138,554
LH공사	24,854	2,899	1,908	93	620	8,955	15,520	54,849
전 체	47,224	20,331	17,937	55,432	20,237	13,604	18,638	193,403

주 : SH공사의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에 주거환경임대주택을 포함시킨.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13.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관리참여, 경제적 자활, 커뮤니티의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의 입주자관리·공동체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확대

-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하여 주거복지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소득 대비 25%~30%를 상회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제도를 확대·시행함.
- 2014년 10월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주택바우처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수급을 받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준주택·비주택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 계층에게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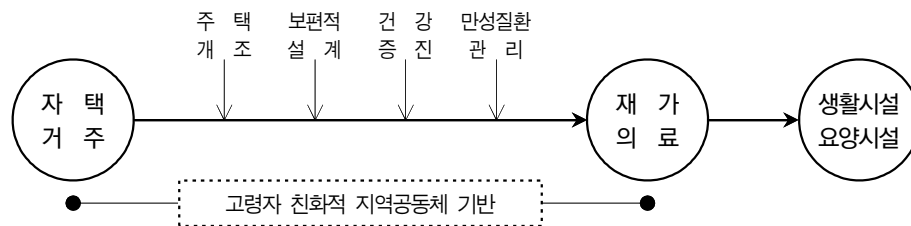
### 주택개량사업의 확대

- 주택개량사업을 확대 시행하되 가구의 주거비부담 완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소형·저렴주택 재고관리 차원에서 주택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주택개량사업의 목표를 주택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 두고서,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는 예산 및 재원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배분하여 체계적으로 주택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야 함.
-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에 구조·성능·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택개량을 위한 거주에 적절한 주택기준을 설정함. 또한 임대차기간 연장, 임대료인상 제한 등을 주택소유자와 합의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함.

### 전략 3-3 살기좋은 주거공동체 조성

#### 고령자 및 장애인이 편안한 주택서비스 제공

- 노인인구의 증가로 2020년에는 고령사회,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노인인구의 71%가 현재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만큼,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중심의 주택서비스 기반을 구축함.
-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용 주택재고의 확대, 기존주택의 배리어프리화 지원, 신규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화 유도, 독거노인·치매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센터 설치 등의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추가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주택의 품질 및 성능제고 지원, 응급적 주거필요계층에 대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단독 및 부부노인세대 등 독립생활을 하는 노인의 공간은 유지하면서 식당, 세탁실 등을 공유하는 실버형 공동생활 주택을 확충하고 커뮤니티 활동참여를 지원함.



〈그림 3-10〉 커뮤니티 기반의 노인주거복지정책

자료 : 장영희, 2007, 「고령화시대 노인주거복지 정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68.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 공동주택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거주환경의 안전성·쾌적성을 증진함. 이를 위해 공동주택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을 증설·복합화하고,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를 위해 인센티브 및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함.
- 또한 단지 내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함.
- 커뮤니티 시설의 증설,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운영 시에 지역주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자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검토함.

### 저층주택 밀집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향상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커뮤니티 시설의 확충, 공용주차장의 설치 지원, 커뮤니티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커뮤니티 정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토록 함.
-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는 노동·복지 및 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한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저층주택의 개량 및 성능개선을 지원함.
-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주거복지센터 또는 주거지원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취업알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 제4장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 제1절 | 공간구조 구상

### 1. 공간구조 개편배경

#### 도시기본계획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에 대한 대응

- 2030 서울플랜에서는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의 가치와 핵심이슈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전략을 실현화 할 수 있도록 서울대도시권의 공간구조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간구조 개편분야에서는 미래상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배려가 반영된 공간구조를 실현하고, 핵심이슈별 계획을 공간계획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요구됨.
- 계획내용에는 삶의 질, 복지와 교육, 균형발전 등 시민체감형 과제가 많이 제안된 것이 특징임. 이에 따라 공간구조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광역기반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인 분야 외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정책의 제시가 필요함.

#### 중심지의 잠재력과 계획을 반영한 중심지체계 개편

- 지금까지 서울의 중심지는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등 위계적으로 관리되어 왔음. 중심지의 육성과 향후 특화된 발전전략보다는 권역별로 균등하게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이 결과 중심지별 토지이용 현황은 중심지 위계와 정합성 있게 나타나지만은 않았음.
- 예를 들어 중심지별 업무연상면적 및 종사자수 등 중심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측정한 결과, 부도심인 강남지역이 이미 도심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영등포·여의도 지역도 타 부도심에 비하여 매우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음.
- 향후 서울의 공간계획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수립되어야 함. 또한 기존 중심지의 발전가능성과 미래 잠재력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공간구조를 제시해야 함. 지속가능한 공간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대도시권의 글로벌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핵심과제를 포함한 중심지체계의 설정이 필요함.

####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균형발전방안 마련

-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 기존에는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발사업 위주의 물리적 지원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최근 들어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지역균형발전은 권역 간 물리적인 지표의 비교를 통한 일괄적 지원보다 지역별로 특화된 잠재력과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 격차실태를 세분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응방안 마련이 제시되어야 함.
- 예를 들어 도심권과 동남권은 일자리, 의료 및 문화서비스 등이 집중된 반면,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권역별 직주균형지수(가구당 종사자 비율)를 살펴보면, 도심권과 동남권에 비해 동북권과 서북권의 균형지수는 매우 낮게 나타남. 공원 및 문화기반시설 역시 도심권과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동북권과 서남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 지역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중심지 설정과 함께 중심기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고용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활권별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생활권 단위로 공원·녹지 및 문화인프라의 균형적인 확충이 필요함.

〈표 4-1〉 지표로 본 권역생활권별 격차 현황

권역생활권	직주균형지수 (가구당 종사자 비율)	주민 1인당 도시공원면적(㎡)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도심권	3.7	13.12	17.12
동북권	0.7	4.00	1.88
서북권	0.9	8.04	2.05
서남권	1.1	3.83	1.86
동남권	2.0	7.22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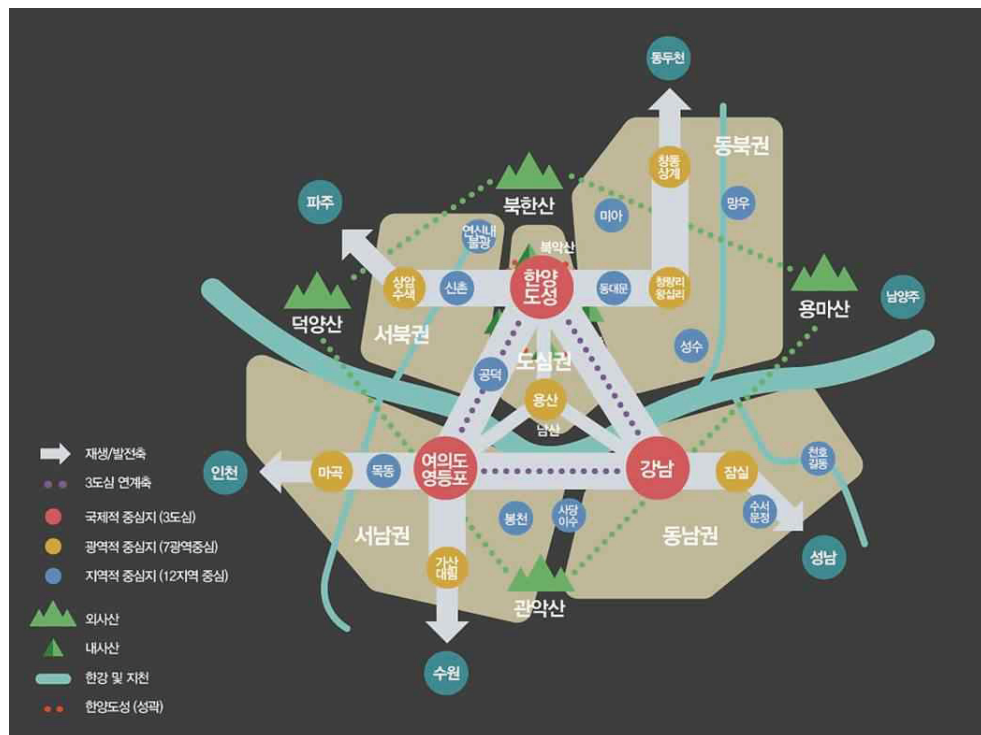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10.

## 서울대도시권 확장에 계획적 대응

- 서울은 이미 1990년대부터 서울대도시권의 확대에 따른 광역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2000년 이후부터는 도심에서의 통근권이 반경 40km권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인천을 포함한 서울대도시권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동하고 있음.
- 특히, 일산-파주, 성남, 광명-안산, 의정부, 하남 등의 지역에서 시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장거리 통근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곽의 주요 교통축 중에서는 주거중심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기존 도심과 강남으로의 혼잡이 가중되고 있음.
- 지금까지 서울의 공간구조는 서울시 행정구역 내부를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나, 향후 공간계획은 대도시권 확장에 따른 광역생활권에 부응하도록 수립되어야 함. 이를 위해 물리적인 공간구조뿐 아니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권이 공동으로 대도시권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광역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2. 공간구조 개편방향

- 2030 서울의 공간구조는 미래상을 반영하여 소통과 배려의 공간구조를 실현하고, 서울 및 수도권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5개 핵심이슈별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함.
- 이에 따라 1) 서울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유산의 적극적인 유지관리, 2) 도시경쟁력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체계 개편, 3) 소통 및 상생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발전축 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공간구조를 설정함.



〈그림 4-1〉 소통과 배려의 공간구조

### 서울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유산을 고려한 공간구조 설정

- 세계의 유수한 대도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도시가 가진 자연과 역사,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반영된 문화 등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 왔음. 반면 서울은 급속한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한강과 강남 등 새로운 이미지 요소를 창출하였지만, 압축개발 과정에서 서울만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이 훼손되었음.
- 앞으로의 서울은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 자연자원과 전 시대에 걸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전통거리 및 골목길, 한옥밀집지역 등 서울의 고유한 특성이 묻어나는 역사문화자원을 공간구조의 중요한 요소로 발굴하고 유지하며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한 한양도성지역은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그 특성을 강화하고, 일반 시가지도 지역마다 역사와 생활이 드러나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고 형성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함.



〈그림 4-2〉 서울의 기본골격

### 도시경쟁력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체계 개편

-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대도시인 서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적인 공간구조가 요구됨.
-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울 대도시권 차원의 중심지체계로 개편되어야 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양도성(기존 도심)을 역사문화 중심지로 지정하고, 업무상업기능이 가장 집적된 강남지역을 글로벌 업무중심으로 지정육성하며, 금융기능이 집적된 영등포·여의도를 국제금융특화지역으로 육성하여 미래지향적인 중심지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권역생활권별로 면적, 인구, 토지이용, 특화자원, 개발가능지 등 생활권별 특성 및 잠재발전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중심지 설정과 중심별 특화기능 육성을 통해 생활권별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300만명 이상의 인구와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동북생활권과 서남생활권은 기존의 중심지로는 전체 생활권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생활권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차원의 중심지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소통 및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대도시축 설정

- 지금까지 서울의 공간구조는 서울시 행정구역 내부를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나, 향후 공간계획은 대도시권 확장에 따른 광역 개방형을 전제로 수립하도록 함. 중심지 설정, 생활권 계획, 교통계획 등의 수립 시 대도시권 차원의 광역생활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함. 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중심지와 경기·인천의 중심지와의 연계발전축을 설정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향후 공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서울만이 아니라 주변 도시까지 고려할 수 있는 서울 대도시권차원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대중교통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를 형성하여 중심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도시구조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중심지체계는 수도권으로부터 통행유입의 거점이 되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중심지를 지정하거나 기능을 강화하여 권역생활권 단위로 일자리를 확보하고, 도심 등으로의 장거리 통근을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함.
- 또한 도시철도망을 대도시권 차원으로 확장·연장하고 중심지체계와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서울의 중심지와 수도권 주요 도시들 간 소통 및 상생발전을 위한 다핵연계형 중심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아울러 내·외사산 중심의 환상녹지축과 도심~용산공원~한강을 연결하는 남북녹지축 등 공원·녹지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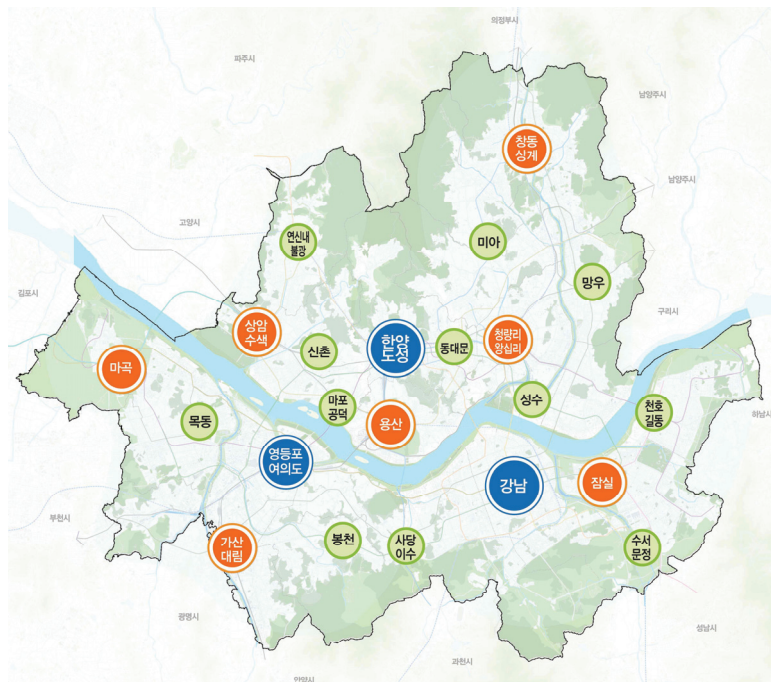
〈그림 4-3〉 중심지간의 연계 및 인접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축 설정

### 3. 공간구조 설정

#### 1) 중심지체계 개편

####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 2030 서울플랜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요구, 권역 간 격차 심화, 서울대도시권으로의 광역화, 글로벌 대도시권 간 경쟁심화 등 공간구조와 관련한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함.
- 기존 중심지체계는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의 단핵의 단순 위계적 공간구조로서 위에서 제기한 과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030 서울플랜의 중심지체계는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다핵의 기능적 체계를 강조하여, 중심지별 특화육성과 중심지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을 가능하도록 함.
- 중심지체계는 서울의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기본요소로서 서울시 차원에서 직접 관리해야 할 중심지를 기준으로 구성함. 서울대도시권 및 5개 권역생활권 차원에서 중추기능을 담당해야 할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은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함.
- 이외에 각 권역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활동의 거점인 지구중심은 기정 2020 도시기본계획의 지구중심을 유지하되,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 수립 시 자치구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즉, 지구중심의 지정과 관리를 자치구와 구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림 4-4〉 2030 서울플랜 중심지체계



### 도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서울의 다핵화된 공간구조를 반영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양도성지역(기존 사대문안 도심) 외에 서울(서울대도시권)의 대표적인 발전축을 고려한 강남, 영등포·여의도를 추가함으로써 3도심 체제로 구성하고, 3개 도심이 특화하여 담당해야 할 글로벌 기능을 부여함.

〈표 4-2〉 3대 도심의 특성 및 육성방향

**한양도성** : 역사문화중심지 (ICC : International Cultural Center)

- 서울의 역사도심으로 국제적인 문화교류기능을 담당

※ 기존 도심의 범위를 한양도성 안으로 한정하여 역사보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경제, 행정, 문화 중심지로서의 특별한 지위 유지

**영등포·여의도** : 국제금융중심지 (IFC :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 증권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국제금융기능을 담당

**강남** : 국제업무중심지 (IBC :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 국제기구유치 및 MICE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비즈니스 기능을 담당

### 광역중심 : 기능적으로 특화된 중심지 육성을 통한 권역별 균형발전 도모

- 광역중심은 도심의 글로벌 기능을 보완하면서, 업무, 상업·문화, 관광, R&D,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특화된 광역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확산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함.
- 광역중심의 입지조건은 지역중심급 이상 중심지에서 신성장산업의 집적도, 광역철도의 연계성, 대규모 개발가능지, 별도의 개발계획 수립여부 등을 기준으로 설정함.
- 이에 따라 기존의 부도심인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 외에 창동·상계, 마곡, 가산·대림, 잠실 등 총 7개 지역을 광역중심으로 선정함. 광역중심은 권역생활권별로 1개를 선정하지만, 생활권별의 규모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동북권과 서남권은 2개의 광역중심을 지정함으로써 자족기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유도함.

〈표 4-3〉 7대 광역중심의 특성 및 육성방향

**용산 (도심권)**

- 역사도심인 한양도성 안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밀·고층의 대형 상업·업무시설 등을 흡수하고 한양도성 및 영등포·여의도와 연계한 국제기능 등 고차업무기능을 집적

**청량리·왕십리 (동북권)**

- 지역 간 철도교통 및 환승역세권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상업·문화중심 기능을 집적

**창동·상계 (동북권)**

- 경원축의 중심지로 창동차량기지 등 가용지를 활용하여 지역고용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외곽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통근교통을 흡수하고 서울 대도시권 동북지역의 자족성을 제고

**상암·수색 (서북권)**

- 한강축에서 경의축이 갈라지는 교차점으로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활용하여 서울 대도시권 서북지역의 광역적 고용기반을 구축

**마곡 (서남권)**

- 김포공항 및 상암과 연계,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활용하여 신규 지식기반산업을 창출

**가산·대림 (서남권)**

- 산업단지 및 구로차량기지 등 가용지를 중심으로 창조적 지식기반 고용기능을 확산

**잠실 (동남권)**

- 강남 도심과 연계, MICE 산업 등을 육성하여 국제적 관광·쇼핑기반을 구축

**지역중심 : 생활권별 고용기반 마련 및 자족성 강화**

- 지역중심은 권역생활권별로 자족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주균형의 지역고용기반을 형성하고 공공서비스 공급 및 상업·문화 중심기능을 담당해야 할 12개를 설정함. 지역중심의 주요 역할은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한 상업·업무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활권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 지역중심은 기존 지역중심지를 기준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함. 여기에는 망우, 미아, 신촌, 목동, 천호·길동 등이 포함됨. 기존 지역중심 중에서 연신내·불광, 마포·공덕, 사당·이수, 수서·문정(전략중심지) 등은 기존 중심지의 개발현황과 향후 잠재력을 반영하여 기존 중심지의 범위를 확장하여 설정함.
- 기존 도심이 한양도성으로 명칭과 범역이 조정됨에 따라 동대문 성곽과 연결한 창신동과 황학동 일대를 별도로 '동대문' 지역중심으로 설정함.



- 동북권의 특화발전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지구중심인 ‘건대입구’를 성수 준공업지역과 연계하여 ‘성수’ 지역중심으로 조정함. 서남권의 육성을 위하여 권역 내 지구중심 중 발전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봉천지구중심(서울대입구역)을 지역중심으로 조정함.

〈표 4-4〉 12대 지역중심의 특성 및 육성방향

① 동대문 (도심권)

- 패션산업 등을 통해 다양한 창조산업 육성(※ 역사보전에 초점을 맞춘 도심과 기능 구분)

② 망우 (동북권)

- 지역 간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상업·문화 중심기능을 집적

③ 미아 (동북권)

- 교통의 결절점으로 상업·문화 중심기능을 집적

④ 성수 (동북권)

- 건대입구의 대학잠재력과 성수준공업지역을 연계하여 창조적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 전환

⑤ 신촌 (서북권)

- 신촌·홍대앞 등 집적된 대학잠재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창조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⑥ 마포·공덕 (서북권)

- 공항철도를 기반으로 기존의 업무기능을 확대

⑦ 연신내·불광 (서북권)

- 교통의 결절점으로 상업·문화 중심기능 집적 및 사회혁신창조클러스터를 활용한 신성장산업 육성

⑧ 목동 (서남권)

- 기존의 업무 및 상업 중심의 자족기능 확대

⑨ 봉천 (서남권)

- 행정, 상업, 문화, 대학 등의 특화된 기능의 융복합을 통하여 서남권의 복합업무거점으로 육성

⑩ 사당·이수 (서남권)

- 동·서 및 남·북 간 교통의 결절점으로서의 잠재력을 활용한 고용기반 강화

⑪ 수서·문정 (동남권)

- 광역교통기능(KTX)과 연계하여 업무·R&D·물류 등 복합기반 구축

⑫ 천호·길동 (동남권)

- 대규모 배후지역 개발에 따라 외곽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통근교통을 흡수하는 고용기반 구축

## 지구중심 : 주민의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 지구중심은 자치구 단위의 중심지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린생활의 기반이 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중심지임. 지구중심은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에서 필요 시 자치구, 주민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지구중심은 중심지체계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지구중심을 존중하도록 함. 단, 자치구 내의 중심성 변화, 가용지 및 신규 교통망 개설 등 발전 잠재력 등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의 정책적 의지 및 권역생활권 내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함.
- 지구중심을 조정할 경우 다음의 조정기준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표 4-5〉 지구중심 조정 기준

1. 지구중심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현재 자치구별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중심의 총량 범위 내에서 운영함.
2. 지구중심을 조정할 경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며 상업·업무 중심의 토지이용 특성을 보이는 준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함.
3. 지구중심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심지별 실태분석이 포함되어야 함. -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현황, 최근 10~15년간 신축비율, 용도별 연면적 비율, 해당지역 개발계획 수립여부 등
4. 자치구는 지구중심 중에서 자치구를 대표하는 중심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5. 중심지는 중심지계획의 내용 및 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육성전략 및 관리전략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고 관련 사업을 점검함.

〈표 4-6〉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서울플랜 중심지체계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
<b>[1 도심] 도심</b>	<b>[3 도심]</b> 한양도성, 영등포·여의도, 강남
<b>[5 부도심]</b> · 용산 · 청량리·왕십리 · 상암·수색 · 영등포 · 영동	<b>[7 광역중심]</b> · 용산 · 청량리·왕십리 · 창동·상계 · 상암·수색 · 마곡 · 가산·대림 · 잠실
<b>[11 지역중심]</b> · 동북권 : 망우, 미아, 상계 · 서북권 : 신촌, 공덕, 연신내 · 서남권 : 목동, 대림, 사당·남현 · 동남권 : 잠실, 천호·길동 ※ 전략육성중심지 : 망우, 상계, 연신내 ※ 전략육성지 : 마곡, 문정	<b>[12 지역중심]</b> · 도심권 : 동대문 · 동북권 : 망우, 미아, 성수 · 서북권 : 신촌, 마포·공덕, 연신내·불광 · 서남권 : 목동, 봉천, 사당·이수 · 동남권 : 수서·문정, 천호·길동
<b>[53 지구중심]</b>	<b>[지구중심]</b> · 기존 지구중심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자치구,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2) 광역교통축

- 서울 대도시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주근접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도시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행정구역 내부로 한정된 철도망을 대도시권 차원으로 확장·연장하고 중심지체계와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간 소통 및 상생발전을 위한 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하여 광역철도노선은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제시한 수도권 고속철도 및 광역급행철도와 광역철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함.
- 광역철도축을 설정할 때는 상위계획인 국가철도망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하고, 동시에 중심지체계를 반영한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이 통합적으로 연계 수립될 수 있도록 함. 한양도성(기존 도심)-강남-영등포·여의도의 3개 도심과 7개의 광역중심지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하여 도시 공간구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함께, 신분당선의 연장 및 서남권 광역급행철도 신설, 동북권 광역급행철도 연장 등 국가계획에 정합하지 않거나 반영되어 있지 않은 서울시 자체계획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함.

### 신분당선 연장 및 신안산선의 추진

- 정부가 추진 중인 신분당선은 도심을 경유하여 고양시 삼송까지를 연장하여 장래 수도권 동남권과 서북권을 직결로 연계하는 광역급행교통수단으로 활용함. 노선 수정은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을 통해 추진하도록 함.
- 현재 서북권에서 도심방향으로의 접근수단인 ‘통일로’와 ‘지하철 3호선’의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분당선이 서북부 지역까지 연장되고 기존의 지하철 6호선과 환승체계가 구축되면 서북권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새롭게 설정된 3개의 도심 중에서 영등포·여의도지역 및 서남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안산선의 추진을 촉진하도록 함. 또한 한양도성과 영등포·여의도를 직결로 연계하여 도심 간 신속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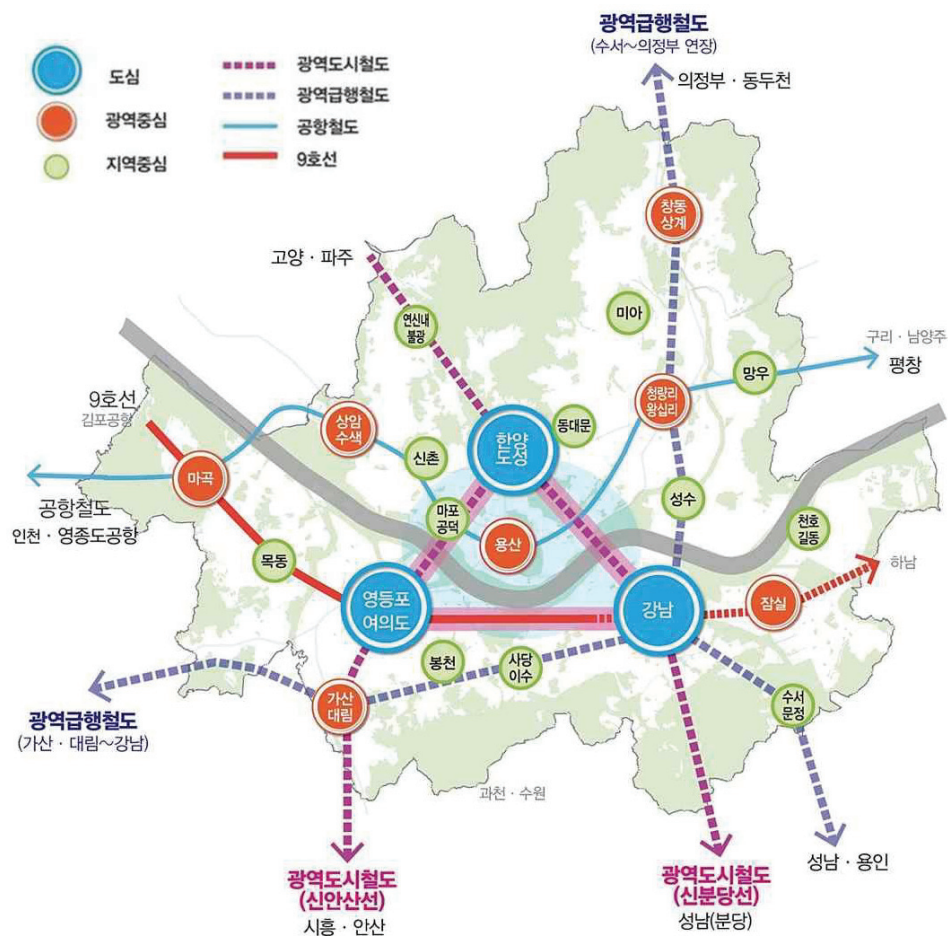
### 서남권과 동남권을 연계한 광역급행철도 신설

- 서해안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서남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가산~삼성을 연계한 남부광역급행철도노선을 장기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새롭게 설정된 광역중심인 가산지역에서 삼성지역으로 연계하여 기존의 2호선 과부화도 해소하고, 동남권과 서남권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국제업무와 첨단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광역교통축을 설정하도록 함.

- 서남권의 광역급행철도 신설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노선계획안을 반영하고 서울시내 구간의 조정은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조정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함.
- 특히 광역급행철도가 신설되면 가산이 결절점이 되어 송도 국제도시와 서울 삼성·잠실지역을 연결하여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 경인선, 지하철 2호선의 혼잡도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임. 광역급행노선의 계획은 서남권의 도시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함.

### 동북권 활성화를 위한 수서 KTX노선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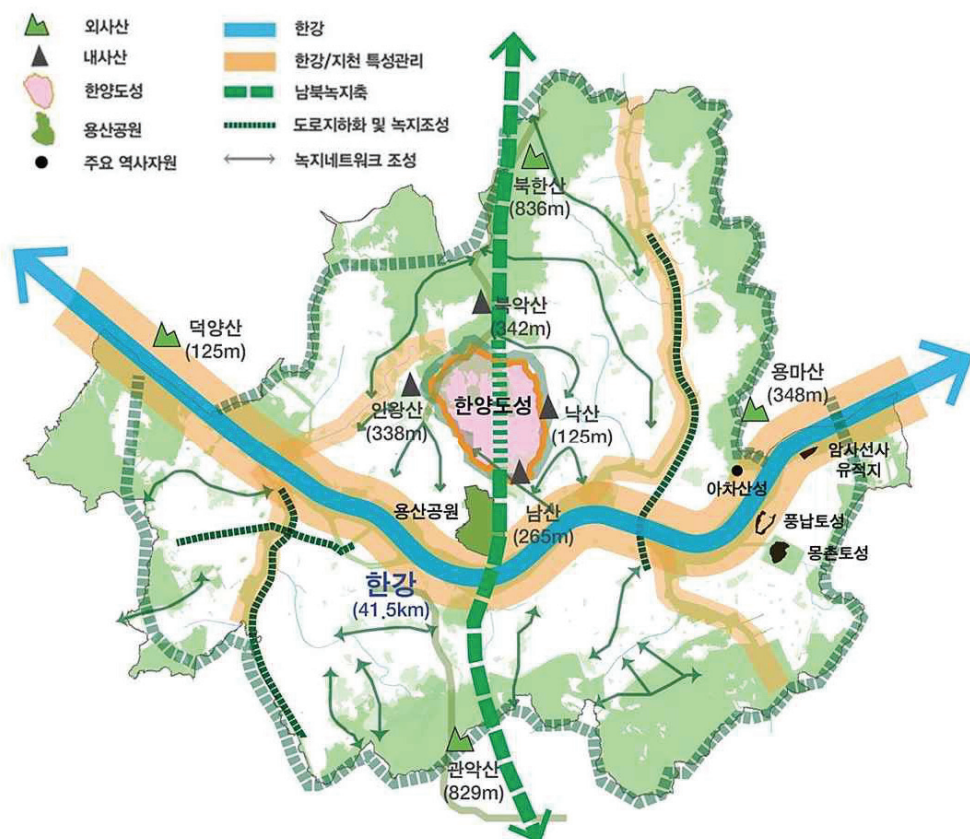
- 광역철도서비스 소외지역인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인 KTX 수서~평택 간 노선을 의정부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함.
- 서울의 권역생활권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하고 있는 동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KTX의 연장을 추진하되,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등을 주요거점으로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이 통합적으로 수립되도록 함.



〈그림 4-5〉 광역교통축 구상

### 3) 공원·녹지축

-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입지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사산 및 외사산, 한강 등 자연자원과 서울성곽 등 역사문화자원 뿐만 아니라, 용산공원, 세운상가, 한옥밀집지 등 서울의 고유한 특성을 간직한 요소들을 연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한북정맥에서 이어지는 남산지맥, 수락지맥, 한남정맥에서 이어지는 관악지맥을 바탕으로 하여, 서울의 녹지축은 북한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과 내사산과 외사산을 각각 연결하는 환상녹지축을 주녹지축으로 설정함.
- 서울의 도심과 외곽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 외사산을 각각 연결하고, 한강과 지천변 녹지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함.
- 내사산을 연결하는 내부환상녹지축은 서울성곽과 연계한 녹지문화축으로 조성하고, 외사산을 연결하는 외부환상녹지축은 녹지생태축으로 조성함. 종묘~세운상가~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에서는 세운상가 건물의 입체녹화를 권장하고 상가변의 녹도 조성을 유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녹지축을 연계함.



〈그림 4-6〉 녹지축 구상

- 한강 및 4대 지천변에는 하천 제방 주위로 한강숲을 조성하고, 하천호안은 인공호안에서 자연호안으로 변경하며, 습지원 조성 및 모래톱 복원으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지맥에서 도심 내부까지 크고 작은 녹지를 연계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바람길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조성함.
-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은 서울의 남북녹지축과 동서수경축이 만나는 지리적 중심에 자리한 입지적 중요성, 역사적인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원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과정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원 주변부는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경관관리 및 접근성을 제고함.
-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등 지하화되는 구간의 상부공간은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
- 람사르습지(Ramsar wetland)로 등록된 밤섬생태경관보전지역을 비롯하여 14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훼손되거나 단절된 지역을 회복시켜 생물종다양성 증진을 도모함.
- 녹지가 필요하지만 사유지인 지역은 입체녹화조성 지원,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 민간공원 조성의 방법으로 협력적 녹화를 시도함.

## 4. 공간구조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

- 2030 서울플랜은 향후 20년간 서울의 미래상과 5대 핵심이슈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간구조의 개편안을 제시하였음. 공간구조 개편의 기본방향은 서울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도시경쟁력 제고와 권역 간 균형발전을 설정하고 있음.
- 미래상과 핵심이슈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전략을 공간적으로 실현하고 공간구조 개편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 2)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3) 지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 4) 시민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큰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12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음.
- 공간구조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는 향후 서울의 도시공간 정책 수립·운영에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정책실행의 평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1)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는 향후 서울시 공간관리 전략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향후 중심지의 육성과 주거지 정비 등의 도시재생은 서울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추진되어야 함.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와 관련한 핵심이슈는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로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다운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특별한 공간관리전략 수립이 요구됨. 아울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원 및 녹지축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

#### 과제 1 자연·역사 문화유산 일대 특별 관리

- 주요 문화재들이 집중되어 있는 한양도성지역을 역사도심으로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의 보존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 경관, 용도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한강변을 ‘자연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북 중심지 간의 상호연계 강화 등 한강중심의 도시공간 구현
- 용산공원은 서울의 남북녹지축과 동서수경축이 만나는 서울의 중심으로 입지적 중요성, 역사적인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의 과정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
- 역사도심, 한강변,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관리 기본계획 추진

## 과제 2 서울다운 도시경관 창출

- 내·외사산 주변의 경관관리를 위해 산의 자락을 이루는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함. 또한 한강 및 주요지천의 구간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수변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특히 한강변은 자연문화유산으로 관리
- 성곽도시 서울의 역사경관 회복을 위해 서울 한양도성을 보존하고 멸실·훼손된 부분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선사시대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2000년 역사를 대표하는 유적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거점’을 조성하고, 역사문화거점별 경관형성계획 등을 통한 경관 관리

## 과제 3 공원·녹지 네트워크 강화

- 도시화로 인해 기능적·공간적으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녹지축을 연결·복원하고, 수도권 지역의 주요 산맥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녹지 네트워크 강화
- 교육·도시농업·축제·문화 등을 통한 공원과 도시기능의 연계 및 역할 강화

## 2)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서울 대도시권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는 공간구조 개편의 핵심적인 목적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중심지 육성 및 미래산업환경 구축 등 물리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임.

중심지 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기반을 마련하고, 창조적 산업기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특화된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도록 함. 이러한 점적인 기능들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는 철도중심의 광역교통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중심지간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대도시권 차원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교통이 통합된 계획 수립이 요구됨.

## 과제 4 국제적 중심기능 창출

-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여의도의 3개 도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업의 적극 유치 및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
- 전통문화, 한류, K-pop 등 세계적 수준의 문화기능 육성
- 도심의 국제적 기능 보완을 위해 용산, 창동·상계,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등 7개 광역중심의 특화기능 육성을 통한 광역적 고용기반 창출



### 과제 5 광역거점을 대도시권 혁신을 주도하는 특화거점으로 육성

- 서북권의 상암을 일산, 장항 등 경기도 디지털방송문화축을 연계하여 미래 디지털방송의 혁신거점으로 육성
- 서남권의 G-Valley 등 첨단산업으로 특화된 가산·대림 광역중심을 안산, 시흥, 광명 등 경기도의 서남권 거점과 연계하고 R&D 육성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과천, 안양, 광교 등과 연계하여 첨단산업 R&D 특화기능을 강화
- 테헤란로, 포이벨리, 문정 등에 집적되어 있는 IT-첨단산업관련 기능을 판교-성남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벤처기능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
- 동북권의 창동·상계는 광운대역과 홍릉단지와의 연계를 통하여 대학기능을 특화육성하는 거점으로 조성하고 동두천, 의정부, 양주 등 광역배후권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신경제중심 지로서의 새로운 고용거점으로 조성

### 과제 6 광역교통기반 강화

- 새롭게 개편된 한양도성-강남-영등포·여의도의 3개 도심은 서울대도시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3개 도심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심 간 직결체계 등 연계기능 강화
- 도심 간의 연계뿐 아니라 광역대도시권의 고용거점기능을 하게 될 7개의 광역중심이 기능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심지 간 급행교통망의 구축이 필수적임. 특히, 서울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 구축을 위하여 광역급행철도망의 구축을 우선적으로 실현함. 광역급행철도망은 상위계획인 국가철도망계획과 정합성을 맞추되 서울시내 구간은 공간구조의 틀 하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

### 3) 지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

지역별 균형발전은 서울시정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서,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중심지를 육성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원과 연계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노후 기반시설 및 가용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수립·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권별 주요 불균형 지표를 발굴하고 관리함.

#### 과제 7 권역별 자족기반 강화

- 수도권 배후지를 고려한 업무, 상업·문화, 관광, R&D,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특성화된 광역적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확산하며,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7개의 광역중심지를 육성
- 권역(대생활권)별로 자족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주균형의 지역고용기반을 형성하고 공공서비스 공급 및 상업·문화 중심기능을 담당해야 할 12개 지역중심을 육성
- 가용지는 장기적으로 공공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역점을 두고, 장래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권역의 자족기반 확보·강화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 과제 8 소외·낙후지역의 재생

- 도시재생은 지역의 잠재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함. 예를 들어 동북권은 밀집한 대학자원을 활용하여 벤처 및 캠퍼스타운 등의 조성을 통하여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대학의 R&D 기능과 기업과의 연계, 인쇄·의류·제화 등 중소규모의 제조업기반이 밀집된 지역의 특화육성 등을 통하여 실효성이 높은 도시재생을 추진
- 철도구간 중 노후화되고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세권의 활용 및 일부 구간의 단계적인 입체·복합화 등을 통하여 지역활성화를 장기적으로 유도

#### 과제 9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합대책 마련

- 복지, 문화 등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플랜 모니터링 과정에서 권역 간·권역 내 대표적인 불균형 지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생활권계획’을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이슈를 제도적 도시계획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하게 추진·관리할 수 있는 계획체계로 정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특화발전전략을 수립

#### 4) 시민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은 공간구조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를 위하여 권역(대생활권)에서 동네차원의 지역(소생활권)까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과제를 도출함.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비방식을 개발하고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화복지교육 분야에 관한 생활인프라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확충함.

##### 과제 10 생활권 단위의 지역 특성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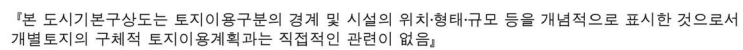
- 2030 서울플랜 이후 수립되는 생활권계획에서는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소생활권)계획(3~5개 행정동 단위)을 수립하여 소생활권 단위까지 치밀하고 예측 가능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별 계획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과제 11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체계 구축

-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조직과 장소적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적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
-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을 위해 수요에 맞는 커뮤니티시설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저층주택 밀집지역 및 공동주택 등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

##### 과제 12 문화, 복지 등 생활인프라 확충

-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등 문화·복지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의 지원을 강화
- 어린이, 노인, 장애인 편의시설과 공공보육시설 등 약자 친화적 생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그림 4-7〉 서울 도시기본구상도

## 제2절 | 토지이용계획

### 1. 토지이용방향

#### 1) 기성시가지

##### 역세권 입체·복합 토지이용 유도

- 역세권은 높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주거와 비주거 기능을 입체·복합적으로 유도하여 직주근접을 실현하는 공간구조로 조성함.
- 이를 위해 기존 토지이용과 도시조직을 고려한 역세권의 특성에 따라 용도, 밀도, 높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 용도지역 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정비하고, 역세권의 유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등 도시계획적인 실현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역세권 내에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역세권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근린상업, 업무, 주거, 공공서비스 등으로 기능을 특화하여 입체·복합화를 유도함.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가적인 기능 도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내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추진함.

##### 중심지 특성을 고려한 용도와 밀도관리

- 공간구조계획에서 정한 중심지의 기능 및 역할과 기반시설 용량, 가용지 여부 등 공간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중심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도심과 광역중심은 별도의 중심지 발전계획을 통해 중심지 기능특화를 유도함. 지역중심 및 지구중심은 생활권계획에서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그에 맞춰 적절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지역 내 필요시설 등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공간구조 및 생활권계획에서의 중심지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중심지 특성별로 차별화된 밀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한양도성 안 특별관리

- 천년 고도의 역사성을 간직한 한양도성 안 지역은 지역특성 및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함께 경제적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한양도성 지역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한양도성 내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주변 내사산 등과의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밀도와 높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주변지역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 기성시가지 내 정비사업 추진 시 주변지역을 고려한 적정 밀도와 높이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밀도와 높이체계 내에서 적정 용적률을 설정하고,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은 지양하도록 함.
-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 특성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고층·고밀의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주변 자연경관 및 지역커뮤니티를 고려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높이관리

- 기성시가지 내 무분별한 초고층 건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경관 및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계획적인 높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지 위계별 최고층수를 차등관리 함. 특히 5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업무·상업·주거·문화·여가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된 건물로서 도심·광역중심(한양도성 내 제외) 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입지를 한정하도록 함.
- 주요 산 주변, 구릉지의 건축물은 저층을 원칙으로 하며, 한강변 등 수변 연접부는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함.
- 특히 역사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주요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문화재 관련 법령에 의한 획일적 관리에서 벗어나 역사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표 4-7〉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

용도지역	도심·광역중심	지역·지구중심	그 외 지역
상업, 준주거	복합 : 51층 이상 가능 주거 : 35층 이하	복합 : 50층 이하 주거 : 35층 이하	복합 : 40층 이하 주거 : 35층 이하
준공업	복합 : 50층 이하, 주거 : 35층 이하		
일반주거	제3종일반 : 주거 35층 이하, 복합 50층 이하 제2종일반 : 25층 이하		제3종일반 : 35층 이하 제2종일반 : 25층 이하

## 2) 보존관리대상지

###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훼손 최소화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오픈스페이스와 녹지공간을 제공하며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시민에게 제공하는 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공간으로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보존을 원칙으로 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택호수 100호, 호수밀도 20호/ha 이상인 집단취락, 임대주택 건립, 추모공원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영개발을 통하여 추진함. 다만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은 별도의 조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며,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대상 지역은 체계적인 계획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

### 시민이용 증대와 공공편의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의 지속적 확충

- 시민들이 어디서나 공원과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시 내 단절된 녹지축과 훼손된 녹지지역을 복원하고, 생활권계획 등을 통해 생활권별로 균형 있는 공원녹지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함.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공원의 해소를 위해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적 방안과 함께 비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의 공원화, 이전적지 공원화 등을 통해 신규 도시공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함. 또한 도로변 녹화, 옥상녹화, 자투리토지 공원화, 도시농업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원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공원과 녹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함.
-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녹지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원 등 녹지율은 높게 설정하도록 함.

### 한강변 및 주요 지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 한강과 주요 지천의 물길을 복원하고 연결하여 블루 네트워크(Blue Network)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이 가지고 있는 수자원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함.
- 특히 한강변을 ‘자연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북 중심지 간의 상호연계 강화 등 한강중심의 도시공간을 구현하도록 함. 또한 수변부에 공공 공간 및 경관의 공공성 확보, 한강까지의 접근성 개선 등 한강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이용, 접근성, 경관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각종 개발 사업으로 잠식되고 훼손되었던 서울시내 생태하천과 소하천을 복원함으로써 체계적인 물길 연결을 통해 서울시 전역을 도보권 내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소하천 및 물길 복원 시에는 쾌적하고 풍부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유역 내 소규모 하수 처리장 등을 설치하여 유지용수의 공급체계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또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수상여가와 관련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물길을 활용한 수상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변공간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하통로 및 연결보행교 등 진입로를 개선하는 한편, 수변지역의 구간별 특성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변문화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함.

### 3) 개발가능지

#### 가용지의 선제적, 체계적 관리

- 토지자원 전반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개발 가용지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구축하고, 개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활용방향을 설정하는 등 유형별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가도록 함.
- 또한 주요 프로젝트 추진 시 인·허가권자로서의 제한된 역할에 머물렀던 공공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문가 포럼, 시민 토론회, 아이디어 공모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정을 통해 개발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함.
- 공공과 민간의 개발가용 토지는 업무·상업 등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용도를 중심으로 개발을 유도함. 개발이득에 대한 공공기여는 지역특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공·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지상철도 구간 및 도로 지하화 등에 따른 상부공간의 계획적 활용

- 지상철도 및 주요간선도로 지하화 등으로 인한 상부공간은 공원, 녹지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함. 이를 위해 지역 내 필요한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계획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철도, 지하철, 주차장 등 시민의 활동을 보조하는 교통기반시설은 지하에 배치하고 시민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입체적 연계성을 강화함. 이때 지하공간은 안전해야 함은 물론, 천정의 높이조절, 자연채광 도입 등 설계적 기법을 통해 심리적 불안감·거부감이 없도록 조성함. 또한, 시민들의 활동이 집중되는 결절점과 통로를 중심으로 공공, 문화 등 지원기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활동과 토지이용이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지하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지하공간의 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도심부를 포함한 중심지는 기존 공공지하시설물과 민간건축물 지하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입체적 공간을 형성하도록 함.

### 주요 대규모 가용지의 관리방향

- 서울시는 장래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가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대규모 가용지는 용산지역, 삼성동 한전부지 일대, 창동차량기지 일대, 서초동 롯데칠성부지 일대, 수색역 일대, 구로차량기지 일대, 광운대역 주변 등이 있음. 이 지역들은 개발압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장래 도시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공공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역점을 두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함.
-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이전부지는 국토균형발전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함. 이전부지의 활용방향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 및 인재의 유치, 서울형 R&D 허브 구축,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익시설의 확충 등으로 추진함.

#### 용산지역

- 용산지구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는 교통중심지로서 국제업무기능을 담당하면서 기존 도심의 기능을 보완·확장하는 중심지로 육성함.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도시개발구역 해제<sup>29)</sup>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의 도시정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함.

#### 삼성동 한전부지 일대

- 한전부지 일대는 코엑스~한전부지~잠실운동장을 연계하여 국제업무 및 MICE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함. 기존 인프라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국제기구 및 국제협회 등의 유치를 통해 국제적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함.
- 아울러, 탄천 등 유휴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인 녹색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함.

29) 2013.10.10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3호)

### 창동차량기지 일대

- 창동차량기지 일대는 도봉면허시험장, 창동역 환승주차장, 체육시설부지를 연계하여 서울 동북권과 수도권 북부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중심으로 육성함. 업무, 상업, 문화시설 중심 자족도시의 조성과 더불어 광역적인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광역 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리함.

### 서초동 롯데칠성부지 일대

- 롯데칠성부지 일대는 개별 필지단위 계획보다 종합적 검토를 통한 공공성 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대안 검토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함.

### 수색역 일대

- 수색역 일대는 경의선과 직결되는 남북교류의 거점이자 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함. DMC 개발, 월드컵경기장의 건설, 석유비축기지의 활용 등을 계기로 서울의 21세기를 선도하는 미래형 멀티미디어 거점으로 조성하여 서북생활권의 중심으로 육성함. 동시에 이 지역은 경의선 등 남북교류의 교통 결절점이므로 남북교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해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친화적 도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구로차량기지 일대

- 구로차량기지 일대는 서울의 첨단디지털산업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양도성, 영등포·여의도, 인천과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수도권의 경제 및 산업발전축이 관통하고 합류하는 거점임. 이 지역은 광역중심지인 가산대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변지역의 재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함.
- 이를 위하여 구로차량기지의 이전을 추진하여 이전적지에 서울대도시권의 신산업클러스터를 도입하고 역세권주변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함.

### 광운대역 주변

- 광운대역 주변은 물류기지의 이전 및 광운대역사 개발계획 수립 등에 따라 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역 간 연계성과 공공성이 확보된 개발 유도가 필요한 지역임.
- 주변 대학과 연계된 창업지원센터, 업무·상업 기능 등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2. 용도지역 관리

### 1) 용도지역 관리원칙

#### 용도지역별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된 주거·상업·준공업·녹지지역 등 해당 용도지역 지정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당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함.
-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 공간구조 개편, 핵심이슈 등을 실현하고,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등 개별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지정목적 및 기준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운영함.

#### 용도지역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관리기준을 서울시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고, 각종 계획 및 사업지침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용도지역 관리의 통합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하여 용도지역 변화량과 조정사유, 용도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하는 용도지역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용도지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관리

- 구릉지, 수변, 자연환경, 역사문화자원,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과 같이 서울의 자연 및 문화자원의 특성을 지닌 지역은 기존 용도지역의 유지·관리를 원칙으로 특별하게 관리함.
- 지역별 지형, 입지특성, 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반영하여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서도 밀도와 용도가 차등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용도지역 상향은 중심지체계 등 공간구조 구상의 실현, 생활환경의 개선,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부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되, 지역특성과 부합하는 밀도, 용도, 높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2) 용도지역 조정원칙

### 용도지역 조정요건

- 용도지역 조정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 *법령 제·개정 및 관련 계획에서 조정 필요성을 제시한 경우*

-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사업, 정비사업 등 도시관리계획의 실현을 위해 용도지역 조정 필요성을 제시한 경우
- 중심지계획, 생활권계획 등 서울시 차원의 종합계획 성격을 가진 관련 계획에서 용도지역 조정 필요성을 제시한 경우

####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한 경우*

- 서울시 주요 도시관리정책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인근의 대단위 개발사업 완료 또는 개발계획 확정, 역세권 형성 등으로 토지이용이 급격하게 변화되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 반복되는 수해 등 재난방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재해방지 등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시행)
-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부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경우

### 용도지역 조정방법

- 용도지역 조정은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용도지역 조정에 따른 합리적인 공공기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공공기여는 생활권계획 등 지역단위 선제계획을 통해 생활밀착형 효율적 공급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의 질적 향상 및 공공기여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함.
- 용도지역 조정범위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하며, 주변 용도지역과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3)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 주거지역

- 2030년까지 주거지역의 수요를 추정한 결과, 현재 주거지역에서 향후 20년간 필요한 연면적의 상당 부분의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sup>30)</sup>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주거지역 내 개발수요는 일반주거지역 내 종세분화의 기초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즉, 추가적인 주택공급은 경관 및 기반시설의 부작용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에서 우선적으로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고, 녹지지역 등 타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검토하도록 함.
-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저밀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가급적 현행 용도지역을 유지하고, 전용주거지역 특성에 맞는 용도와 밀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일반주거지역은 종세분화 기본원칙과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주거밀도 및 높이기준을 고려하여 관리하며, 주거환경에 저해되는 용도유입으로 인한 주거지 동질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함.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은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주변 주거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자연환경 및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지역의 특성유지 및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제한하도록 함.
- 준주거지역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심형 주거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복합용도지역으로 관리하도록 함.

#### 상업지역

- 2030년까지 상업지역 수요를 추정한 결과 현재 서울시 상업지역 밀도체계와 최근 개발추이를 고려할 때, 상업지역 추가지정 없이 기존의 상업지역 내 미이용되거나 저이용 되는 밀도를 활용할 경우 2030년까지 필요한 연면적의 확보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상업지역은 중심지 개편 및 활성화 등 상위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기존 상업지역 이외에 추가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상업지역으로의 조정은 도시기본계획의 공간발전구상, 중심지체계 등과의 정합성, 업무·상업 수요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검토하며, 고밀주거개발을 위한 상업지역으로의 조정은 제한하도록 함.
- 상업지역의 지정은 역세권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가급적 기존 중심지와 토지이용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면적형태로 지정하도록 함.
- 상업지역은 업무·상업기능 도입을 통한 고용창출, 중심지 육성 및 기능강화 등 상업지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함. 또한 지구단위계획 등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함.

30) 용도지역별 수요추정 결과는 자료집 1 제1부 토지이용편(토지의 용도지역별 수요 및 공급방안) 참조

- 중심지위계, 개발수요,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등 지정목적에 맞는 상업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상업지역별 밀도와 높이 등이 차등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함. 특히 중소규모의 업무·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소규모 지역상권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한 지역 등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함.

## 준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의 현재 평균용적률은 189%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400%)의 47% 수준에 불과함. 따라서 2030년까지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필요한 연면적은 기존 준공업지역의 밀도관리를 통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준공업지역은 미래 신산업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면적 총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준공업지역의 추가지정 또는 타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은 기존 산업공간 유지, 도시기본계획의 공간발전구상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검토함.
- 준공업지역은 공간구조, 토지이용현황, 공장비율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계획적 관리를 유도함. 공장부지 또는 이전지에 부득이하게 주거용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

## 녹지지역

- 녹지지역은 과거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타 용도지역으로 전환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 따라서 녹지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의 방지, 녹지축 연계 등을 위해 타 용도지역으로의 조정을 최소화하고, 녹지지역 내 불법용도 유입, 공장 등 도시기능의 과도한 밀집으로 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
- 훼손된 녹지지역은 복원을 원칙으로 하되, 국책사업 및 서울시 현안사업과 같이 공공의 정책상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전체 녹지지역 면적<sup>31)</sup>의 3.2%(약 7.9km<sup>2</sup>)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조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표 4-8〉 자연녹지지역 중 용도지역 변경 검토 지역

연번	구역명	위 치	면적(㎡)	구역지정일	목 적
1	구룡마을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원	286,929	2012.8.2	'8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집단 무허가 판자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
2	갈산	양천구 신정동 171-61번지 일원	33,844	2012.11.8	갈산지역 노후공장, 주택 등 재정비를 통한 장기민원 해소

31) 2011년 기준 녹지지역 면적 243.5km<sup>2</sup>







## 제1절 | 생활권계획의 개요

### 1. 생활권계획의 개념

- 생활권계획이란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갖는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자연적·물리적 생활환경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연령·계층·문화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생활권의 발전방향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는 계획임.
- 생활권계획은 미래상, 핵심이슈별 계획, 공간구조 등 서울플랜의 주요내용을 생활권단위로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지침과 방향을 제시함.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다양한 생활개선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주민참여에 기반한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서울시·자치구·주민·전문가 등 관련 주체의 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함.
- 생활권계획은 생활권 간 격차뿐만 아니라 생활권 내의 격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생활권계획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서울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권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전략적인 공공투자와 중점정비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갈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

### 2. 생활권계획의 역할 및 기능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단위로 구체화하고 종합화

- 2030 서울플랜의 공간계획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중심지체계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핵심이슈별 계획도 서울시 전역에 대한 이슈별 계획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생활권계획은 서울플랜에서 제시된 공간계획과 핵심이슈별 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는 계획임.
- 생활권계획은 핵심이슈별 계획에서 부문별로 제시한 목표와 전략 등 계획내용을 생활권단위로 종합화하여 제시함. 이를 통해 생활권계획은 핵심이슈별로 수립된 계획내용의 정합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서울시와 관련부서, 그리고 자치구 간에 추진해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하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대한 지침 제시

-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계획의 공간범위와 구체성에 따라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계획내용을 생활권 단위에서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생활권의 발전방향과 정책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환경 개선과제로 담아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중간단위의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등 구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해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수행함.

## 자치구 발전계획 및 자치구 간 상생발전을 위한 근거 제시

- 자치구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특정시설의 입지가 중복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2개 이상의 인접한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파급효과가 있는 계획이나 사업 등에 대해 생활권 차원에서 조정·보완하는 계획이 필요함.
- 생활권계획은 자치구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5개 권역별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자치구계획 및 관련 하위계획의 지침 역할을 수행함.

### 3. 생활권계획의 구성

- 생활권계획은 서울플랜의 계획내용을 권역별로 제시하는 권역별 구상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후속계획으로 수립되는 권역(대생활권)계획 및 지역(소생활권)계획으로 구성됨.
- 권역별 구상은 5개 권역(대생활권)별로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발전방향과 부문별 주요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서울플랜 후속계획으로 수립되는 생활권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권역(대생활권)계획은 권역별 구상을 구체화하여 권역 발전의 목표와 권역 내 중심지와 주거지 등의 관리 및 육성방향을 제시함. 지역(소생활권)계획은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생활권의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함.
- 권역(대생활권)계획 및 지역(소생활권)계획은 권역별 구상을 반영하되, 생활권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수립·구성할 수 있음.

〈표 5-1〉 생활권계획의 구성 및 주요내용

구분	성격	계획범위	시민참여과정	주요 목표 및 내용	비고
권역별 구상	핵심이슈, 공간구조 구상을 권역별로 공간화 후속 생활권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요과제 제시	권역생활권 단위	자치구 및 주민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특화·균형발전방향</li> <li>• 권역별 중심지(일자리공간)의 육성방향</li> <li>• 교통체계개선과 공원녹지축의 연계방향</li> </ul>	이번 서울플랜에서 권역별 주요과제 제시
권역 계획	권역별 구상의 구체화 지역생활권의 방향설정	권역생활권 또는 중생활권 단위	자치구 협력단, 시민참여단, 전문가자문, 온·오프라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균형발전</li> <li>• 고용기반 및 자족성 강화(중심지, 산업)</li> <li>• 광역기반시설과 인프라 구축</li> <li>• 자치구 간 공동 대응이슈 및 추진전략</li> </ul>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화
지역 계획	생활상의 개선과제와 주민밀착형 이슈발굴	인구 5~10만 단위(3~5개동)  총 140여개 생활권	주민참여단, 주민대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밀착형 생활환경 개선과제 도출</li> <li>• 서울시 도시관리 원칙의 구체화</li> <li>• 보전, 관리, 육성이 필요한 사항</li> <li>• 생활권별 특화 발전</li> </ul>	

## 제2절 | 생활권의 구분 및 설정

- 생활권의 공간범위는 지형·지세, 하천, 도로 등의 자연적·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과정과 영향권, 중심지 기능과 토지이용 특성, 행정구역과 교육학군, 주거지와 거주인구의 특성,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심생활권, 동북생활권, 서북생활권, 서남생활권, 동남생활권 등 5개 권역(대생활권)으로 구분함.
- 권역(대생활권)에는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8개의 자치구를 포괄하고 있는 등 공간범위가 광범위하므로, 행정구역 및 인구수, 거주인구 및 토지이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필요시 2개 이상의 자치구를 하나의 공간단위로 하는 중생활권으로 세분할 수 있음.
- 생활권의 최소단위인 지역(소생활권)은 자치구 경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동별 토지이용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계획 수립 시 설정하여 운영함.



〈그림 5-1〉 생활권 구분(5개 권역)

권역	면적(km <sup>2</sup> )	인구(명)
서울시	605.96	10,575,447
도심권	55.75	577,705
동북권	171.08	3,351,170
서북권	71.19	1,227,260
서남권	162.78	3,212,138
동남권	145.16	2,207,174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10.

## 제3절 | 권역별 구상

이번 서울플랜의 권역별 구상 수립을 위해 현장시장실 운영 시 의견, 자치구 및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워크숍(2회), 서울시 실·국·본부별 공간관련 사업조사, 자치구 건의사항 검토 등을 통해 권역별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제시된 권역별 이슈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권역별로 중심지·일자리, 주거지, 교통체계, 생활기반, 지역특화발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부문별 계획과제를 도출하고, 권역별 구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슈는 후속적으로 수립되는 생활권계획에서 재검토 및 구체화하도록 함.

### 1. 도심권

#### 1) 발전방향

##### “역사문화도심으로의 위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서울의 중추핵으로 위상을 가지고 있던 도심권은 2000년대 이후 여의도, 강남 등이 집중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위상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도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패션·디자인, 인쇄, 귀금속 등 도심형 산업에 대한 특화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과거 개발시대에 훼손되었던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원과 근대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이 과제로 남아 있음. 서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도심형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 도심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 역사문화 정체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사문화도심으로의 위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심권의 발전방향으로 설정함.

## 2) 분야별 계획과제

### 중심지 · 일자리

#### 한양도성을 역사문화중심지로 육성

- 한양도성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서울성곽, 궁궐, 종묘, 사직단, 인사동, 북촌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역사문화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역사도심으로서 서울의 국제적인 문화교류기능을 강화함.
- 고차업무 및 상업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되, 소단위 정비 및 보존재개발방식 등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여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함.

#### 서울역~용산 연계 국제중심기능 강화

- 한양도성과 용산의 연계기반을 강화하는 철도축 재생을 통해 중심지 간 육성방안과 상호 보완적인 기능분담을 마련하여 도심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
- 서울역은 KTX, 인천공항철도, 신안산선 등 다양한 광역철도교통이 교차하는 국내외 교통 결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함.

### 주거지 관리 및 개선

#### 도심주거 확충을 통한 도심부 활력증진

- 외국인, 고령자, 독신가구 등 1·2인 가구의 증가, 도심회귀수요 등 도심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심형 주택과 배후시설을 공급하는 등 도심주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도심부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함. 특히, 도심부의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의료 및 문화복지시설의 확충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 구릉지, 철도역 배후지, 도심부 연접지역, 주거·상업 또는 주거·산업기능 혼재지 등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역사적 장소성을 보유한 특성주거지 보전

- 한옥밀집지역, 서울성곽, 궁궐 등 주변 주거지의 특성 보전을 위한 정비방식을 마련하고 자율적 주거지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

## 교통체계 개선

### 교통수요관리 강화

- 주차수요관리 강화, 주행거리 기반 혼잡요금제도 도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구역(LEZ : Low Emission Zone) 설정 등을 통해 승용차 통행수요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기존 차도의 축소를 통해 보도와 자전거도로 등을 확충함.

###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심 접근성 강화

-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심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안산선 조속 추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을 통해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여의도를 연결하는 급행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이와 함께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버스노선체계 재정비 등을 추진함.

## 생활기반

### 남북녹지축 및 환상녹지축 조성

- 북한산~남산~용산공원~한강을 잇는 남북녹지축과 내사산과 서울성곽을 연계한 환상녹지축 조성을 통해 다양한 시민활동의 중심지인 도심권에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함.

### 용산공원 조성 추진

- 남북녹지축과 동서수경축이 만나는 서울의 지리적 중심에 있는 용산공원은 입지적 중요성과 역사적인 상징성을 고려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활용방안을 모색함. 또한 중앙 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과정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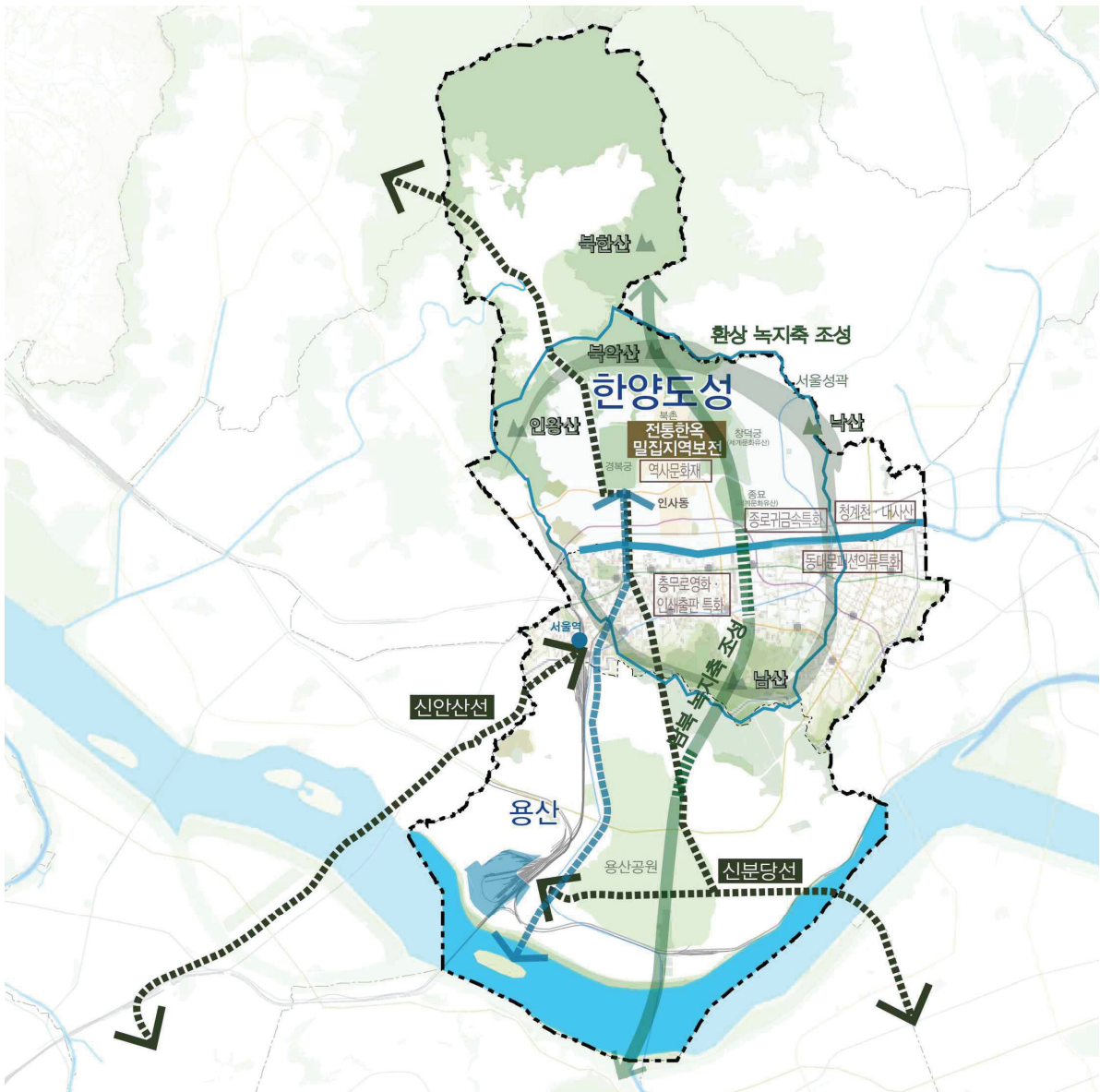
## 지역특화

### 도심부 정체성 강화 및 매력 증진

- 내사산, 한강, 청계천 등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재 주변지역의 경관관리를 강화하고, 북촌길, 인사동길, 대학로, 명동길, 이태원로, 삼청동길과 같이 특색 있는 가로경관 증진 방안을 마련함.

### 도심형 특화산업 육성

- 동대문(패션, 디자인), 종로(귀금속), 충무로(인쇄출판, 영화산업) 등 지역 내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검토함.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시에는 지역 내 산업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역 내 산업생태계 및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및 소단위 정비방식의 적용을 검토함.
- 역사문화자원, 집적된 도심의 판매시설, 도심형 특화산업의 육성 등 다양한 도심의 잠재력을 융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함. 이를 통하여 도심의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도심형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함.



〈그림 5-2〉 도심권 발전구상



## 2. 동북권

### 1) 발전방향

#### “ 자족기능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활성화 ”

- 동북권은 서울의 5대 권역생활권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이 가장 넓은 권역이며, 서울에서 가장 많은 대학이 입지해 있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고용기반 및 중심기능이 취약하고, 장거리 통근이 발생하며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타 생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임.
- 동북권의 취약한 중심기능과 고용기반을 강화하고 서울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족기능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발전방향으로 설정함.

### 2) 분야별 계획과제

#### 중심지 · 일자리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심기능 강화

- 서울의 지역균형발전과 동북권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청량리·왕십리 부도심과 창동·상계지역을 광역중심으로 지정함.
-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은 광역 및 지역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상업·문화기능 집적을 통한 동북권의 균형발전 및 내실있는 성장을 유도함.
- 창동·상계 광역중심은 창동차량기지, 면허시험장, 환승주차장부지, 중랑천변 등을 고용창출을 위한 전략거점으로 활용하여 동북권의 신(新)고용중심지로 육성함.
- 성수지역중심은 성수 일대의 준공업지역과 기존 건대입구 지구중심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기존 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적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조성함.
- 경원선 지상철구간의 역세권과 주변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입체복합형 도시재생을 추진하여 동북권의 활성화를 유도함.

##### 신성장 산업기반 강화

- 권역 내 입지한 대학과 연구기관, 홍릉·공릉 등 대규모 R&D 단지 등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신성장 산업을 특화 육성하고, 창동·상계차량기지 등 대규모 가용지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동북권의 양질 고용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주거지 관리 및 개선

### 주민의사를 고려한 정비사업의 합리적 추진

- 뉴타운 등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조속히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함.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촉진을 유도하고, 해제되는 지역은 리모델링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모색하고 지원하도록 함.
- 노원구, 도봉구는 집단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시기가 도래할 것에 대비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함. 또한 전면철거 중심의 획일적인 정비사업을 지양하고, 주거지의 특성에 따라 정비·보전·관리방안을 모색함.

### 자연지형 및 주거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정비·관리

- 중랑천변 주거지는 수변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함.
- 최고고도지구 등 구릉지에 입지한 노후 주거지는 도시경관 및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저층·저밀의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함.
-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저밀주거 밀집지역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

## 교통체계 개선

### 철도 중심의 효율적 대중교통체계 구축

- 동북권은 KTX 동북부 연장(수서~청량리~창동~의정부 구간), 경전철 동북선·면목선·우이신설 연장선 등 경전철 확충을 통해 권역 내 철도서비스 사각지역을 해소함.

### 지역여건을 고려한 친환경 교통공간 조성

-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수도권과 동북권을 연계하는 도로의 연결 및 기능을 개선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정체구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

## 생활기반

### 생활권 단위의 균형있는 문화복지시설 확충

- 동북권은 타 권역에 비해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시 및 공연시설, 체육시설, 보육·청소년시설 등이 지역생활권 단위로 균형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함.

### 공원녹지의 지속적 확충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 공원화 등을 통해 조성된 공원녹지가 시민의 생활·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역사, 생태문화공간의 정비

- 역사, 생태문화공간은 권역 내 주요 산과 하천 등과 연계한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중랑천 생태문화 공원화 등을 추진하여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북한산, 도봉산, 수락·불암산 등 주요 산으로의 조망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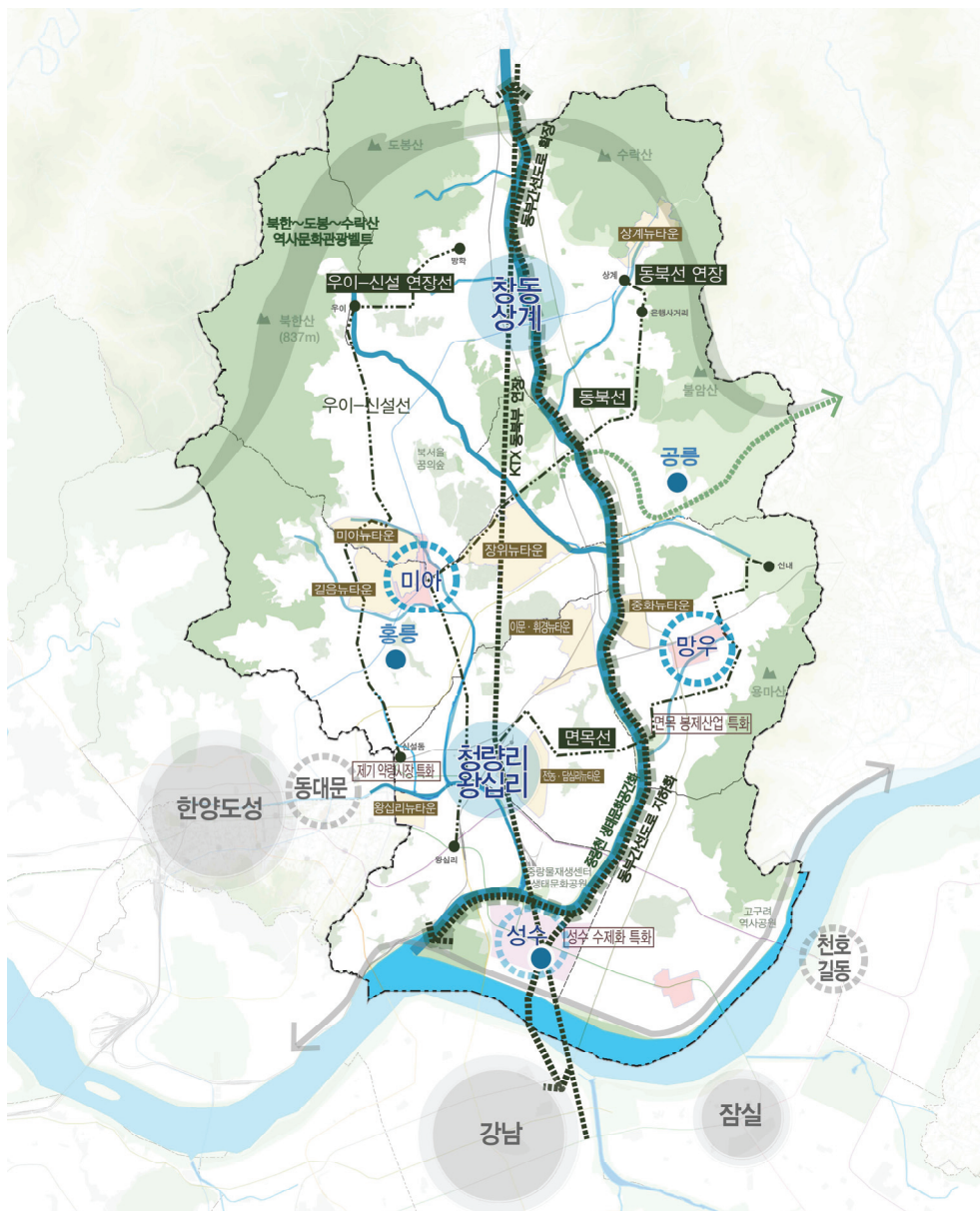
## 지역특화

### 권역 내 대학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추진

-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조직한 ‘지역발전협의체’가 문화·여가·교육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 또한 동북권에 집적되어 있는 대학의 잠재력을 직접 고용창출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지원 및 보육센터 등을 활성화함.
- 아울러 지역주민과 활발한 교류활동과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 평생교육 시행, 생활체육 교육, 시설개방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권역 내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 제기동 한방 약령시장, 성수 수제화산업, 면목·장위·석관일대 등의 봉제산업, 자동차 연관산업(성수 준공업지역~자동차매매시장) 등의 지역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그림 5-3〉 동북권 발전구상

### 3. 서북권

#### 1) 발전방향

##### “ 창조문화산업 특화 및 양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 서북권은 북한산, 인왕산이 입지해 있고 홍제천, 불광천 등이 흐르고 있어 구릉지와 하천이 발달된 친환경 주거지로 커뮤니티가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
- 상암 DMC로 대표되는 첨단 정보산업단지와 신촌·홍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커뮤니티가 조성되어 활력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신촌, 마포 등 기존 중심지의 고용기반이 취약하고, 구릉지에 발달한 저층 주거지 노후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 서북권은 신촌·홍대앞을 중심으로 창조문화산업 특화를 도모하고, 양호한 자연환경과 지역 커뮤니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창조문화산업 특화 및 양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발전방향으로 설정함.

#### 2) 분야별 계획과제

##### 중심지·일자리

###### 미래산업 고용기반 확충을 통한 중심 기능강화

- 상암·수색 광역중심은 상암 DMC를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특화를 통한 서북부 광역고용기반을 확충하고, 수색복합역사 개발과 연계하여 서북권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 신촌 지역중심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대학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적·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서북권의 창조문화산업 거점으로 특화·육성하도록 함. 혁신거점으로서의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하여 주변 배후지역의 주거 및 문화환경의 개선을 추진함.

###### 지역중심 기능강화

- 연신내·불광 지역중심은 서울크리에이티브랩(SCL), 사회혁신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사회혁신창조클러스터’를 활용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함. 마포·공덕 지역중심은 도심·여의도와 연계한 업무기능을 강화함.

## 주거지 관리 및 개선

### 지역커뮤니티와 연계한 주거지 관리

- 서북권은 안산, 백련산, 봉산, 서오릉 등 구릉지 주변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의 구릉지 재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구릉지 주변 주거지 및 전용주거지역은 저층·저밀의 친환경주거지로서 지역특성 유지 및 커뮤니티 보호를 위해 마을 만들기,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안·방범시설, 주민 복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공원 등 생활권 단위의 공공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지원하며, 리모델링 등 자발적 갱신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신촌일대의 대학교 밀집지역은 대학가 주변의 주거수요를 반영하여 소형주택이 적절히 유지·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주민의사를 고려한 정비사업의 합리적 추진

- 기존의 뉴타운 등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촉진을 유도하고, 해제되는 지역은 리모델링,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모색하고 지원하도록 함.

## 교통체계 개선

###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

- 신분당선 서북부 지역 연장 추진을 통해 서북권과 도심권을 연결하고, 경전철 서부선 연장(장승배기~서울대입구역)을 통해 서북권과 서남권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함.
- 장기적으로는 서북권과 서남권의 광역중심인 상암과 마곡을 도시철도로 연계하여 지역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홍대와 화곡 등 배후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도시철도서비스의 개선은 공간구조, 주민 편익증진, 경제적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함.

### 남북교류에 대비한 교통체계 정비

- 파주, 고양 등 수도권 서북부 개발과 은평뉴타운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남북교류에 대비하기 위해 은평새길 등 통일로를 대체하는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함.

## 생활기반

### 도시기반시설 상부의 공원화

- 경의선 및 공항철도 등 철도지하화 구간과 당인리 발전소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은 공원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생활·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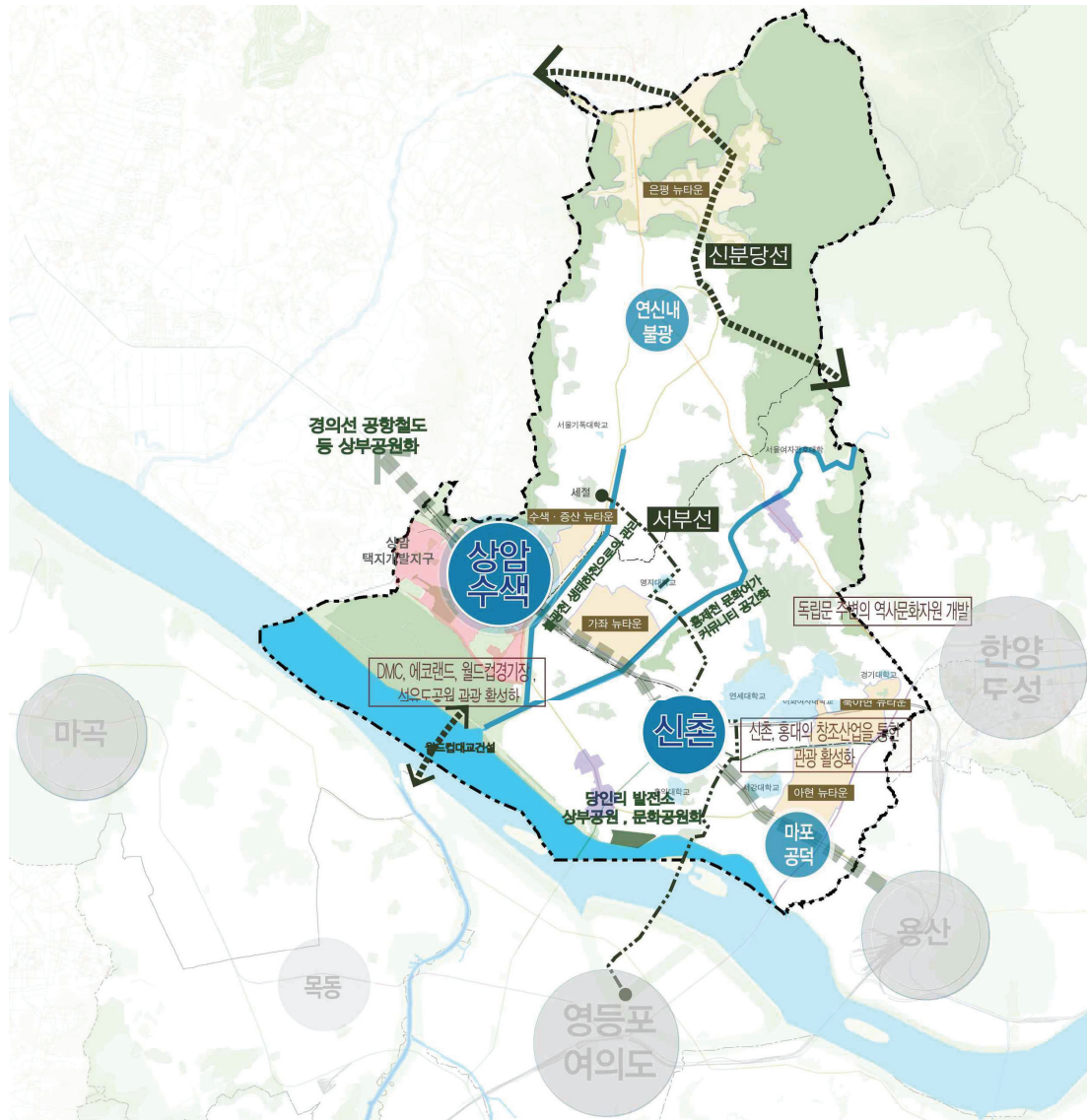
### 수변공간의 활용도 제고 및 생태하천 복원

- 홍제천, 불광천 등은 자연생태계 보존 및 경관회복을 위해 생태하천으로 복원·관리하고, 하천 주변지역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함.

## 지역특화

### 지역자원의 연계·육성을 통한 관광활성화

- 상암 DMC, 월드컵경기장, 선유도공원 등은 서북권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신촌·홍대지역은 새로운 창조문화 발신지로 기능하고 있음. 이러한 명소들을 연계하여 관광코스화하고 특화·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서대문독립공원은 독립과 민주화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고취시킬 수 있는 역사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그림 5-4〉 서북권 발전구상



## 4. 서남권

### 1) 발전방향

#### “준공업지역 혁신을 통한 신성장 산업 거점 육성 및 주민 생활기반 강화”

- 서남권은 서울 대도시권의 서남부 산업기반과 연계된 준공업지역이 대규모로 지정되어 있고, 여의도에는 금융을 중심으로 한 업무중심지가 형성되어 있어 고용기반이 양호한 지역임. 그러나 전통 제조업의 쇠퇴로 인해 대규모 공장이적지가 주거용도로 전환되고, 준공업지역 내 주공혼재와 열악한 주거환경, 공원·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서남권이 서울의 신성장 산업을 선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미래 서울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혁신을 통한 신성장 산업거점 육성 및 주민 생활기반 강화”를 발전방향으로 설정함.

### 2) 분야별 계획과제

#### 중심지·일자리

##### 글로벌 금융기능 강화

- 영등포·여의도는 영등포역 일대와 여의도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여의도에 밀집한 증권·보험 등 금융기능을 특화·육성하여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여의도는 영등포와 노량진 등 인접 지역과의 기능 및 물리적 접근성을 강화하여 도심기능의 연계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함.
- 영등포역 주변은 준공업지역의 정비를 통해 첨단산업 및 관련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서남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함.
- 도심기능을 강화하고 철도축의 재생추진을 위하여 영등포·여의도 및 용산과 입지적 연계성이 뛰어난 노량진역 일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지역혁신을 위한 신성장 산업 거점 육성

- 가산·대림 광역중심은 기존의 대림 지역중심을 업무기능이 강한 가산디지털산업단지 일대까지 확장한 것으로, 산업단지 및 구로차량기지 등을 중심으로 창조적 지식기반의 고용을 창출하는 수도권 서남부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조성함. 구로차량기지는 이전을 통하여 혁신생산거점으로 육성하여 중소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고도화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전략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함.
- 마곡 광역중심은 김포공항 및 상암과 연계, 대규모 개발가능지를 활용하여 신규 지식기반 산업 창출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함.
- 사당·이수 지역중심은 과천, 의왕, 수원 등 경기남부의 주요도시와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연계거점으로 육성하여 경기남부에서 도심으로의 통근유입을 흡수하도록 함.
- 봉천 지역중심은 행정, 상업, 대학, 문화 등 다양한 입지적 특화기능을 융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남권의 새로운 복합업무공간으로 육성함.

### 지상철도 구간 등 도시재생

- 지상철도로 인해 단절된 지역은 연계 및 지역재생전략을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함.

## 주거지 관리 및 개선

### 준공업지역 내 준공혼재지역의 주거환경 정비

-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가 상당부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어 기존 공장들과 용도혼재 및 상충이 발생하고 있음. 앞으로의 준공업지역은 산업과 주거, 지원시설이 조화된 미래형 복합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노후화된 대규모 계획시가지 및 정비사업 관리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조속히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함.
- 한편 목동, 가양 등 노후화되고 있는 계획시가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함.

### 구릉지 주변, 준공업지역 배후주거지, 외국인 밀집지역 등 관리

- 구릉지 주변 주거지는 마을단위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 및 부족한 생활편익시설의 단계적 확충방안을 마련함.
- 쪽방 및 유곽 밀집지역 등 준공업지역 배후주거지와 대림, 가리봉 등 외국인 밀집지역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교통체계 개선

### 교통망 개선 및 확충을 통한 지역연계 강화

- 신안산선의 조속한 추진, 서남권과 동남권을 연계하는 광역급행철도망계획 등을 통해 3개 도심과 연결하는 급행간선철도망을 구축하고, 경전철 확충을 통해 출·퇴근 혼잡도를 완화시키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함.
- 또한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 등에 집중되고 있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통과교통을 우회처리하기 위해 서부간선도로 및 국회대로 지하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을 추진함.
- 장기적으로는 서남권과 서북권의 광역중심인 마곡과 상암을 철도로 연계하여 지역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화곡과 홍대 등 배후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도시철도의 개선은 공간구조의 적절성, 주민의 편익증진, 경제적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함.

## 생활기반

###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균형적 배치

- 서남권은 여가문화생활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이 5대 권역 중에서 가장 취약한 권역임.<sup>32)</sup> 따라서 공연장·전시실·박물관·청소년 문화공간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취약계층·여성·고령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체계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계획함.

### 도로지하화를 통한 상부 친환경 공간 확충

- 서남권은 목동 등 신시가지와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을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등 지하화 구간의 상부공간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32) 권역생활권별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 도심권 17.12, 동북권 1.88, 서북권 2.05, 서남권 1.86, 동남권 2.47

### 생태 하천으로 복원

- 안양천, 도림천, 봉천천 등 주요 지천은 주거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태 하천으로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공원 등의 조성을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지역특화

### 지역 내 특화된 산업문화공간 육성

- G-Valley<sup>33)</sup>, 문래동 문화여가공간, 노량진 학원산업 등 권역 내 특화된 산업문화공간이 지속적으로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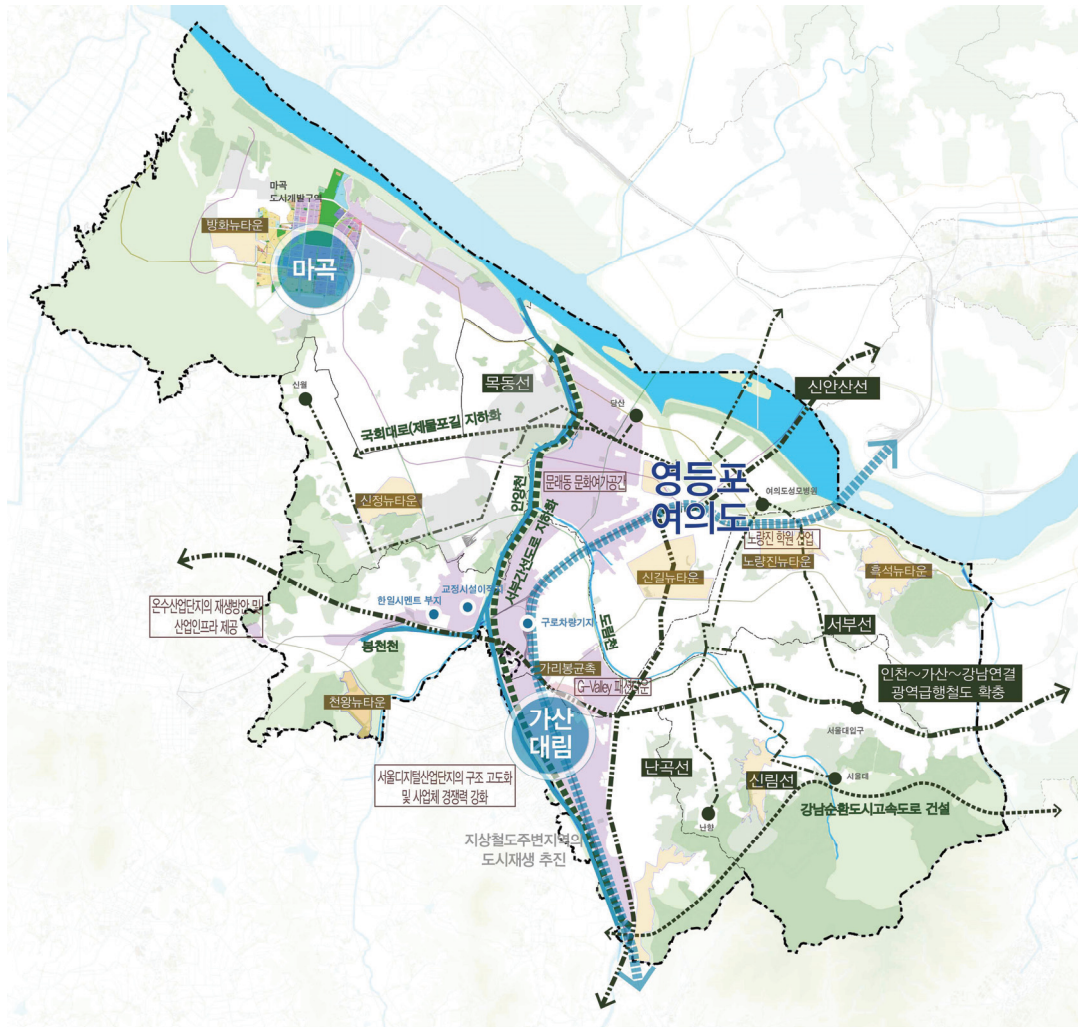
### 준공업지역의 계획적 산업입지 도모, 관리방안 마련

- 서남권 준공업지역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계획적인 산업입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함. 또한 오래된 공장 등 산업유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관리 및 정비

- 권역 내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및 사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과 온수산업단지의 재생 지원 및 산업인프라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33) 'G밸리'란, '구로구'와 '금천구', 그리고 '구로디지털산업단지'와 '가산디지털산업단지'의 영문 표기 시 공통된 이니셜 'G'와 '밸리(valley)'를 합성시켜 만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별칭(別稱)임.



〈그림 5-5〉 서남권 발전구상

## 5. 동남권

### 1) 발전방향

#### “글로벌 업무·상업기능 강화 및 기존주거지의 계획적 관리”

- 동남권은 1970년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신시가지로서, 비교적 양호한 도시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IT 관련 및 사업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음.
- 한편 1970년대 이후 대량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재건축 수요가 비슷한 시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노후공동주택단지의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은 기존의 양호한 도시생활환경 및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향후 동남권은 업무·상업중심지로의 지속적인 성장과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의 유지·강화를 위해 “글로벌 업무·상업기능 강화 및 기존주거지의 계획적 관리”를 발전방향으로 설정함.

### 2) 분야별 계획과제

#### 중심지·일자리

##### 강남·삼성, 국제업무 및 MICE산업 중심지로 육성

- 강남은 기존 강남역 주변으로 집적된 중심기능과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발달된 업무 및 상업기능을 고도화하여 국제적 중심지로 육성을 유도함. 특히 삼성역 주변의 한전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등 대규모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국제 업무기능을 집적하고, COEX, SETEC 일대를 잠실종합운동장과 연계하여 MICE산업 강화 및 인프라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국제업무 중심지로 특화·육성함.

##### 잠실, 국제적 업무·관광기반 구축

- 잠실 광역중심은 강남 도심과 연계를 통해 관광·여가·쇼핑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강남 도심의 국제업무 기능을 보완함.

### 수서·문정,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

- 수서·문정 지역중심은 문정·장지와 KTX수서역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정지구를 활용하여 업무·R&D·생산·물류기능 등이 복합된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하도록 함.

## 주거지 관리 및 개선

### 단독 및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특성별 관리

- 동남권 기성 시가지 내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저밀의 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함. 또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고층·고밀 아파트 위주의 개발 보다는 이면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확충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 등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구릉지 및 저지대 수해, 산사태 등 재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상업지역과 인접한 일부 주거지역은 상업·업무 등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용도혼재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대단위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계획적 정비 유도

- 동남권은 1970년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형태로 주택단지가 조성된 지역이 많아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수 있음. 따라서 정비사업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철거형 정비사업 등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시기조절을 위해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방안 및 다양한 정비방식을 개발하도록 함.

### 수변 네트워크와 연계한 주거지 관리

- 한강변 및 탄천변, 양재천변 등 지천변 주거지에 대해 수변네트워크와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통경축 및 접근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교통체계 개선

### 교통수요관리 강화

- 주차수요관리 강화, 주행거리 기반 혼잡요금제도 도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구역(LEZ : Low Emission Zone) 설정 등을 통해 승용차 통행수요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기존 차도의 축소를 통해 보도와 자전거도로 등을 확충함.

###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한 교통체계 구축

- 동남권은 성남·용인·광주 등 동남권 인근 도시들의 광역통행 수요에 대응하고,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에 대응하여 KTX, 위례신사선, 위례신도시 트램, 지하철 9호선 연장, 과천~송파 간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추진함.
- 또한 강일지역 대규모 도시공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편익증진,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철 9호선 추가 연장을 검토함.
- 특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및 남부급행철도 추진 등을 통해 한양도성-강남-영등포·여의도를 연결하는 급행 간선 철도망을 구축함.

## 생활기반

### 한강~탄천~양재천 중심 수변네트워크 조성

- 잠실, 천호·암사지역 등 한강 수변공간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함. 탄천, 양재천 등 지천의 친수공간 조성 및 주요 지천과 연계한 수변네트워크 조성을 추진함.

## 지역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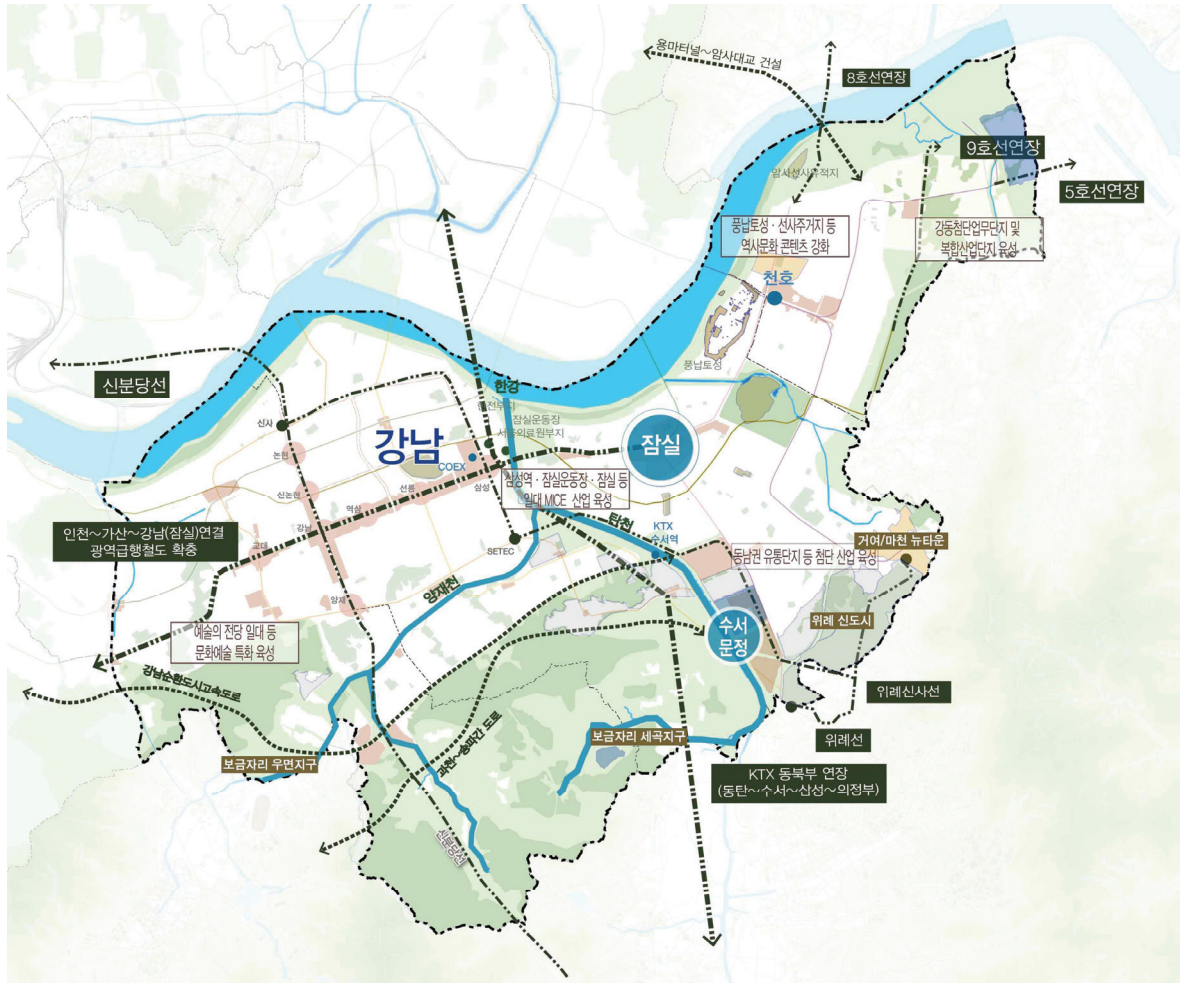
### MICE산업 및 첨단산업 특화 육성

- 삼성역·잠실종합운동장, 잠실 등을 중심으로 MICE산업 특화·육성을 통해 글로벌 업무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강동구 첨단업무단지, 복합산업단지, 동남권유통단지 등 첨단산업 특화를 통한 권역 내 고용기반을 강화하도록 함.



### 권역 내 역사문화 콘텐츠 강화

-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풍납토성, 몽촌토성, 암사동 선사주거지 등 서울의 2천년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유적지들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정비방안 모색이 필요함.
- 복합예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 일대를 통합적인 예술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예술기능을 특화·육성함.



〈그림 5-6〉 동남권 발전구상







## 제1절 | 계획체계 조정·보완

### 1.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위상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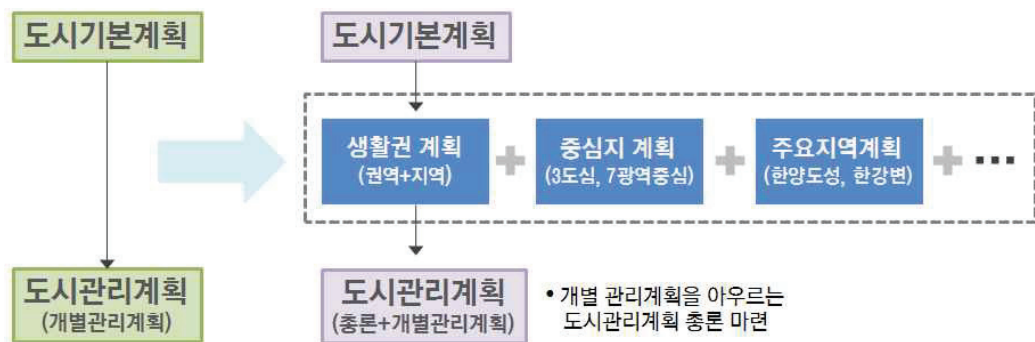
- 도시계획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임.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할 때 시민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바, 이번 계획에서는 서울도시기본계획 최초로 시민이 직접 서울의 미래상을 도출하였음.
- 2030 서울플랜은 서울의 미래를 조망하고 실현해 나가려는 모든 노력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2030 서울플랜은 복지, 경제, 교통, 환경, 문화, 재정, 교육, 주택, 방재 등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모든 계획을 포괄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위상을 갖게 됨. 또한 모든 하위 계획은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라는 서울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2030 서울플랜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

### 2. 생활권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역할 강화

- 도시기본계획은 지금까지 그 성격상 개념적이고 추상적일 수 밖에 없어 도시관리계획처럼 구체적으로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는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더욱이 서울은 인구 천만의 거대도시로 지역별로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들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계획과 정책만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인구, 고용, 산업, 공간구조, 토지이용, 생활환경 등 권역별로 다양한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성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30 서울플랜의 공간구조 구상, 핵심이슈별 계획, 권역별 구상 등 지역별 특성에 기초하여 구체화하는 한편, 지역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담아내는 후속 생활권계획을 수립함.
- 생활권계획은 2030 서울플랜의 권역별구상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권역별 실정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갖도록 하며,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위계획의 위상을 갖도록 함.
- 아울러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수립 방향 및 운영원칙 등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총론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종합적 도시관리계획의 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함.

### 3. 중요지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

- 2030 서울플랜이 도시의 미래상과 미래상 달성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의 정체성 강화 및 전략적 중심기능 강화 등을 위해 한양도성, 한강변, 용산공원 주변, 주요 중심지 등 중요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계획이 추가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한강이나 한양도성은 모든 서울 시민들의 휴식·여가공간이자 삶의 터전으로 서울 시민 모두가 향유해야 하는 공동의 자산임. 따라서 미래 세대에게도 이러한 권리를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한강과 한양도성은 체계적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시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계획실현이 반드시 요구됨. 또한, 서울의 중심지체계 변화(1도심 5부도심 → 3도심 7광역중심)에 따라 중심지 육성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특히, 이들 계획은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구성하는 필수 계획들로, 일회성 계획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그림 6-1> 도시기본계획 실현체계 강화

## 제2절 |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 1. 계획 모니터링의 필요성

- 2030 서울플랜이 서울시 모든 계획에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그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계획의 실현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따라서 이번 계획에서는 계획의 실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 환경, 주택 등 급변하는 도시여건 변화에 대한 상시 진단을 통해 계획의 환류기반을 구축하고, 이러한 상시 계획체계 구축을 통해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적시성을 보완함.
-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5~6년이 소요되었으나<sup>34)</sup>, 향후 매년 작성될 모니터링 보고서는 5년 단위의 '서울플랜' 재정비 시 검토·반영할 근거자료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적시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2.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계획지표 모니터링을 통한 계획의 실현과정 평가

- 2030 서울플랜의 목표, 전략 등의 실현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함. 이들 지표는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의 토대가 되며, 향후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서울시에 적합한 계획지표 체계로 정교화시켜 나가야 함.
- 계획지표는 우선 5개 핵심이슈별로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 17개를 선정, 관리함.

34)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6년, 2030 도시기본계획은 5년이 소요되었음.

〈표 6-1〉 핵심이슈별 주요지표

구분	계획지표	2013	2030	담당부서	자료출처	비고(기준연도)
핵심이슈 1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	48%	100%	복지정책과	서울시민 복지기준(2012)	2013년
	지역 공공보건기관수 (인구 10만명 기준)	0.5	1.2	보건의료정책과	부서 내부자료	2013년
	노인여가복지시설수 (60세이상 노인 천명 기준)	2.3	10	어르신복지과	통계청(2012)	2012년
	평생교육 경험률	35%	70%	평생교육과	서울서베이 (2012)	2011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	11%	35%	출산육아담당관	부서 내부자료	2013년
핵심이슈 2	창조계층 비율	25%	33%	경제정책과	인구총조사 사업체총조사	2010년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사회적 경제 일자리 비율	1.6%	15%	사회적경제과	부서 내부자료	2013년
	고용률 (15세 이상 65세 미만 기준)	65%	75%	일자리정책과	경제활동 인구조사(2012)	2012년
핵심이슈 3	문화환경 만족도	65	90	문화정책과	서울서베이 (2012)	2012년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문화기반시설수 (인구 10만명 기준)	2.8	4.5	문화정책과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	2011년
	외국인 관광객수	800만명	2,000만명	관광정책과	2012외래관광객 실태조사	2011년
핵심이슈 4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비율	4.6%	0%	공원녹지정책과	부서 내부자료	2011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	30%	녹색에너지과	부서 내부자료	2011년
	재난 인명피해자 증감률	-	-20%	도시안전과	부서 내부자료	-
핵심이슈 5	직주균형지수 (권역별 최소치, 동북권)	71	90	도시계획과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국토교통부)	2010년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	녹색교통수단 분담률	70%	80%	교통정책과	서울교통비전 2030	2010년
	공공임대주택 비율	5%	12%	임대주택과	서울시민 복지기준(2012)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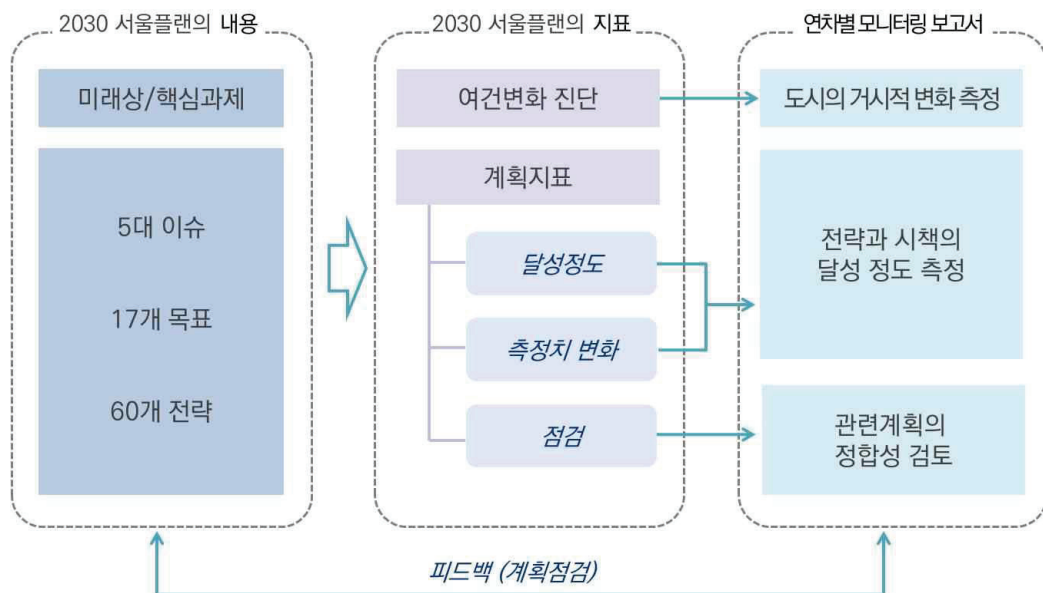


### 시정 부문별계획의 정합성 검토

- 명실상부한 서울시 최상위 계획으로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각종 부문별계획은 2030 서울플랜과의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서울 시정이 일관된 방향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이를 위해 2030 서울플랜 수립 이후 살·국본부별 중·장기계획 수립 시에는 2030 서울플랜과의 정합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함.
- 사전 검토 대상이 되는 부문별 중장기계획은 법정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계획범위가 장기인 비법정계획도 검토대상에 포함하며,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2030 서울플랜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부문별 계획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함.

### 도시변화, 계획여건 변화 진단

- 모니터링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임.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needs)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세계 대도시의 계획 트렌드, 서울의 도시변화 진단, 시민의 요구 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와 함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DB구축을 통해 계획의 보완 및 발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



〈그림 6-2〉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과 환류과정

### 3. 모니터링 방안

####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의 발간 및 공개

- 모니터링 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계획지표 분석을 통해 2030 서울플랜의 목표 및 전략의 달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창구이자 시민과 전문가, 행정의 도시여건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판단의 근거로서 역할을 하게 됨.
- 급격한 여건의 변화와 복합적인 변화요인으로 인해 도시를 둘러싼 정책판단에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도시모니터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및 공개를 통한 2030 서울플랜의 평가는 정책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큼.



〈그림 6-3〉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및 공개

#### 모니터링 추진체계

-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 전문가, 서울시,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주체들 간 협력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에는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부문별 계획과 2030 서울플랜 간 정합성 사전검토, 그리고 모니터링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함. 서울연구원에 구성된 전담팀이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평가지표의 보완·개발, 상시 도시변화 진단,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함. 또한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서울플랜 시민참여단과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및 시민의 계획 모니터링 과정 참여방안을 강구함.

## 제3절 |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강화

### 1. 시민참여와 소통체계 강화

- 이번 2030 서울플랜은 다양한 구성원의 실질적 참여에 기반을 두어 수립한 최초의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시민참여단’이 서울의 미래상을 직접 도출하였고, 계획(안)의 구체적인 작성도 시민,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서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가 주도하였음.
- 계획 수립과정뿐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 실현과정, 후속 계획의 수립에도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지속됨. 앞으로 서울의 각종 계획은 시민, 전문가 등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동안은 법정 절차로서 계획안 마련 이후 공청회나 열람공고 등 제한적인 방법으로 참여 기회가 부여되어 계획 실현과정에서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
- 따라서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수립될 생활권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소생활권) 단위까지 주민참여단 등을 구성, 운영하는 등 실질적 시민참여에 기반을 둔 상향식 계획이 되도록 함.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계획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도시계획 학교’ 등 시민이 계획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및 과정을 마련하고, 시민 스스로 계획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모색함.

### 2. 광역적 협력 거버넌스 강화

- 이제 대도시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도시권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임. 서울·인천·경기는 이미 글로벌단위의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3개 시·도 간 긴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 앞으로 서울은 주변 수도권과의 공간적·기능적 연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임. 서울만의 노력으로 2030 서울플랜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서울 인접 수도권 시·도의 경우에도 서울과의 협력이 상생발전의 기반이 될 것임.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은 향후에도 수도권과 우리나라 전체의 상생을 추구해나가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인접 도시와 소통하고 배려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 상설 광역계획기구의 설치와 새로운 광역거버넌스의 도입

- 수도권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도시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실질적 협력방안은 여전히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임.
- 현재 수도권 단위에서 수립되는 계획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존재함. 그러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이외에 실효성 있는 수도권차원의 계획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고, 수도권정비계획도 서울지역 등의 과밀억제를 계획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현재 수도권 전체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수도권교통본부, 특별행정기관 등 광역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은 예산부족, 집행력의 한계, 결정권한 미비 등으로 인하여 3개 시·도간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 역할이 미약함. 보다 통합적이고 전면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수도권광역계획기구(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를 설립, 광역도시권(수도권) 차원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울과 인접지역을 포함한 광역대도시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대한 단일생활권으로서 이에 대한 계획적인 성장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됨. 향후 서울, 경기, 인천은 출·퇴근 통행패턴, 자치단체의 자족기능, 주거이동,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수요의 정도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대도시권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제안함.
- 광역대도시권에 포함된 시·군·구는 독립된 별도의 관리 및 행정집행력을 갖춘 기구를 구성하여 대도시권 차원의 이슈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광역계획기구의 설치 시 과거 중앙정부의 일방적 계획체제를 수도권 광역지자체와 시민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을 구축하도록 함. 이를 통하여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함.



〈그림 6-4〉 계획별 관련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 제4절 | 자원 투입의 원칙과 방향

### 1. 자원 투입의 원칙

- 이번 2030 서울플랜은 향후 서울시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전략계획의 성격을 강화하였음. 2030 서울플랜상의 미래상과 핵심이슈별 계획, 공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전략, 과제 등의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재원이 적절한 시기와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재원투입의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한 재원투입의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서울시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과 핵심이슈, 공간관리 정책방향을 달성목표에 따라 시기별로 구분하고 실현전략을 단계적으로 제시함.
- 둘째,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그리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중장기 시책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함.
- 셋째, 연차별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략과 시책의 재원투입 규모와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나감.

### 2. 단계별 실현전략

- 2030 서울플랜에서 서울시가 추구하는 핵심이슈는 다섯 가지임. 이 이슈들은 모두 동일한 위계로 중요하게 다루되, 중·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슈를 구분해야 함.
- 우선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는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도시의 구축임. 첨단산업의 육성, 일자리 창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목표는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급한 정책임.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폭설 등은 이미 서울시민들의 일상의 삶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중히 달성해야 할 과제는 주거 및 복지문제, 낙후지역의 활성화, 역사문화가치의 제고 등이 있음. 서울시의 주거문제와 낙후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수많은 역사적인 도시조직과 건전한 커뮤니티들이 훼손되었음. 따라서 이제부터는 긴 호흡을 가지고 물리적인 외형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함. 또한 서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도 단기간에 포장되는 서울의 역사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재조명을 통해 서울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야 할 가치는 도시의 생태환경 보존 및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의 구축임. 지속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향후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현재 우리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3.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수많은 정책에 대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은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이미 시행중인 주요 사업, 필요성에 따라 제시된 정책이지만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및 구체화 되지 않은 구상단계의 계획 등의 유형에 따라 구분함.
- 계획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서울플랜의 전략과 시책 중에서 관련 법정계획 및 시정계획과 정합성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시책에 우선적으로 배분함. 또한 서울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이미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배분함.
- 둘째, 관련 연구에 의해 시책의 시급성과 효과가 검증된 시책에 먼저 배분함. 이에 해당하는 시책의 내용은 법정계획 또는 시정계획에 포함시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바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음.
- 셋째, 서울플랜의 내용 중,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거나 필요성만을 언급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책임. 이러한 시책은 관련 법정 또는 비법정 계획에 반영하거나, 관련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들을 수립한 뒤 실행함.







## □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명단 (100명)

NO	이름	성별	자치구	NO	이름	성별	자치구
1	강현이	여	동대문구	26	민석규	남	동작구
2	권미성	여	관악구	27	박광연	남	관악구
3	권미자	여	종로구	28	박미정	여	마포구
4	김경엽	남	송파구	29	박상준	남	강북구
5	김남석	남	도봉구	30	박응규	남	동작구
6	김동식	남	중랑구	31	박장우	남	종로구
7	김민지	여	노원구	32	박종배	남	금천구
8	김봉철	남	성북구	33	배기순	여	용산구
9	김상규	남	강동구	34	배노을	남	강동구
10	김선미	여	강북구	35	배진옥	여	성북구
11	김세용	남	마포구	36	백민주	여	성동구
12	김송실	여	강동구	37	서경석	여	강북구
13	김순희	여	노원구	38	서순희	여	중랑구
14	김연자	여	강북구	39	서주원	남	강동구
15	김영무	남	송파구	40	서청	여	서대문구
16	김영환	남	강서구	41	소순동	남	양천구
17	김은주	여	영등포구	42	손우진	남	노원구
18	김진용	남	강서구	43	송명미	여	노원구
19	김춘화	여	강동구	44	송수진	여	광진구
20	김태균	남	강북구	45	송애순	여	양천구
21	김형태	남	강서구	46	송원길	남	중랑구
22	김희자	여	동대문구	47	신경용	남	강동구
23	꾸미르 부산	남	성북구	48	신순덕	여	성동구
24	나옥성	남	동작구	49	신승경	여	성북구
25	문희경	여	은평구	50	신일식	남	중랑구

NO	이름	성별	자치구	NO	이름	성별	자치구
51	신희경	여	중랑구	76	이종신	남	강서구
52	안경용	남	성북구	77	이태곤	남	강서구
53	안영준	남	성동구	78	임선정	여	서초구
54	안영진	여	서초구	79	임의영	여	중구
55	양영희	여	중랑구	80	임홍택	남	양천구
56	오승덕	여	노원구	81	정나라	여	강북구
57	오영란	여	서초구	82	정노라	여	마포구
58	오예리	여	노원구	83	정만권	남	도봉구
59	오준원	남	송파구	84	정숙자	여	강동구
60	왕종승	남	강남구	85	정은영	여	마포구
61	유재황	남	금천구	86	조민영	여	영등포구
62	유재훈	남	강동구	87	조수민	여	강남구
63	윤순중	여	강동구	88	주영익	남	송파구
64	윤윤기	남	강동구	89	채강석	남	중구
65	윤재기	남	서대문구	90	최성원	남	용산구
66	윤철상	남	동대문구	91	최영희	여	송파구
67	이경옥	여	성북구	92	최종서	남	강북구
68	이경옥	남	은평구	93	최현순	여	동작구
69	이나라	여	서대문구	94	최환이	남	서대문구
70	이래형	남	마포구	95	한경희	여	강서구
71	이보옥	여	강남구	96	한정수	남	서초구
72	이열환	남	금천구	97	허민	남	중구
73	이영주	여	은평구	98	허정선	여	용산구
74	이용자	여	노원구	99	허정애	여	양천구
75	이정진	여	강남구	100	황해리	여	용산구

## □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명단 (108명)

연번	분과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1		공동위원장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상범
2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병하, 문승국(전)
3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	권원용
4	총괄 조정 분과 (11명)	전문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	권원용 (총괄MP)
5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 선 (분과MP)
6			산업연구원 지역산업	팀장	김영수 (분과MP)
7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기호 (분과MP)
8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윤명오 (분과MP)
9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최막중 (분과MP)
10		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강희용
1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박진형
12		서울시	기획조정실	실장	정효성
13			도시계획국	국장	이제원
14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김인희
15	복지 교육 여성 분과 (19명)	전문가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 선 (MP)
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김정열
17			한국 YMCA	사무총장	남부원
18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조명래
19			한국도시사회연구소	소장	홍인옥
20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영희
21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	정춘숙
22		시민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대표	황인한
23			좋은배설문화 실천운동본부	대표	심화식
24			서울흥사단 청소년 사업부	팀장	전찬혁
25			굿잡자립생활센터	실장	강현욱
26			송이어린이집	원장	이송미
27			KYC한국청년연합	체인지리더	허선우
28		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상현
29		서울시	복지건강실	실장	강종필, 김경호(전)
30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조현옥
31			교육협력국	국장	안준호, 신용목(전)
32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경혜
33				연구위원	이혜숙

연번	분과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34	산업 일자리 분과 (20명)	전문가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	팀장	김영수 (MP)
35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강명구
36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변창흠
37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	전병유
38			서울 청년일자리 허브센터	센터장	전효관
39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병민
4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항자
41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갑성
42		시민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
43			제이랩	대표	김준성
44			(주)바우컨설턴트	직원	강성오
45			(사)한국부동산산업진흥원	대표	현경화
46			엔디엔뉴스	기자	양준희
47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학생	김성환
48		시의원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박양숙
49		서울시	경제진흥실	실장	최동윤, 권혁소(전)
5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본부장	한문철
51			정보화기획단	단장	김경서, 황종성(전)
52			도시계획국	국장	이제원
53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김목한
54	역사 문화 분과 (22명)	전문가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기호 (MP)
55			(사)문화세상 이프토피아	고문	박옥희
56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송인호
57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전상인
58			도시연대	사무처장	김은희
59			(주)지담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림
60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정 석
61		시민	서울시사회복지법인 은초록	관장	김택진
62			북스타트	대표	이형숙
6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강사	박금수
64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대표	배은주
65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학생	박용화
66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생	기명성
67		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김태희
68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본부장	한문철
69			주택정책실	실장	이건기
70			서울혁신기획관	기획관	조인동
71			도시계획국	국장	이제원
72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위원	라도삼
73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임희지
74				연구위원	이성창
75				선임연구위원	박현찬

연번	분과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76	환경 에너지 안전 분과 (23명)	전문가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윤명오 (MP)
77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오충현
78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창근
79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윤선화
80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손의영
81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세걸
82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김세용
83			서울대 환경대학원(조경)	교수	조경진
84		시민	국제환경교육연구소	소장	최석진
85			행복한 약속니눔	대표	이대표
86			서울그린트러스트	활동가	신근혜
87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	윤두선
88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	표혜령
89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생	장 진
90		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91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임옥기
92			도시안전실	실장	김병하(전)
93			푸른도시국	국장	최광빈
94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경호, 최동윤(전)
95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권순경, 조성원(전)
96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조항문
97				연구위원	김원주
98				연구위원	신상영
99	도시공간 교통 정비 분과 (23명)	전문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최막중 (MP)
100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	운영태
101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민만기
102			서울대 환경대학원(교통)	교수	장수은
103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김현수
104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무
105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구자훈
106		시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이경희
107			동화개발주식회사	회장	이순억
108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	황기룡
109			서울시장장애인사이클연맹	이사	이상곤
110			(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회장	강은성
111			경기대 대학원	학생	구민근
112		서울시	도시계획국	국장	이제원
113			주택정책실	실장	이건기
114			도시교통본부	본부장	윤준병
115			도시안전실	실장	김병하(전)
116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한국영, 최임광(전)
117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장남중
118				연구위원	박은철
119				연구위원	맹다미
120			도시정보센터	연구위원	김상일
121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고준호

## □ 서울도시기본계획자문단 명단 (33명)

연번	전문분야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도시설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 수	김기호	자문단장
2	도시계획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	권원용	총괄MP
3	사회학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 수	김환석	시민참여지원 분과 MP
4	시민사회	한국 YMCA	사무총장	남부원	시민참여지원 분과 MP
5	도시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 장	최막중	
6	도시계획 · 마을만들기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 수	정 석	
7	건축 · 마을만들기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 수	김세용	
8	부동산 · 주택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 수	변창흠	
9	주택 · 도시재생	한국도시사회 연구소	소 장	홍인옥	
10	교통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 수	손의영	
11	교통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민만기	
12	환경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세걸	
13	환경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 수	오충현	
14	토목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 수	박창근	
15	경제	한신대 교양교직학부	교 수	전병유	
16	산업클러스터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	팀 장	김영수	
17	복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 사	김정열	
18	여성	젠더 사회연구소	소 장	이숙진	
19	미래학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 수	전상인	
20	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 이로재	대 표	승효상	
21	문화	서울 청년일자리 허브센터	센터장	전효관	
22	역사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 수	송인호	
23	시민사회	도시연대	사무총장	김은희	
24	도시경쟁력, 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향자	
25	문화	(사)문화세상 이프토피아	고 문	박옥희	
26	건축	(주)지담 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이재림	
27	안전방재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 수	윤명오	
28	안전방재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윤선화	
29	시민사회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 수	이영희	
30	도시경쟁력, 관광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 수	이병민	
31	도시계획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 수	조명래	
32	사회복지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 수	허 선	
33	건축	경희대 건축학과	교 수	온영태	

※ 자문단 자문위원, 총괄조정분과 위원, 분과별 서울시 공무원 중 일부는 중복 참여함.

## □ 서울플랜 토론한마당 강연자 (5명)

강연회차	강연자	소 속	직 위
1회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 수
2회	박삼옥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명예교수
3회	박진희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 수
4회	정지훈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 장
5회	최종현	통의도시연구소	소 장

##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오세훈(전)
행정 1부시장		김상범
행정 2부시장		김병하, 문승국(전), 김영걸(전)
기획조정실장		정효성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김병하(전), 송득범(전)
정책기획관		황보연, 정수용(전)
도시관리정책관 / 지역균형정책관(전)		류훈, 남원준(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미래창안담당관(전)	주용태, 황보연(전), 이대현(전)
	담당팀장	김홍진, 장영민(전), 이해선(전)
	담당	표지은, 하동준(전)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한제현, 권기욱(전), 이제원(전), 김준기(전)
	담당팀장	임창수, 최진석(전), 이정화(전), 김학진(전)
	담당	강성필, 김정현, 장양규, 김영희, 심재욱(전), 이기호(전), 김용민(전), 이상면(전), 차창훈(전)
	연구위원	이은중, 김현주, 윤은정, 권미리, 고혜영, 김태현(전)



## □ 서울연구원

원 장		이창현, 김상범(전), 정문건(전)
연구책임		김인희(도시계획연구센터장) , 이주일
분야별 연구진	미래상	이주일, 권영덕, 변미리
	공간구조	김인희, 김상일, 김태현
	생활권계획	양재섭, 이재수
	토지이용	김인희, 김선웅
	도시정비	장남종, 맹다미
	교통 및 물류	고준호, 이신해
	산업·경제	정병순, 김묵한
	주택	박은철, 박현찬
	환경·공원녹지	김원주, 조항문, 김운수
	역사·문화·경관	임희지, 나도삼, 이성창(전)
	복지·교육	김경혜, 이혜숙
	안전·방재	신상영
연구원	총괄·조정	반영권, 정숙영(전)
	미래상	박희락(전)
	조사분석	김희주, 황종아, 이인순, 엄윤성(전), 이서영(전)
	도시공간연구	박중현(전), 오병록(전), 이태영(전), 황하(전)
	연구지원	진은주, 이동은, 조승희
표지디자인		오영욱(오다건축사사무소 대표)